

II. 통일국가 수립운동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II. 통일국가 수립운동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1)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1)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민족적 비극의 단초가 시작되었다. 이는 한반도가 직면한 민족적 과제의 성격이 국제정치의 동학(mechanism)에 의해 외부적으로 규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 한국정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미를 먼저 규명하여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국가간의 식민지 분할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어서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대략 3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1단계는 독일의 유럽 침략,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략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폴란드에 대한 독일의 침공(1939),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선전 포고로 이어진다. 이 단계는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선진 자본주의 제국간에 벌어졌던 ‘제국주의적 성격의 전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2단계는 독일이 사회주의 종주국이던 소련을 침략하고(1941),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선전 포고를 하며, 이와 동시에 소련이 연합국에 합류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련을 축으로 한 식민지 종속국의 ‘반제반파시즘투쟁’ 성격이 부각되는 단계였다.

3단계는 종전이 임박하면서, 식민지 모국과 피식민지간에 등장한 식민지적 모순관계에 의한 ‘반제민족해방전쟁’이라는 성격이 전면에 나타나는 단계였다.¹⁾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제1단계에서 표출되었던 제국주의간 전쟁의 종결만을 의미할 뿐이었고,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제국주의와 민족해방 투쟁의 대립구도는 종전과 함께 더욱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종전 후의 세계질서는, 전쟁 과정에서 주도세력으로 부상한 자본주의 진영의 중심국인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국인 소련을 양대 축으로 전개되는 동서갈등에 의해 규정받게 된다.

그리하여 종전 후의 세계사는 다음과 같은 모순과 그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① 사회구성체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 모순, ②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주의 세계체제간의 모순, ③ 자본주의체제 내의 선진국가와 종속적 제3세계 피압박민족 사이의 모순, ④ 선진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모순, ⑤ 사회주의국가 상호간의 모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순관계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결과된 세계질서는 미·소를 축으로 한 대립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진영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국면에서 자본주의진영을 방어하고 재건하려는 과제에 당면하였고, 이에 대응한 현상정책이 반공주의를 내세운 구질서의 온존과 재건이었다. 이와 함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진영의 부각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대립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 직후 한반도는 이러한 세계사적 모순이 집중적으로 교차되는 곳이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인접국들이 모두 세계사적 대립구조의 중요한 당사자들이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세계사적 모순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형태로 노출되었다.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상시적으로 잠재하는 지역이었으며, 민족의 운명 또한 이러한 세계사적 갈등구조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형성된 두 경쟁적 사회체제로 인하여 전시 연합국회담에서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

1)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소나무, 1992), 25~26쪽.

국의 전후처리에 대한 연합국간의 논의는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Cairo Conference)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에 의해 주도된 한국의 독립절차는 즉각 독립이 아닌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독립이 허용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를 붙여 놓은 상태로 마무리 지어졌다. 루즈벨트는 카이로회담을 마치고 대일전에 참전하겠다는 소련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11월 28일 테헤란에서 스탈린(Joseph V. Stalin)·처칠(Winston L. S. Churchill)과 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도 3거두는 한국문제에 관해서 스탈린이 구두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독립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고 다만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루즈벨트의 구상에 감정적으로 동의한 상태였다. 여기에서 루즈벨트는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 40년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후 1945년 2월 8일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에서는 미·소간의 이해의 사활이 걸린 유럽의 전후 처리문제, 세계평화기구의 문제, 소련의 참전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참전의 조건으로 한국신탁통치안에 관해 스탈린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승인을 받아냈다. 얄타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주둔문제를 거듭 주장하는 소련측에 대해 미국측은 외국군 없는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전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마지막 회담이었던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로운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카이로선언이 재확인되는 수준으로 끝맺었다.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안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그 회담 전후에 미합동참모부는 미군의 한반도 진입은 비록 38도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서울을 비롯한 전략적 요지인 인천·군산·부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었다. 이는 소련군의 한반도 진입을 예상한 포석이었으며 또한 4대국 신탁통치를 고려하여 소련군은 청진·나진·원산에 진주하고, 미국군은 서울·인천·부산에, 영국군은 군산과 제주도에, 그리고 중국군은 평양에 주둔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서울은 베를린과 같이 4개 연합국이 합동주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²⁾

이와 같은 내용은 일차적으로 알타체제의 핵심이며 또한 4개국 신탁통치 구상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8월 8일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9일 옹기를 폭격하고 경흥으로 진공하여, 13일에는 청진으로 진격하였다.³⁾

이처럼 소련군이 시급히 진격함에 따라 미국의 트루만(Harry S. Truman)은 미국의 책임지역내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시켜 38도선에서 분단키로 결정하고, 8월 13일 영국과 소련 및 중국에 전달하였으며, 이것이 수락되자 8월 15일 일반명령 1호가 태평양지역 최고사령부에 전달되었고, 이것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은 9월 2일 남한에 선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해방과 분단은 국제적 의미에서 결정지어졌고 한국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없이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은 한민족에게는 현대사의 始點이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라는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립적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의 1차적 과제는 민족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해방된 국가에 어떠한 외세도 간섭할 수 없는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봉건체제에서 식민지 상태로 빠져든 상황에서 민족자주국가의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과제였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주권을 본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현대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세 번째는 자주적인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는 일이었다. 식민지 종속경제를 탈피하여 반봉건적 지주소작제를 철폐함으로써 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토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에 동조한 친일파·부일세력을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당면과제는 해방을 스스로 쟁취하지 못한 데다 해방정국을 이끌 주도세력의 부재로 대부분이 미해결의 과제로 넘겨지고 말았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정일, 《분단과 미군정》—한국현대정치사 1(실천문학사, 1989), 24~26쪽을 참조할 것.

3)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박영사, 1976), 20~21쪽.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이 한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세계사적으로 전개된 갈등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부터 재조명되어야 한다. 해방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⁴⁾

첫째, 주어진 해방론이다. 이 이론은 해방의 직접적 원인이 미·소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이며, 연합국이 일제를 패망시킴에 따라 한민족에게 해방이 주어졌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해방은 연합군이 한민족에게 준 ‘조건부 선물’이며, 따라서 해방 후 국가수립 과정에서 외세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한민족의 해방이 미·소연합국의 힘에 의해 국제적으로 규정된다는 결정론적 견해이며, 해방 직후 대부분의 우익 정치세력과 朴憲永이 주도한 조선공산당도 한동안 인정하였던 입장이다. 현재의 남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설로서 타율적·수동적 해방론을 의미한다.

둘째, 자율적 해방론이다. 이 이론은 북한에서 등장하였다. 이것은 한민족의 해방을 ‘싸워서 쟁취한 해방’으로 규정하며, 싸움의 주체를 항일무장투쟁세력으로 본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 북한학계는 김일성이 소련군의 일원으로 해방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는 ‘조선혁명군’이 별도의 자주적인 부대를 편성하여 소련군과 ‘ 제휴’하여 해방작전에 참여하였다는 ‘동반해방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1975년에 와서 북한학계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개시 후 1주일 만에 일본제국주의는 무조건 항복했다”는 ‘조국자주해방론’ 즉 쟁취한 해방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의 취약점은 이와 관련한 북한학계의 주장이 시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사실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다.

셋째, 복합적 외인론이다. 이 이론은 타율적 해방론과 자율적 해방론을 절충한 것으로 ‘해방에의 자주적 기여론’ 또는 ‘해방준비론’으로도 불리운다. 이것은 내인론과 외인론을 상호결합한 것이다. 이 이론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독립운동이 해방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국내외의 독립운동이 해방에 대해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4) 이완범, <해방 3년사의 쟁점>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89), 78~81쪽.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연합국의 기여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방의 主因은 연합국의 승리였지만 한민족 스스로 전개한 독립투쟁도, 부차적이긴 하지만, 해방을 성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었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남한내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객관적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려는 외국의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와는 달리, 1945년 8월 15일 이후 전개된 남한의 역사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해방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주어진 해방론’이나 ‘복합적 외인론’은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을 일단의 일체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이론들은 외세에 의해 해방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수립되어 광복을 이룩했으며 그후 자주적으로 한국사회가 발전되고 있으므로,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본질적 해방’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한 내의 전통적인 보수적 시각을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수정주의자들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방은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외세의 개입으로 통일과 자주화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본다. 수정주의자들의 입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통일국가의 수립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그리하여 1945년의 해방을 ‘분단시대의 기점으로서 불완전한 해방’으로 보는 설이다. 다른 이론은 현재의 남한은 자주성이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이 부정되었다는, ‘부정된 해방론’으로, 남한의 정치상황을 지배자만 교체되었을 뿐 1945년 이후에도 식민지성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고 본다.

해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든,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의 패망으로 한민족은 새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일체의 가혹한 수탈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었으며, 매관자본가의 착취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해방은 전근대적인 제도를 척결하는 반봉건적 혁명을 의미했다. 나아가 해방은 일제잔재의 소탕과 친일파의 처단을 의미했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장애가 이러한 꿈의 실현

을 가로막고 있었다.

(2) 해방정국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

해방이 되자 일제의 탄압으로 그동안 금지당했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정책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없었던 한민족은 해방으로 정치공간이 열리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이념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 정치활동을 전개한 주요 정치세력으로는 金性洙·宋鎮禹를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주의 세력, 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세력,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 기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해방과 함께 해외 즉 중국·소련·미국으로부터 입국한 정치세력과 이합집산하면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이들 정치세력 상호간에는 국가건설의 기본방침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립하고 투쟁하였다. 여기에 외적 요인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매개변수가 작용하여 갈등은 한층 더 극대화되었다. 이들 중에서 해방과 함께 가장 먼저 조직화된 것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建國準備委員會였다.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지만, 대다수 민족지도자들은 민족해방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관망 상태에 있었다. 이는 일제의 가혹한 사상 탄압과 보도 통제로 인하여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사들까지도 정세의 변화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운형이 해방정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통치하에서 그가 전개한 활발한 활동과 무관하지 않지만, 해방 1년 전에 그가 비밀리에 결성한 朝鮮建國同盟 때문이었다.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 8월에 여운형·趙東祐 등이 조직하였는데, 뒤에 李如星·金世鎔·李萬珪·李相佰 등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 상당수의 조직원을 갖고 있었다.⁵⁾

태평양전쟁에서의 참패와 원폭투하 소식을 접하면서 항복이 임박해지자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의 안전귀국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5) 홍인숙,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7), 57~71쪽.

우호적이었던 송진우에게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송진우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만이 통치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총독부당국은 여운형에게 이를 다시 요청하였다. 총독부가 자신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여운형에게 항복 후의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은 여운형이 조선의 청년·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항복이 공표되었을 때, 조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여운형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총독부 관리들은 판단하였다.

8월 15일 아침,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로부터 일본 패망 후 치안권과 행정권을 위촉받은 여운형은 ①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②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③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④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등 5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였다.⁶⁾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총독부는 여운형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여운형은 즉각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여운형과 그의 측근 인사들은 8월 15일 오후에 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17일에 여운형을 위원장, 安在鴻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완료하였다. 이어 8월 26일에는 건국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언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선언의 요지는, “건국준비위원회는 한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준비기관이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각 계층의 인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기관으로, 반동적 반민주세력과 투쟁하여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둘째,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6) 이만규, 《여운형선생 투쟁사》(충문각, 1946), 188쪽.

있는 민주주의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셋째,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⁷⁾

여운형은 해방 전에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제의 항복 직후 석방된 정치범과 민족주의자들과 더불어 건국을 준비해 나갔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히 확산되자,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정비하였다. 8월 31일, 건국준비위원회는 12부 1국의 체제를 갖추어 준정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⁸⁾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은 지방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8월 말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전국적으로 145개에 이르렀다.⁹⁾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해 준비하는 과도적 조직체임을 표방하고, 반민족적·반민주적 세력을 제외한 전 민족의 통일체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세력(한민당 계열)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세력(조선공산당 계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나 균등의 원칙을 존중한 중도 우파세력(안재홍의 국민당계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지향하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부정하는 중도 좌파세력(여운형의 인민당 계열)”을 모두 참여시켰다. 여운형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정치세력들을 한 곳으로 규합함으로써, 국가건설을 위한 좌우균형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다.¹⁰⁾

이러한 의도에 따라 건국준비위원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초기의 조직이 급박한 상황에서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면, 중기의 조직은 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 되었으며, 후기의 조직은 미군의 진주가 임박해지고 우익세력들이 점차 세력을 규합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건국준비위원회

7) 송남헌, 《한국현대정치사》 제1권 : 건국전야(성문각, 1980), 71~72쪽.

8)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격과 일제하의 활동경력에 대해서는 홍인숙의 앞의 글을 참조할 것.

9)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에 관해서는 안종철, 《광주 전남 지방현대사 연구》(한울출판사, 1991)을 참조할 것.

10)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구성원들의 해방 이전의 활동경력이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홍인숙, 앞의 글 및 전용현, 〈해방이후 좌파세력의 정치조직과 정치노선〉(《한국현대정치론》 1, 나남, 1990)을 참조할 것.

조직에서 탈퇴함에 따라 보다 좌익적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인사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였지만 조직적 측면에서는 12부 1국이라는 상당히 체계화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영향력은 확대·강화되었으나, 전국유지자대회의 문제, 건국준비위원회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에서 여운형과 안재홍간에 견해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간부들이 조직의 방침과는 다르게 독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내의 분열을 초래하였고,¹¹⁾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국민들의 여망이었던 건국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국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4일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3차 조직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여운형, 박문규
 부위원장 : 안재홍¹²⁾, 許憲
 총무부 : 崔謹愚, 全奎弘
 조직부 : 李康國, 李相燾
 안전부 : 이여성, 梁在廈
 치안부 : 崔容達, 劉錫鉉, 鄭宜植, 張權, 李丙學
 문화부 : 咸秉業, 李鍾洙
 건설부 : 尹亨洙, 朴容七
 조사부 : 崔益翰, 高景欽
 양정부 : 李珖, 李貞求
 후생부 : 鄭求忠, 李圭鳳
 재정부 : 金世鎔, 吳載一
 교통부 : 金炯善, 權泰集
 기획부 : 朴文圭, 李舜根
 서기국 : 崔星煥, 鄭處默, 鄭和濬

그러나 여운형의 이와 같은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정치

11) 송남현, 앞의 책, 73~74쪽 참조.

12) 안재홍은 명목상의 부위원장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사퇴한 형편이었다.

세력간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출되고 증폭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가속화되었다. 일제의 항복 직후 정세를 관망하던 우익세력들은 점차 결집하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일사불란해 보이던 건국준비위원회는 내부적 균열을 겪게 되었다. 안재홍 등 우익세력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초계급적 협조정신으로 명실상부한 과도기적 기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경화되어 간다”며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이렇게 되자, 초기와는 달리 좌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결국 조선공산당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3)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좌절

9월 초 미군의 진주가 임박하자, 건국준비위원회 내에는 미군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군정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부로서 대처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6일 경기여고에서 1천 300백여 명의 인민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운형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임시정부조직법을 가결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朝鮮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정강과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1.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기한다.
2.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제도를 즉각 철폐한다.
3. 일본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4. 일본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들의 공장·광산·철도·항만·선박·통신 그밖의 모든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
5.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6.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만 14세 이하의 유년노동을 금지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한다.
7.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우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시한다.

(정일준, 〈해방직후 분단국가 형성에 관한 일고찰〉,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의 형성과 사회운동》, 창작과 비평사, 1990, 128쪽)

이 밖에도 18세 이상의 남녀에 대한 선거권 부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 최저임금제, 실업 방지, 강제공출제 철폐, 의무교육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중요 산업기관의 국유화 등이 사회주의정책이라 하여 우익세력의 반발을 샀으나, 우익 민족주의단체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독립운동단체들도 해방 전 토지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인민공화국의 정강과 시정내용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온건한 내용들이었으며, 특히 토지관련 정책은 농민들로 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선언문과 강령, 그리고 정책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방침 등으로 볼 때 조선인민공화국의 조직성격은 좌파지향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래 세력에 대해 철저한 투쟁을 한다는 내용, 노동자·농민의 생활향상, 세계 민주주의 국가와의 국제평화주의 등의 내용을 들면서 좌파지향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¹³⁾

조선인민공화국이 건국준비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급속도로 조직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먼저 미군정 실시에 직면한 여운형과 박헌영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해방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요성에서였다. 특히 좌파세력은 형식적이라도 국내 각계 각층의 사회세력들이 참여하는 정치세력들을 만들어 미군정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주도권을 장악하여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즉 미군정을 이용하여 좌파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둘째,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정치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당시 해방정국에서 중경의 임시정부가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李承晩을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한 것도 민중과 미군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동시에 중경의 임시정부보다 우월한 지지를 확보하여 먼저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¹⁴⁾

인민대표자대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 55명, 후보위원 20명, 고문

13) 전용현, 앞의 글, 163쪽.

14) 전용현, 위의 글, 162~163쪽.

12명을 선출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지도부 구성은 좌익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좌우익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부서장으로 선임된 인사들 가운데 우익은 모두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좌익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주도하게 되었다.¹⁵⁾ 이러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대해 벽보내각이나 좌파조직이라는 비난이 대두되자, 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오늘날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함에 있어 구태여 빗장을 문제삼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모두가 협력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그 만이 아니겠느냐 … 조선인민공화국이라면 적색으로 아는 사람은 소학교 1학년과 같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갈라지면 넘어지고 뭉치면 일어난다. 한민당·국민당·건국준비위원회 등이 손을 잡고 국민 총력을 집결해야 하며 이것을 인민대중은 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대주의 배외사상은 절대로 배격해야 한다.

여운형은 국가 건설을 위해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여운형은 먼저 국내의 혁명동지를 규합·단결하여, 국가건설을 준비하고, 해외 혁명동지들이 입국하면 이들과 함께 혼연 일체의 과도정권을 세우려 하였다.

여운형의 이러한 복안에도 불구하고, 주석으로 선출된 이승만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우익인사들은 조선인민공화국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아놀드(Archibald V. Arnold) 군정장관과 하지(John R. Hodge) 미군사령관은 10월 10일과 16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였다. 이들은 “미군정 기관은 남한에서 최고 통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를 병립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선인민공화국

15) 자료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의 주석에는 이승만, 부주석 김구,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무 김규식, 재무 조만식, 사법 김병로 등이었다. 이와 같이 명단에는 이승만·김구·김규식·김성수·김병로·안재홍·조만식 등 해외 및 국내의 저명한 우익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명단에 포함된 우익 지도자들 중 이승만·조만식·김구 등은 아직 해외에서 입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전 협의를 받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명단 발표 후에도 조선인민공화국 주도측에서 우익지도자들을 찾아가 수락을 요청한 일도 없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말하자면 박헌영과 여운형이 정세의 급박함에 밀려 진지성이 결여된 자세를 보여 ‘벽보내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하였다.¹⁶⁾ 이렇게 하여, 해방 직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은 좌절되었다.

미군당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고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미군당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과 반목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우익세력들은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에서부터 이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 여운형은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였으니 조선민족은 즉시 자주적으로 주권 확립에 매진하여야 하며 우선 국내외의 혁명단체를 총망라하여 새로운 독립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송진우 등 우파는 총독부가 연합군에게 정권을 인계할 때까지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한국의 정통정부로 추대하자고 하였다.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방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송진우 등은 여운형을 비난하고, 임정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면서 별도로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파는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제의를 거부하고, 자파의 이익을 위해 미군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미군당국은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¹⁷⁾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표 인물로 등장했기 때문에 조선인민공화국을 건국준비위원회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李庭植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설립은 박헌영계의 공산당에 의한 궁중혁명이었다고 주장한다.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함으로써, 여운형과 그의 주변에 모였던 서울청년회파 내지는 장안파 인사들로부터 정치적 주도권을 박탈하고자 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을 자기 주도하의 공산혁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박헌영은 인민대표자대회 소집에 대해 여운형의 승락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조각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에야 박헌영의 이러한 계략이 드러났으므로, 처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여운형

16) 《동아일보》, 1945년 12월 9·13일.

17) 《조선일보》, 1946년 2월 24일.

은 박헌영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정식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대표성과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의 53.6%가 재건과 공산당원으로서 편파적 구성이었고, 이는 이미 조선공산당이 조선인민공화국의 해계모니를 장악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다.¹⁸⁾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각 지방에서 각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게 되었다. 남한의 7도 12시 148군에 걸쳐 다음 <표>와 같이 인민위원회의 지방조직이 완결되었다.

<표>

인민위원회의 지방조직

전국 총수		38도 이남			38도 이북			비고
		세수	기조직	미조직	세수	기조직	미조직	
道	13	9	7	2	7	6	1	경기도 북부, 황해·강원도 남부
市	21	12	12	-	9	9	-	
郡	218	148	148	-	70	70	-	
邑	103	75	75	-	28	28	-	
面	2244	1680	1667	13	564	564	-	
島	2	2	2	-	-	-	-	

* 김남식, 《남로당연구》Ⅲ(돌베개, 1988), 35쪽.

미군정은 진주하면서부터 지방인민위원회 등의 정치조직을 매우 좌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경계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지만, 미군정 관리가 지적하였듯이¹⁹⁾ 지방인민위원회는 완전하게 좌익적 성향의 조직만은

18) 이정식, <인민공화국과 해방정국> (《한국사 시민강좌》 12, 일조각, 1993), 15~45쪽.

19) 미군정의 통치구조에 대해서는 당시 전남지방 미군정청 정보국장이었던 Meade, Grant 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Kings Crown Press, 1951(안종철 옮김, 《주한미군정연구》, 돌베개, 1993) 참조.

아니었다.²⁰⁾

각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해방초기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했던 연로한 보수세력이 거의 탈락하고 일제하의 항일운동 경력이 있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도인민위원회의 조직이 정비되고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가면서부터 활동력이 떨어지는 연로한 보수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그후 미군정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2) 신탁통치 논쟁과 좌우대립

(1) 모스크바 결정과 국내의 파장

연합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았다. 연합국이 합의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것과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 뿐이었다. 특히 신탁통치 문제는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스탈린이 구두 합의해 준 상태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이 1945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모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군사상의 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미·소 양군에 의해 분할된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독립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

1. 한국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가혹한 지배의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한국에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산업·교통·농업 등의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2. 한국에 민주적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이 위원회의 건의는 미·

20) 안종철, 앞의 책(1991)을 참조.

- 소·영·중 4개국 정부에게 제출되어 검토된 후 미·소 양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와 민주적 제 단체의 협력 아래 한국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적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독립국가로 육성시키는 데 그 사명이 있다. 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정부와 타협한 후 미·소·영·중 정부에 제출하여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간의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4. 남한 및 북한에 관한 긴급문제의 심의를 위하여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 사이에 행정·경제분야에서 부단한 협력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소 점령사령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2주일 내에 개최한다.

모스크바 3상협정의 핵심 내용은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참여하에 미·소·영·중 4개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 협정을 미·소가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독립을 유보하고 유엔 주도하의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과 한인의 참여가 보장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소련의 안이 교묘하게 중첩된 타협의 산물이었다.²¹⁾

흔히 모스크바 3상협정이 곧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탁통치는 정확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중 신탁통치 실시 조항’이라고 말해야 옳다. 그 핵심적 내용은 임시정부 수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핵심적 내용이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소련의 제의에 의한 신탁통치 결정’으로 국내에 왜곡 전달됨으로써 즉각적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감정을 자극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을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하여²²⁾ 여론을 들끓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신도 ‘신탁통치 결정’을 부각시켜, 3상협정의 내용을 왜곡하였다. 해방과 함께 독립을 기대하고 있던 민중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좌우익을 막론하고 이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신탁통치

21) 전시 연합국회담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미국이 적극 주장하였는데, 협정 내용으로 볼 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소련측이 모스크바 결정을 주도하였다.

22) 《동아일보》, 1946년 1월 27일.

를 일제의 지배와 유사한 식민상태의 연속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세력은 탁치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한반도에 새로운 정치적 소용돌이가 불어 닥쳤다.²³⁾

이러한 내용의 결정문이 한반도에 알려지게 되자 한민족은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운동에 민족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체제의 억압적 상태가 또 다시 지속된다는 두려움과 즉시 독립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반탁운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반탁정국’은,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기존의 반탁주장을 철회하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로부터 좌우익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노정된다. 소련의 지시를 받은 좌익은 신탁통치가 단순한 원조를 의미하는 후견제이며,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신탁통치를 식민지화로 판단한 우익은 찬탁을 매국행위로 간주하면서 맹렬히 반대운동에 모든 힘을 결집시켰다.

이처럼 신탁통치 문제로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자 곤경에 빠진 것은 미군정청이었다. 미군정청은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고 실천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한민족 사이에 고양된 민족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미군정청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었던 우익세력까지도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미군정청이 경계하는 좌익세력이 모스크바협정을 찬성하는 상반된 상황은 미군정청의 정책 대안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해방을 기점으로 정치세력들간에 형성되었던 ‘애국 대 매국(친일)’이라는 대립구도는 신탁통치 실시문제를 계기로 ‘좌익 대 우익’의 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구도에서 역사적 정당성이나 과거의 친일정력은 문제되지 않았다. 오직 상대방을 정국 무대에서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되고, 자신들이 의도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구도를 중심으로 양 진영은 각각 해계모니 장악을 위하여 제각기

23) 이동현, 《한국신탁통치》(평민사, 1990), 82~96쪽.

통일전선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우익은 비상국민회의를, 그리고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함으로써 좌우익 대결구도는 더욱 증폭되었다.

(2) 우익세력의 통일전선-비상국민회의

신탁통치 실시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분분해지자, 임정세력은 1946년 1월 4일 金九 주석의 성명을 통해 당면 비상대책을 천명하였다. 임정은 1월 21일부터 비상정치회의주비회를 열고, 우익의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곧 이어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가세하기 시작했다. 임정세력은 우선 좌익과 우익의 연립을 요구하면서 반탁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이와 같은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모든 좌익정당은 이들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2월 1·2일 이틀 동안, 서울 천주교회에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우익정당, 사회단체와 중도파 정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국민회의를 발족시켰다. 비상국민회의는 조직 대가를 채택하고 과도정권 수립 등 긴급문제를 처리할 최고정부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그 인선을 이승만과 김구 양 영수에게 일임하였다. 최고정부위원회는 이승만과 김구 등 2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나중에 미군정청의 권유로 민주위원으로 전환된다.²⁴⁾

반탁운동을 가장 먼저 주도한 김구는 반탁노선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아 미·영·소·중의 4개국에 임시정부 명의로 ‘신탁통치 절대 반대’ 성명을 발송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려 하였다. 임정은 내무장관 명의를 임시정부 포고 제1호를 통해, “현재 전국 미군정청 소속의 경찰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 임시정부 지휘하에 예속하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임정세력은 미군정청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이처럼 김구진영이 반탁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독립국가를 이룩하겠다는 혁명가의 기원이라는 이상주의적 측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이승만과의

24) 송남현, 앞의 책, 281쪽.

경쟁에서 그의 정치적 권위를 만회해 보려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

(3) 좌익세력의 통일전선—민주주의민족전선

이처럼 우익진영이 신탁통치 절대 반대라는 명분으로 결집하자, 좌익진영도 이에 대응하여 모스크바 결정의 지지를 조직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개되기 이전에도 좌익진영은 미·소공동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정치세력은 물론, 해외세력이었던 이승만 및 김구(임정) 계열과의 통일전선 형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통일전선의 수립은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익과의 통일전선 구축에 대해 좌익진영 내부에서조차도 노선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일제하 지주 및 자본가계급 전체가 민족해방운동에 동참하기는 고사하고, 제국주의적 수탈의 도구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 계급을 친일 민족반역자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과의 합작을 반대했다. 그러나 여운형 등의 온건 좌익세력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여운형은 이승만이나 임정세력은 제한적이거나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해 왔고, 그들과 국내의 반민족적 집단과는 별다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통일전선 수립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우익진영의 정당들과 통일전선을 모색하였다. 1946년 1월 6일, 조선공산당·인민당·국민당·한민당 대표들의 비공식적인 회합이 있었고, 다음 날 7일에는 정식으로 4당 간담회가 열렸다. 4당 대표들은 민족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민당과 국민당측이 ‘신탁통치’ 문제에 관한 이견을 이유로 이미 발표된 공동 코뮤니케를 파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좌익과 우익을 망라한 통일전선의 구축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좌익진영만의 통일전선체 구성에 나서게 되었다. 1946년 1월 9일, 좌익진영의 29개 단체가 서울 YMCA 강당에 모여 민주주의민족전선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기준비위원회에서는 통일전선 결성에 관한 일체의 준비 공작을 공산당과 인민당에 일임하였다.²⁵⁾

좌익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대회는 1946년 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조선인민당·독립동맹·노동조합전국평의회·농민조합전국총연맹·청년총연맹·부녀총동맹·문학가동맹·과학기술단체 등 29개 정당, 사회단체와 각 지역의 사회단체가 참가하였다. 임정세력에서 이탈한 김원봉·성주식·김창숙·장건상 등도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적극 가담하였다. 결성대회는 좌익진영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305명의 인사들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47명으로 된 집행위원회도 두도록 하였다. 중앙위원은 각 단체의 조직원 비율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였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강국) 아래에 조직부·선전부·문화부·재정부·기획부·조사부 등을 두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조선민족의 완전한 독립 달성과 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위시하여 긴급한 민족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의 현 단계에 부여된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규약 2조)” 조직되었고, 이를 위해 “민주적 여론과 요구를 총괄적으로 대표하고 민주주의의 공동적 투쟁본부와 정부수립에 있어서 수시로 의회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의회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단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투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이것으로 볼 때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우익의 비상국민회의에 대항하기 위한 조선공산당·인민당·신민당 등의 결집체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인적 구성으로 보아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²⁵⁾

(4)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의 갈등

가. 좌익세력과 찬탁논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반탁운동이 해방정국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익세력은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행동을 감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대한국민임시정부 세력이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²⁷⁾ 12월 31일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명의로 임시정부 국

25) 양동주, <해방후 좌익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8), 93쪽.

26) 양동주, 위의 글, 136쪽.

무위원에게 통일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좌익세력을 대변하고 있던 중앙인민위원회는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을 동시에 해체하고 단일정부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었고, 민족통일에 대한 문제는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주장하면서 1946년 1월 2일 오전 10시까지 대답을 요구하였다. 임시정부측은 송부된 공문이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어, 서식상 접수키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송해 버렸다.

이 내용을 보면 1월 2일 오전 10시까지 회답을 요구하는 시한부로 임정에 제의하여 국민의 관심을 좌우합작 통일정부 수립으로 돌리려 하고 있고, 신탁통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구 중심의 임정측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를 동등한 자격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있다.²⁷⁾

해방정국의 큰 쟁점이었고 분단고착화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 좌익측이 반탁 입장을 최초로 공식적 반응으로 보인 것은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가 발표한 다음의 신탁통치안 철폐 요구성명서에서였다.

미국 극동부 책임자 빈센트(John Carter Vincent) 같은 사람은 공공연하게 조선을 신탁 관리할 것이라 말하였고, 국내의 소수 매국매족적 반동분자들은 여기에 영합하여, 혹은 당분간 군정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혹은 3년 후가 아니면 독립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반동분자들의 신탁통치는 결국 실현되고야 말았다. ... 통일은 저해되고 따라서 신탁통치를 받는 결과에까지 빠지게 된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한다. 이 신탁의 철폐를 위해서는 이 민족통일전선을 좀더 공고하게 결성하여야 할 것을 또다시 제창한다(《서울신문》, 1945년 1월 1일).

그런데 좌익측이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1946년 1월 2일이다. 다시 말하면 1945년 10월 20일 빈센트 발언 이래 12월 28일 모스크바 협정 발표 후 조선공산당이 모스크바협정 지지를 공식으로 표명한 1월 2일

27) 《서울신문》, 1946년 1월 1일.

28) 《서울신문》, 1946년 1월 2일.

까지는 신탁통치 반대라는 점에서 좌·우 양파가 일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반탁 일변도의 정국 흐름에서 1월 2일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의 다음과 같은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성명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정국을 진전시키게 되는 시발점이었다.

1. 8월 15일을 계기로 한 조선 해방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세계 민주주의 연합국의 용감한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이며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위대한 역사적 단계였다.
2. 3상회담의 결정은 조선민족해방을 확보하는 진보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정권 수립과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달을 원조하여 조선의 완전 독립을 전적으로 완성하여 세계 문명국가의 지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의 위대한 일보 진전이다.
3. 이 결정은 現下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조선 국내 정세에 비추어 조선민족의 이익을 존중하는 가장 적절한 국제적·국내적 해결이며 세계의 평화 유지와 인류의 민주주의화에 최적인 결정이라고 확신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모스크바 3상회담의 진보적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주의 연합국과 같이 조선의 민주주의정부 결정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민주주의 제국의 원조와 협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적 문명국가의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약속함.
 - ② 전 조선 인민 각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모스크바 3상회담의 완전한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 ③ 각 인민위원회와 諸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본 결정을 민족 대중에게 이해 보급시키며 나라를 사랑하는 전 인민은 본 결정을 깊이 인식하고... (《朝鮮日報》, 1946년 1월 4일).

또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진보이다. ... 臨時的 조선 민주주의정부를 조직한다는 同 건의문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今日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中央日報》, 1946년 1월 3일).

좌익계열의 성명 내용을 보면 당시 반탁 열기를 반영하듯이 국민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듯 신탁이라는 말 대신 모스크바 3상회담 결정이라는 말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찬탁이라는 말 그 자체가 민중의 감정에 반하는 것이었고, 당시 좌익세력은 기본적으로는 소련 점령군의 노선에 따르고 있었으므로 신탁통치에 대한 공산당으로서의 공식적 태도도 소련 점령군의 견해가 분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월 2일에서야 그들은 보다 분명한 찬탁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렇다면 좌익측이 그러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해방정국의 두 주역이 미국과 소련임이 분명하고 냉전 논리가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선은 소련과의 어떤 관계 혹은 영향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²⁹⁾

좌익과 우익 어느 한 세력이 해방정국의 장을 좌우할 정도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도 좌익세력 중 어느 개인 집단이 설사 한민족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반탁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또 해방정국은 각 정파의 이합집산 주도권 쟁취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치세력이든 당시 반탁의 분위기에 반하는 논리의 성명서나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면 좌익세력의 반탁에서 찬탁으로의 태도 변화는 해방정국 어느 정치세력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 우익세력과 반탁논리

우익세력은 1월 20일 김구 중심의 반탁세력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고 과도정부의 모체를 위해 민중 지도자·정당·사회단체·해외교포단체 대표로 비상정치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국무회의를 설치하였다. 이 집회에서 인민당·독립동맹·공산당과 같은 좌익세력과 김원봉·김성수 등 임정

29) 당시 조선공산당 총비서인 박헌영은 평양에 송환되어 소련측으로부터 신탁 지지 지령을 받고 1월 2일 서울에 귀환,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위원들의 반대를 꺾고 찬탁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金南植, 《南勞黨研究》, 돌베개, 1984, 250~251쪽).

내의 진보세력은 탈퇴하였지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합류해 비상국민회의라는 조직체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우익진영이 대체로 망라된 비상국민회의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시하는 과도임시정부의 모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미군정의 의도로 미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³⁰⁾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발족되었다. 이 기구는 우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우익진영의 통합기구로서의 위치, 그리고 일종의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제기한 국내세력을 대표하게 될 대표 선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인 남한만의 자문단체 설립을 통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의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내 반탁세력들의 결집체인 민주의원인 미군정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국의 흐름을 미군정이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익세력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남한내 좌익세력들도 그들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할 대항 조직체 결성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1월 19일 조선인민당·조선공산당을 주축으로 하여 29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2월 15일 결성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은 그 성격을 일부 소수계급의 이익을 위한 전횡물이 아닌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신적 공동체이며, 정부수립의 공동적 준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또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정 원칙에 의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조선임시민주주의의 정부조직에 있어 조선민족의 유일한 정식대표로서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고 하여 미군정과 우익세력들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에 대해 그들의 강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적어도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이 성립될 때까지 남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좌파단체였고, 좌파세력의 통일전선체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계승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1차적 과제는 국내의 반탁 우익세력들과의 투쟁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국내의 정치상황은 좌우익이 완전히 다른 정치노선을 표출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30) 한태수, 《한국정당사》(신태양사, 1961), 72쪽.

다. 좌·우익세력의 대립과 갈등

해방 후 신탁통치안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등 좌익세력의 대두를 반대함으로써 좌우 분열의 기미는 있었으나 직접 분열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우익세력은 안재홍의 국민당,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송진우 등의 한민당 등이 결성되어 있었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김구 중심의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중국에서 귀국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좌익세력과 연합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던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이 결성되었고 좌익세력은 박헌영의 재건파가 장안파를 누르고 실질적인 조선공산당의 우위를 차지한 상태였다.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 정치세력의 태도는 신탁통치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전해진 직후에는 강경한 반대라는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익진영은 문자 그대로 결사반대를 주장한 반면 좌익진영은 신중한 반대론을 전개했다. 그 까닭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이 소련측이라고 당시 서울에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었다.³¹⁾

신탁통치가 소련의 주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익은 더욱 강렬한 반대를 하게 되었고 좌익은 대중의 탁치반대 열기나 민족적 명분 때문에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탁통치의 발표는 한국인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미·소 군정을 일시적인 점령으로 생각하며 한국의 독립에 열망을 가졌던 한국인들은 우리의 독립보다 미·소 점령국의 이해에 따라 분할하여 통치하려는 그들의 속셈에 대하여 좌우익 및 민족주의세력, 공산주의세력 모두 신탁통치 결사반대와 반탁을 주장하였다.

신탁통치에 대한 이러한 거족적 반대는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민족의 열망, 당장 자주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존심, 신탁통치를 변형된 식민지배로 간주하는 오해 등이 상승 작용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거족적인 반탁운동을 앞서서 이끌면서 초기

31) 12월 27일 발표된 주요 정당들의 탁치반대성명에는 모두 “소련이 탁치를 주장하였다하니”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동아일보》, 1945년 12월 28일).

반탁운동의 핵심이 된 것은 임시정부와 김구였다.

먼저 임정세력이 12월 28일 즉각 국무회의를 열어 반탁결의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곧 전체 정계로 확대되면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민당·국민당과 함께 조선공산당과 인민당도 참여했다. 민족주의자들은 12월 31일 반탁데모를 열기로 했으며, 공산당은 별도로 1946년 1월 2일에 열기로 계획하였다.³²⁾ 그러나 좌익세력 공산주의자들은 1월 2일 예정되었던 반탁데모를 취소하고 모스크바협정 지지로 선회하였다. 이른바 반탁에서 찬탁으로의 전환이었다.

1월 2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가 신탁통치안을 국제적·국내적 해결이라며 지지를 했고, 조선공산당도 즉시 독립보다는 민족통일전선의 완성으로 신탁통치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좌익진영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기회를 동원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우익측이 이 같은 좌익측의 찬탁 선회를 두고 민족반역자로 매도했을 것³³⁾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 대중은 신탁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좌익은 찬탁으로 해방 직후의 우위를 상실하고, 우익은 반탁으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했다. 찬탁과 반탁 노선으로 좌우세력의 대립은 본격화되었다. 김구는 독립된 한국통일정부를 목적으로 미·소연합국에 의한 신탁통치 철회를 위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좌익과 임정을 지지하는 우익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뒤에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 여운형은 정치회의에서 좌익세력의 대표권 보장이 어렵고 공산당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우익적이며, 신탁통치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거부하였다. 결국 공산주의세력과 우익 민주주의세력간의 연립은 성사될 수 없었다.

32) 1월 1일까지만 해도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고 조선공산당도 ‘탁치문제의 해결은 민족통일전선 결성으로’라는 제하에 탁치반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인민공화국 및 조선공산당의 1월 1일자 반탁 내용을 포함한 성명은 《朝鮮日報》, 1946년 1월 1일자 및 2일자에 게재되어 있다.

33) 《동아일보》, 1945년 12월 31일.

우익측은 지금까지 비교적 분산되었던 세력들을 반탁운동으로 결집시켜 나갔다. 먼저 임정이 소집한 ‘비상정치회의’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비상국민회의를 열었고, 역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임정계가 만든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합동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이승만을 의장, 김구·김규식을 부의장으로 하는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을 결성하였다.

좌익측도 인민당·공산당·조선독립동맹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천도교청우당’ 등 29개의 정당과 단체가 모여 여운형·박헌영·허헌·김원봉 등을 의장단으로 하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함으로써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로써 대한정국은 신탁통치 문제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로 편갈림해서 우익세력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탁노선으로, 좌익세력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중심으로 찬탁노선으로 분열되어 좌우 정치세력의 대립을 가져왔다. 요컨대 한반도에 신탁통치 실시라는 미·소강대국의 자국적 이익에 따라 한민족의 희생이 감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찬탁과 반탁을 둘러싸고 좌우익 투쟁이 비화되었다.

(5) 탁치문제에 대한 논쟁

해방 당시의 찬·반탁론이나 그에 대한 최근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탁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3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첫째, 신탁통치는 당시 국제 여건상 과도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었고 따라서 그 자체 내에 진보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탁치 지지론적, 긍정론적 입장이다. 이 견해는 당시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계열의 노선이 대표적이었다.³⁴⁾ 이는 신탁의 구체적 내용이 조선민족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는 만큼 당시의 국제 역학관계상 오히려 이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으며, 감성적인 즉각적 민족독립론에 입각한 반탁운동은 오히려 친미독재세력 및 분단세력이 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는

34)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까치, 1985).

입장이다.

둘째, 탁치는 반민족적이고 반자주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특히 좌익계열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급 전환한 것은 소련이 이에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탁치반대론적 입장이다. 이 견해는 반탁운동으로 단결하지 않고 사대주의적인 찬탁을 좌익이 채택함으로써 민족적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당시의 반탁론자들의 주장이었으며, 엄밀히 말해서 다시 순수 민족주의론자들과 반탁을 이용한 반공론자들의 주장으로 분류된다.

셋째, 찬·반탁의 대립은 현실적으로 민족해방, 통일운동의 분열을 야기시켜 분단체제를 고착시키는 기틀이 되었으며, 따라서 민족통일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이른바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찬·반탁운동 해악론의 입장이다. 이 견해는 찬·반탁운동의 대립은 그 자체로서 탁치라는 사안에 함몰되어 당시의 급박한 과제, 가령 토지문제·일제잔재 청산문제 등을 뒤로 미루어 놓음으로써 친일·친미세력의 재등장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는 탁치문제 중에서 이른바 모스크바 3상협정에 관하여 남한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라는 적극적 대처 방안의 관점에서 견해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탁치문제가 국내에 제기되어 전개된 국내 정치세력의 이른바 반탁·찬탁의 좌우대립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치욕스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단구조에서 국내 정치세력이 단결된 모습으로 싸우기는 커녕 오히려 분단구조에 영합하여 분열을 자초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른바 ‘내쟁적 측면’을 표출하여 외세의 분단 책임을 면탈시켜 주었으며 미·소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시점인 1946년 초에 그 대립의 쟁점을 제공하여 대립을 부추기게 되어 분단고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반탁이나 모스크바 결정 지지노선이나 모두 부분적인 타당성을 지닌 논리일 뿐이며 민족해방과 통일이라는 과제의 실현 면에서 볼 때 어느 쪽 길이 옳은 길이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양쪽 노선 모두 문제가 있는 논리였다. 당시의 이론가가 모스크바 결정에 숨겨져 있는 미국과 소련의 다른 의도를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지지 아니면 반탁으로

대립하였던 것이 중대한 오류였다.³⁵⁾

그렇다면 이렇게 대립하여 일을 그르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문제를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의 좌우대립을 자초한 좌익세력에 주체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우익세력은 수혜자인 동시에 책임 있는 당국자이다. 탁치문제에 관해 좌·우 모두는 민족문제 해결의 관점인 민족해방, 민족통일의 시각에서 조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과 한정된 정보에 입각해서 단기적·자의적으로 조망하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만을 확대하려는 근시안적인 주장만을 한 셈이다.

(6) 신탁통치 문제 이후의 정국

탁치 이후 정국의 특징은 한마디로 해방 직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우익진영의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 좌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우익이 이제는 좌익진영을 상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통일전선체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힘을 배경으로 이제 독자적인 해게모니 장악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신탁통치 문제로 인해 촉발된 좌우대립은 ‘민족적 치욕’이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단구조에 국내 정치세력이 단결된 모습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단구조에 영합하여 분열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분열적인 모습은 외세의 분단 책임을 합리화시켰으며 미·소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점인 1946년 초에 미·소대립의 쟁점을 제공하고 부추기게 되어 분단 고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좌우대립이 치열해지는 동안 청산되어야 할 대상인 친일파세력들은 반소·반공의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의 은근한 보호를 받으며 애국자로 탈바꿈하였다. 결국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다는 민족사의 과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35) 일부에서는 모스크바 결정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후견제의 실시를 통하여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지지노선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의 반탁 열기를 무시한 박헌영식 지지노선 전환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중노선적 비판’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의 대결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좌우익 정치세력보다는 이를 조성한 언론에 돌아갈 수도 있다. 당시의 오보는 단순한 실수였는가. 당시 언론사를 통제하였던 미군정이 이러한 오보를 묵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 통신사를 이용 사주하여 대중의 반소·반탁감정 형성을 조장한 ‘음모’가 개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모스크바 3상협정의 내용에 대한 오보가 없었다면 우익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

〈安鍾澈〉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식민지시기 민족운동세력 중 조선공산당이나 좌익 정치세력과의 연합에 반대한 정치세력들을 우익 정치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1920년대부터 자치운동·문화운동을 전개했던 金性洙·宋鎮禹를 중심으로 하는 東亞日報그룹(한국민주당을 결성), 중국에서 大韓民國臨時政府(이하 임시정부)내 金九를 중심으로 하는 韓國獨立黨세력, 미국에서 임시정부의 駐美代表部 대표로 활동하였던 李承晩 등이 대표적인 우익 정치세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우익 정치세력의 특징은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추구한다는 것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치노선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8·15 직후에 사회주의적 사회체제를 선호하는 대중들의 열망으로 전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면, 후자는 이들 우익 정치세력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우익 정치세력들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좌익과의 정치적 합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1945년 말 이후 전개된 信託統治 반대운동은 우익 정치세력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익 정치세력들은 식민지시기 동안 국내에서 활동했던 《동아일보》 그룹을 중심으로 한 韓國民主黨이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환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특히 우익 정치세력들은 미군정의 지원을 통하여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환국 직후에는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지만,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계기로 하여 우익 정치세력은 연합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反託鬭爭委員會・非常國民會議・民主議院 등은 우익 정치세력들이 반탁의 입장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취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나 우익 정치세력들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이후 우익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우익 내부의 분열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및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미군정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쟁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또한 1946년 6월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된 소위 ‘井邑 발언’ 이후 우익 정치세력들 내부에서 정부수립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46년 말 이후 이승만과 임시정부세력은 각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각의 연합체를 조직하였으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1947년 말 이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세력은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38선 이남과 이북의 정치협상을 추진하였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의 경우에도 정부수립의 과정에서 분열되었다. 양 세력은 모두 대한민국정부에 참여하였지만, 서로간의 견해 차이 및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새 정부하에서 與野로 나뉘게 되었다.

(1) 한국민주당

국내에 있었던 우익 정치세력들 중 8·15 직후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일본 패망 당시 국내에 있었던 《동아일보》 그룹이었다. 《동아일보》 그룹의 핵심 인사였던 송진우는 8·15 직후 朝鮮建國準備委員會(이하 건준)에 참여하지 않고 정세를 관망하다가, 미군의 진주를 앞두고 1945년 9월 1일 ‘大韓民國臨時政府 還國歡迎會’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당시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었던 朝鮮共產黨 중심의 좌익 정치세력에 대한 대응이면서 동시에 미군의 진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¹⁾

미군의 상륙을 앞두고 동년 9월 6일 건준이 朝鮮人民共和國(이하 인공)으로 개편되자, 송진우는 9월 7일 ‘國民大會準備會’를 결성하였다. 《동아일보》사옥에서 결성된 국민대회준비회에는 송진우(위원장), 김성수, 徐相日(부위원장), 元世勳(부위원장), 金俊淵(총무부), 張澤相(외교부), 薛義植(정보부), 尹致暎(경호부) 등이 참여하였다. 국민대회준비회는 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이 조직이 모체가 되어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9월 16일 韓國民主黨(이하 한민당)을 결성하였다.²⁾

한민당 창당대회는 천도교 기념관에서 1,6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당대회에서 300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고 이승만·徐載弼·김구·李始榮·文昌範·權東鎭·吳世昌 등 7인을 당의 영수로 추대하였다. 송진우가 당의 수석총무로 선출되어 당수 격으로 당을 대표하였으며, 지역 안배에 따라 원세훈·白寬洙·서상일·金度演·許政·趙炳玉·白南薰·金東元이 총무에 선출되었다.

초기 한민당은 ‘지주·자본가 및 친일파’들의 정당이라는 좌익 정치세력의 비난과는 달리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였다. 연해주·상해·북경 등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한 이후 국내에서 활동했던 원세훈은 1945년 8월 18일 高麗民主黨을 결성하였으며, 한민당에 참여하였다. 식민지시기 유명한 항일변호사였던 金炳魯와 李仁 등도 초기에는 건준에 참여한 安在鴻과의 합작을 추진하였지만, 건준의 조직개편으로 안재홍이 건준에서 탈퇴하자, 백관수·조병옥·金若水 등과 함께 한민당에 참여하였다. 식민지시기 친일을 하지 않았던 국내의 우익인사들이 8·15 직후 한민당에

1) 송남현, 《해방3년사》 I(까지, 1985), 77쪽.

2) 국민대회준비회는 한민당이 창당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했는데, 이는 “해외망명 동지들이 환국한 다음에 완전독립의 총협의체로 재편성하여 활용할 심산” 때문이었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고하 송진우선생전》, 동아일보사, 1990, 460쪽). 이 ‘준비회’는 후일 미군환영대회(1945년 10월 20일), 임시정부요인 환영대회(1945년 12월 19일) 등을 주관하여 한민당의 존재를 내외에 과시하는 역할을 했으나 한민당과 한독당의 합당결렬과 송진우의 피살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모두 참여하게 된 데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이념적 동질성과 함께 민족통일전선을 표방한 건준이 인공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좌익세력들에 의해 독선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8·15 직후 한민당에 참여했던 주요 세력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민당 : 張德秀 · 허정 · 백남훈 · 윤치영 · 尹潽善

조선민족당 : 원세훈 · 김병로 · 백관수 · 조병옥 · 咸尙勳 · 김약수 · 이인

국민대회준비회 : 송진우 · 김성수 · 서상일 · 김준연 · 장택상 · 설의식

9월 22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1개 부서장과 중앙감찰위원 30명을 선출하였다. 11개 부서는 당무부 · 외무부 · 조직부 · 내부부 · 선전부 · 정보부 · 노동부 · 문교부 · 후생부 · 조사부 · 연락부 등이었으며, 후에 지방부 · 청년부 · 훈련부 등 3개 부서가 추가되었다.³⁾ 지방지부의 조직은 ‘친일파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조직 결성이 쉽지 않았지만, 1945년 11월 초 광주를 시작으로 1945년 12월 부산과 서울에서, 그리고 1946년 6월에서 11월 사이 경상남도(6월 16일), 충청북도(7월 31일), 전라북도(10월 15일), 경상북도(11월 2일)에서 지방지부가 조직되었다.⁴⁾ 1946년 말까지 53개의 당지부가 결성되었고, 결성 중에 있는 지부가 27개였으며, 창당시 5만 명이라고 신고한 당원수가 23만 명으로 증가되었다.⁵⁾

한민당은 다음과 같은 정치노선하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로 인공에 대한 반대노선이다. 초기 한민당에는 친일경력의 인사에서부터 일제말기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지만, 식민지시기 실력양성운동, 기독교운동, 자치운동을 주도하면서 좌익 정치세력과 대립하였던 우익 정치세력들의 결집체였다. 당 내부에는 친일을 했던 세력과 일본의 압력을 이겨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하였지만, 8·15 직후 좌익의 결집

3) 박태균, <해방직후 한국민주당 구성원의 성격과 조직개편>(《국사관논총》 58, 국사편찬위원회, 1994), 90~92쪽.

4)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 II : 한국현대정당론》(창작과 비평사, 1984), 222·229쪽.

5) 《조선연감》(조선통신사, 1947), 57쪽. 그러나 당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한민당에 가입해 주는 것만 해도 당지도부로서는 고마워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제 당원수보다는 훨씬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체였던 인공에 대한 반대를 가장 중요한 정치노선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창당선언문을 통해서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선언한 것 역시 인공에 대한 반대를 천명한 것이었다.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는 공통된 정치노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공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의 결집을 모색한 것이었다. 한민당이 信託統治 反對運動(이하 반탁운동)을 지지한 것 역시 좌파세력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이었다.

둘째로 미군정과의 협조노선이다. ‘친일파·지주·자본가’의 정당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한민당으로서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정과의 협조노선이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정치노선 상에서도 좌파나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과의 연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미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한민당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의 사상 및 교육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민당에 참여하고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식민지시기 일본이나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⁶⁾ 미군정으로서도 통치를 위하여 “연로하고도 보다 교육받은 한국인들 가운데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⁷⁾의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였고, 둘 사이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945년 10월 초 미군정이 설치했던 고문회의에는 전체 10명 중 7명이 한민당 관계자였으며, 미군정 내의 국장(지금의 장관)과 도지사 역시 한민당 출신이 다수 참여하였다.⁸⁾

6) 일본에서 유학한 대표적인 인물은 김병로·이인(이상 明治大學), 송진우·김성수·장덕수·장택상(이상 早稻田大學), 김도연(慶應大學), 김준연·유억겸·남궁영(이상 東京帝國大學) 등이다. 미국에서 유학한 대표적인 인물은 김도연·백낙준·윤치영·이기봉·임영신·장덕수·조병옥 등이다. 이외에 장택상(영국), 이극로, 김준연(이상 독일) 등이 유럽에서 유학하였다.

7) <재한국정치고문(베닝호프)이 국무장관에게(1945년 9월 15일)>(김국태 역, 《해방 3년과 미국》 I, 돌베개, 1984), 56쪽.

8) 미군정 내의 부·국장·도지사 중 이용설(보건위생국장), 이훈곡(농상공장), 조병옥(경무국장), 유억겸(학무국장), 김병로(법무부장), 민희식(운수부장), 구자옥(경기도 지사), 서민호(광주부윤) 등이 한민당 관련 인사들이었다.

박태균, <8·15 직후 미군정의 관리 충원과 친일파>(《역사와 현실》 10, 한국 역사연구회, 1993), 61~62쪽.

경찰 및 사법조직에서 한민당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안진, 《미군정기 억압 기구 연구》(세길, 1996) 참조.

셋째로 자본가와 지주에 기반한 경제정책노선이다. 당 강령과 정책을 통해 발표된 한민당의 정치노선은 당시 좌익 정치세력이나 중도 정치세력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교육 및 보건의 기회 균등’,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등은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정강, 정책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한민당의 함상훈은 경제대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아당의 공업건설 의견은 대체로 공산당의 의견과 근사하다”라고 주장하였다.⁹⁾ 단지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정치세력들과 차이가 있었다. 한민당을 제외한 다른 정치세력들이 토지국유화, 또는 유·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있던 데 반하여 한민당은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¹⁰⁾

그러나 실제적 활동에서 나타나는 경제정책은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민당은 토지개혁을 위한 過渡立法議院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¹¹⁾ 미군정의 적산불하 방침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였다. 당시 여론은 “많은 자본을 가진 사업가 혹은 간상배 이외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금 일시지불에 의한 적산불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¹²⁾ 한민당은 “악성인플레 방지, 훼손·유실 방지, 다수인의 소유권 향유 등 건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³⁾

한민당의 경제정책은 美·蘇共同委員會에 제출한 ‘임시정부의 정강’에서 잘 나타난다.¹⁴⁾ 한민당이 주도하고 있었던 ‘臨時政府樹立對策協議會’에서 제출한 방안을 보면 경제기구와 산업, 산업조직 등의 항목에서, 정책과 강령을 통해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통제정책의 수립’, ‘경제기획원의 설립’,

9) <정당통일과 경제대책> (《춘추》 제5권 1호, 1945 ; 심지연, 《한국민주당연구》 I, 풀빛, 1982, 163~167쪽에 재수록).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보진재, 1968), 120~122쪽.

11) 《동아일보》, 1946년 10월 9일.

12) 《조선연감》(조선통신사, 1948), 176쪽.

13) 《동아일보》, 1947년 7월 26일.

14) 새한민보사, <임협의 답신안> (《임시정부수립대강》, 1947), 16~40쪽.

‘최저 임금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토지문제에 있어서는 ‘유상매수·유상분배’, 재산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의 확립’, 산업부문에 있어서 ‘농토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계획적인 전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무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내세우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었던 8·15 직후의 상황에서 한민당 역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주와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민당의 활동은 위의 정치노선 위에서 크게 미군정에의 협조, 반탁운동, 38선 이남만의 단독선거 실시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미군정의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민당은 이승만과 임시정부가 귀국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우익 정치세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송진우가 암살당한 직후¹⁵⁾ 조직을 개편한 한민당은 4당회합·5당회합 등 정치세력 통합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반탁운동에 합류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한민당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주도한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이하 민주의원)에 합류하였다. 한민당의 미군정에 대한 협조노선은 미·소공동위원회와 반탁운동에 대한 입장에서 잘 나타난다. 비록 합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韓國獨立黨(이하 한독당)·國民黨 등과 우익정당의 합당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기도 했던 한민당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제5호 성명>이 발표되자 이에 서명하고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반탁의 깃발 아래 우익 정치세력의 합작 역시 한민당의 중요한 정치노선이었지만, 그 이전에 미군정과 의 협조노선이 보다 중요한 노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⁶⁾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때에도 한민당은 반탁진영에 합류해 있으면서 임시정부측과는 달리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¹⁷⁾

15) 송진우의 암살과 관련해서는 박태균, 《38선을 베고 쓰러진 거인들》(지성사, 1984) 참조.

16)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 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서울대 출판부, 1997), 82~84쪽.

17) 《동아일보》, 1946년 6월 10일.

《경향신문》, 1947년 6월 18일.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이후 미군정이 추진한 左右合作委員會, 南朝鮮 過渡立法議院(이하 과도입법의원)에 참여한 한민당은 1947년 이후 과도입법의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친일과 처리문제, 토지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하였는데, 한민당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附日協力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과 ‘토지개혁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결국 양 법안은 보류되었다. 普通選舉法の 제정과 관련해서 한민당은 2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보적인 입장의 젊은층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⁸⁾

한민당의 이상과 같은 활동과정은 다른 한편으로 당내 인사들의 탈당으로 인한 당 조직의 축소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민당의 대표로 참석하였던 원세훈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한 한민당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민당에서 탈당하였다.¹⁹⁾ 원세훈의 탈당에 뒤이어 고려민주당계의 인사들이었던 韓興周(중앙상무감찰위원)·宋南憲(중앙상무위원)·朴明煥(청년부장) 등 49명이 탈당하였다.²⁰⁾ 10월 말에도 탈당사태는 계속되었다. 10월 21일 김약수·金炳魯·李順鐸 등 중앙위원 12명과 평당원 40여 명, 11월 22일 중앙위원 강인택 등 20여 명, 11월 28일 중앙위원 박용희 등 17명, 12월 5일 중앙당무집행위원 김상규 외 중앙집행위원 4명과 당원 82명, 12월 17일 중앙집행위원 박원식 외 평당원 56명이 탈당하였다.²¹⁾ 이들의 탈당은 좌우합작위원회뿐만 아니라 과도입법의원에 대한 한민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탈당사태로 인하여 한민당은 당 조직을 변화시켰다. 8명의 총무를

한민당은 과도입법의원 내에서 반탁결의안을 제출하는 데 적극 참여했었다(《동아일보》, 1946년 3월 7일).

18) 김영미,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성립과 활동〉(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52~77쪽.

19) 《동아일보》, 1946년 10월 19일.

20) 《조선일보》, 1946년 10월 11일.

21)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의회정치사, 1961), 129쪽.

탈당한 인사들은 대부분 김약수·원세훈이 주축이 되었던 ‘民衆同盟’에 참여하였다. 박태균, 앞의 글(1994), 116쪽.

대표로 하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로 당헌을 개정하여 김성수를 당 위원장, 백남훈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이전의 총무제를 위원장제로 하는 동시에 후생·문교·지방 등 3부를 폐지하고 기획·정치부를 신설하여 12부로 개편하였으며, 중앙당무위원과 중앙집행위원을 재선출하였다.²²⁾

이러한 당 조직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는 계기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왜소화를 가져왔다. 한민당은 1946년 말의 조직 개편 이후 김성수와 장덕수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1947년 말 장덕수의 암살 이후 한민당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장덕수는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된 직후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미군정 역시 장덕수를 중심으로 새로 수립될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당 조직의 축소와 핵심인사들의 탈퇴·암살 등은 결국 한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민당은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였지만, 전체 200석 중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29명만이 당선되었고, 李承晩 정부의 조각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1949년 2월 한민당을 해체하고 大韓國民會의 申翼熙, 大同青年團의 池青天 등과 연합하여 민주국민당을 결성하였지만, 1955년 민주당으로 확대 개편될 때까지 한민당 계열은 정부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채 야당으로서 약세를 면할 수 없었다.

(2) 임시정부세력과 한국독립당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관내에서 활동한 민족해방운동 단체로서 1930년대까지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1942년 이후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정당·단체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1944년에는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독당은 1930년 李東寧·安昌浩·金九·趙琬九 등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래의 파벌투쟁을 청산하고 민족주의운동전선을 통일하여 임시정부의 기초적 정당을 조직한다는 목적 아래 결성되었

22) 《서울신문》, 1946년 10월 13일.

《조선일보》, 1946년 10월 19일.

다.²³⁾ 한독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이 주도한 정당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면서 1935년 11월 한국국민당으로 개편되었고, 1940년 5월 중국국민당의 지원하에 ‘통합’ 한독당으로 개편, 김구와 趙素昂이 주도하는 체제하에서 8·15를 맞이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는 시점에서 이들의 정치노선을 잘 보여주는 것은 1945년 8월 21일 重慶에서 발표한 黨綱과 黨策이었다.²⁴⁾ 당강과 당책은 조소앙과 신익희가 기초한 것으로 1940년 10월과 1941년 11월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大韓民國臨時憲法>과 <大韓民國建國綱領草案>의 내용을 계승하였다.²⁵⁾ 주요한 내용은 ‘계획경제제도의 확립’, ‘토지국유의 원칙하에서 인민에게 분급’, ‘보통선거제의 실시’, ‘중요 산업의 국유화’, ‘국비교육시설의 완비’, ‘친일문제 해결’ 등이었다.²⁶⁾ 이러한 내용은 일견 사회주의적인 것으로도 보이지만, 중국 국민당의 노선인 손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원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식민지시기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활동이 다른 정치세력들의 활동에 비교하여 뚜렷하게 중요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의 민중들이 느끼는 비중은 다른 독립운동단체에 비하여 월등하게 큰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정치세력들에게 있어서도 8·15 이후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귀국 및 활동은 국내의 정치상황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었다.²⁷⁾

23) 노경채, 《한국독립당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28~29쪽.

24) <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선언-부 당의 당강 당책 당면구호>(송남현, 앞의 책), 186~190쪽.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조소앙편(三)》(1983), 264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2-임정편 11》(1971), 29~34쪽.

26) 한국 이후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활동이 반탁운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노선이 8·15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것인지 추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한민당과 조선공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의 7원칙에 찬성한 것을 볼 때 ‘몰수·유조건 몰수·체감대상, 무상분배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27) 한민당은 임시정부의 환국과 환영을 가장 큰 목표로 세워놓고 있었으며,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인공 역시 임시정부의 환국 이전에 임시정부 요인들을 인공의 주요 각료에 임명해 놓은 상태였다. 임시정부가 환국하자마자 인공은 임시

국내에 미군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국 내 한국인들의 문제 때문에 임시 정부와 한독당이 쉽게 귀국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군정이었다.²⁸⁾ 미군정은 38선 이남의 정치세력 재편계획의 일환으로 임시정부의 귀국을 추진하였다.²⁹⁾ 이에 따라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8·15 이후 3달이 지난 11월 23일과 12월 2일 2차에 걸쳐 귀국하였다. 이들이 귀국한 시점은 이미 좌파에서 인공을 조직하여 미군정과 대립하고 있었고, 이승만이 미군정의 후원하에 大韓獨立促成中央協議會(이하 독촉중협)를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였다.

한국한 임시정부와 한독당의 정치노선과 활동은 臨政法統論과 반탁운동으로 대표된다. 특히 반탁운동은 임시정부와 한독당이 주도한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이었으며, 임정법통론 역시 반탁운동을 통해서 표출되었다.³⁰⁾ 한국한 직후 인공과의 합작, 독촉중협과의 합작 등을 추진하였지만,³¹⁾ 임시정부는 ‘임정법통론’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치세력간의 단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8·15 이후 많은 정치세력들은 임시정부가 정치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임정법통론’은 이러한 국내 정치세력들의 희망을 어렵게 하였다.

미군정이 임시정부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부인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협정 결정서(이

정부와의 합작사업에 주력하였다.

28) 이승익, <임시정부의 귀국과 대미군정 관계(1945. 8~1946. 2)>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김정인, <임정 주화대표단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29) 박태균, <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 정치구도의 변화> (《한국사연구》 74, 1992), 127~134쪽.

30) ‘임정법통론’은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임시정부 인사들이 다른 정치세력과 임시정부의 통합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임정법통론은 식민지시기 이래로 8·15 이후까지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이 다른 정치조직과의 연합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8·15 이후 임정법통론에 대해서는 이용기, <1945~48년 임정세력의 법통정부 수립운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참조.

31) 《자유신문》, 1945년 12월 21·26일.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하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자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³²⁾ 3상회의 결정서에는 ‘조선임시정부의 구성’이라는 조항과 ‘최고 5년 기한으로 4국 신탁통치’라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비록 3항에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지만,³³⁾ 임시정부는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를 설치하고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반탁운동을 통하여 일시적이거나 임시정부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임시정부와 한독당에서 즉각적으로 반탁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① 민족해방운동시기부터 국제공판론을 반대해 왔고, ② ‘임시정부’의 과도정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③ 반탁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³⁴⁾ 임시정부는 총파업과 시가행진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國字 1호>와 <국자 2호>를 발표하여 정권 접수를 선언하였다.³⁵⁾ 3상회의 결정서 발표 직후의 반탁운동이 즉각적인 독립을 바라고 있었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임시정부가 파업을 비롯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미군정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³⁶⁾

초기의 반탁운동이 미군정의 반대로 인하여 실패하였지만, 임시정부는 과도정부를 위한 代議體 조직을 추진하였다. 대의체 건설을 위해 조직된 것이 ‘非常政治會議’였다. 비상정치회의에는 좌익의 정당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

32) 3상회의 결정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중석, 《해방 후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국가건설운동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48~159쪽 참조.

33) 3항에 대한 소련측의 번역문에는 신탁통치 대신에 援助協力 또는 後見이라고 되어 있다(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서기국 편, <소미공동위원회에 관한 제반자료집>,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13, 돌베개, 1986, 11~12쪽).

34) 노경채, 앞의 책, 151~152쪽.

35) 《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

36) 도진순, 앞의 책, 63~64쪽 및 박태균, 앞의 글(1992), 279쪽.

미군정은 반탁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직후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 재편을 추구한 것이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익 정치세력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비상정치회의가 非常國民會議로 개칭되고 여기에 이승만과 독촉중협이 합류가 결정되자 임시정부 내에서 인공과의 합작을 추진했던 民族革命黨 계열의 인사들은 좌익의 불참을 이유로 임시정부에서 탈퇴했다.³⁷⁾ 1942년 이후 중도파세력이 참여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계기로 하여 김구와 조소앙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만이 남게 되었다. 또한 비상국민회의 역시 미군정과 이승만의 계획을 통해 ‘南朝鮮代表民主議院(이하 민주의원)’으로 개편되자, 임시정부는 우익세력 내부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대의체 조직에 실패하자, 임시정부는 한독당을 강화하면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46년 3월 한독당과 국민당이 합당을 선언하였으며,³⁸⁾ 한민당·新韓民族黨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한민당과 신한민족당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 견해가 도출되자 한독당은 이승만의 참여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1946년 4월에 이르러 한민당이 빠진 채 한독당·국민당·신한민족당의 3당합당이 이루어졌다.³⁹⁾

1947년 한독당은 확장된 당세를 바탕으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반탁투쟁조직위원회를 주도하였지만, 과도입법의원への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독당 내의 임정계는 과도입법의원への 불참할 것을 주장하였고, 安在鴻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계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독당은 ‘일부 참가·일부 불참’이 ‘我黨의 방침’이라는 교육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⁴⁰⁾

과도입법의원への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비롯된 당내의 갈등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더욱 심화되었다. 3상협정 결정서에 대한 지지를 이유로 權泰錫 등이 제명되었고⁴¹⁾ 미·소공동위원회 참여를 주장하였던 한독당 혁신파(주로 국민당 계열)가 제명되었다.⁴²⁾ 탈당한 인사들은 新韓國民黨

37) 《조선일보》, 1946년 2월 24일.

38) 《한성일보》, 1946년 3월 23일.

39) 《한성일보》, 1946년 4월 19일.

40) 《조선일보》, 1946년 12월 19일.

41) 《한성일보》, 1947년 5월 14일.

42) 《동아일보》, 1947년 6월 21일.

과 民主韓獨黨을 결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독당의 당세는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위축된 당세를 재강화하기 위하여 ‘各政黨協議會’를 조직하였지만, 조소앙이 정계은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의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1946년 우익정당간의 三黨合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타격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던⁴³⁾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반탁운동을 재개하였다.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통해 우익 내부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1947년 1월 비상국민회의·獨立促成國民會·民族統一總本部 등의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는 ‘反託鬭爭委員會’를 조직하였다.⁴⁴⁾ 그리고 세 단체를 통합하여 동년 2월 ‘國民議會’를 조직하였다.⁴⁵⁾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은 국민의회가 임시적인 협의기구가 아니라 ‘상설적 대의조직’이며 ‘독립운동의 피문은 최고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역사적 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⁴⁶⁾ 김구는 국민의회의 성립을 계기로 하여 동년 3월 1일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우익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김구의 과도정부에 대해 거부 태도를 명확히 하였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김구의 주도권 장악을 우려하여 반탁운동이 정권수립으로 진전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반탁운동을 통해 우익진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회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려던 임시정부 인사들의 시도는 미군정·경찰의 저지와 이승만·한국민주당 진영의 견제로 ‘체면만 손상한 채’ 또다시 실패하였다.⁴⁷⁾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진전을 계기로 임시정부는 다시 한번 반탁운동의 고양을 시도하였고, 이승만이 주도한 ‘民族代表者大會’와 국민의회의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이상 반탁운동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기

43) 도진순, 앞의 책, 77~80쪽.

44) 《동아일보》, 1947년 1월 23일.

45) 《조선일보》, 1947년 2월 18일.

46) 도진순, 앞의 책, 148~149쪽.

47) 도진순, 위의 책, 150~151쪽.

도 하였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곧 미국의 주도하에 조선문제의 유엔 이관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더 이상 3상협정 결정서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상협정 결정서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한 반탁운동 역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이후 이승만과 한민당은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임시정부 계열과 한독당은 ‘단독정부 절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⁴⁸⁾ 여기에 더하여 장덕수 암살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김구와 이승만, 한민당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장덕수 암살사건은 그 배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화살은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에게 날아들었다.⁴⁹⁾ 이제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반탁운동에서 단독정부수립 반대운동으로 정치노선을 선회하게 되었다.

한민당, 이승만과의 정치적인 결별, 그리고 미군정과의 갈등이라는 상황에서 한독당과 임시정부 인사들이 선택한 것은 단독선거에의 참가가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1948년 초반에 이르러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여 한독당 내부에 김구와 조소앙 계열만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독당의 노선과 활동은 김구의 정치적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북한측에 남북협상을 제의하였고, ‘統一獨立運動者協議會’를 조직하여,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중도파세력들과 손을 잡았다.

임시정부와 한독당 계열의 남북협상 제의 및 참여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계속 고수하였던 ‘임정법통론’의 포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이었다. 남북협상은 우익 정치세력 내부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를 거부한 임시정부와 한독당세력이 선택한 최후의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한독당은 38선 이남의 5·10선거와 남북협상 참여를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되었다. 당내 일부 세력들은 김구가 중심이 된 남북협

48) 《조선일보》, 1947년 12월 23일.

49) 박태균, 앞의 책(1984), 130~138쪽.

상에 반대하면서 총선거와 선거 이후에 수립될 중앙정부에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⁰⁾ 한독당은 총선거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당에서 제명하고 단독정부에의 불참을 재천명하였지만, 남북협상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에서 각기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한독당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당의 이념적 지주였던 조소앙이 대한민국정부 내에서 새로운 야당 건설을 주장하면서 한독당에서 탈당하고 사회당을 창당함으로써 한독당의 당세는 더욱 약화되었다. 한독당은 1949년 이후에도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당의 중심이었던 김구가 암살당하자 그 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구 사후 한독당은 조완구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지만,⁵¹⁾ 6·25전쟁 당시 조완구·嚴恒燮 등 한독당 핵심인물들이 남북당함으로써 그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다.

(3) 이승만

식민지시기의 대부분을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이승만은 8·15 직후 국내에서의 활동을 위해 조기 귀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한인 독립운동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하여⁵²⁾ 미국무부는 이승만의 귀국비자를 쉽게 내 주지 않았다. 이승만은 8·15 직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였다. 이승만은 입국과정에서 일본에 있었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과의 회합을 추진하였다. 소련과의 타협을 통한 한국문제의 해결보다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맥아더 사령관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⁵³⁾

이승만은 귀국에 앞서 동경에 들려 맥아더 및 주한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John R. Hodge)와 회합을 가졌다.⁵⁴⁾ 이 자리에서는 38선 이남에서 약세

50) 《조선일보》, 1948년 5월 29일.

51)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 1950), 220쪽.

52) 고정휴, <제2차 세계대전기 재미한인사회의 동향과 주미외교위원부의 활동>(《국사관논총》 49, 국사편찬위원회, 1993) 참조.

53) 정병준, <해방직후 이승만의 귀국과 동경회합>(《한국민족운동사연구》, 우송조동결선생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7) 참조.

를 보이고 있었던 우익세력들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승만은 맥아더 사령부와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세력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하고자 하였다. 맥아더 사령부와 미군정은 한국 내에서의 이승만의 명망을 이용하여 좌익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었던 우익세력들을 강화하고자 하였다.⁵⁵⁾ 이것이 1945년 10월 중순에 계획된 ‘한국인민행정위원회(National Korean Peoples Executive Committee ; 이하 행정위원회)’ 계획이었다.⁵⁶⁾

동경회합을 마치고 이승만이 귀국한 것은 1945년 10월 16일이었다. 일본이 패망한 지 두 달만이었지만, 임시정부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귀국하였다. 이승만의 귀국은 38선 이남의 정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구한말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이후 YMCA·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익의 모든 정치세력들은 이승만을 자신들의 정당이나 단체에 정치적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였다. 후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좌익을 대표하고 있었던 인공은 이승만이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인공의 수반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어떠한 정당·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이승만은 국내에 뚜렷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할 경우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어려웠다. 물론 식민지시기 국내에 興業俱樂部를 중심으로 하여 이승만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⁵⁷⁾ 8·15 직후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인사들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승만은 귀국 직후 정치활동보다는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이 맥아더 장군과 하지 장군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⁵⁸⁾ 이것은 우익뿐만 아니라 좌익과

54) 우남실록편찬위원회, 《우남실록》(1976), 56~58쪽.

55) 도진순, 앞의 책, 42~45쪽.

56) 〈주일 정치고문(앳치슨)이 국무장관에게(1945년 10월 15일)〉(김국태 역, 앞의 책), 104쪽. 행정위원회 계획은 동년 11월 중순 하지의 정치고문이었던 랭던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는데, 이 시기에 계획의 핵심은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의 임시정부였다(〈주한 정치고문(랭던)이 국무장관에게(1945년 11월 20일), 김국태 역, 같은 책, 150~153쪽).

57) 정병준, 《이승만의 독립노선과 정부수립운동》(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133~169쪽.

지도 미군정에 대한 협조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좌우익을 아우르는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승만의 정치적 전략이었다.

이승만의 이러한 전략은 미군정의 전략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이승만은 곧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협의체 조직에 착수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승만의 발언은 당시 그가 추진하고 있었던 정치조직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을 군정부에서는 초조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 군정부에서 이 회의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대내·대외관계에 있어서 이 기관을 경유하게 하여 이 기관을 권위있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 정부가 승인될 때까지의 과도기관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민의를 대표하도록 되는 것을 군정당국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輓近 개최될 모스크바(莫斯科)의 각국 외상회의의 관계가 우리의 문제에 심대한 것이 있는데 이 회의의 구성이 지연되어 유감이나 힘써 速進하도록 합시다(〈독립촉성중앙협의회록-1945년 12월 15일〉,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 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 서울대 출판부, 1997, 49쪽에서 재인용).

이승만은 미군정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일개 정당보다는 많은 정당·사회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체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미 국내에서 진행 중이었던 정계통합의 노력을 이용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치세력들의 통합을 위한 조직으로 ‘各政黨行動統一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건국동맹·국민당·한민당·조공 등 당시의 대표적인 좌우익정당·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이 단체를 모체로 하여 1945년 10월 23일 각 정당 대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大韓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결성하였다.⁵⁹⁾

독촉중협은 명실상부한 좌우익의 정당·사회단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몇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독촉중협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親日派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였다. 조공과 건국동맹 등 좌익세력들은 독촉중협의 조직에 친일파를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식민지시기부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58) 이승만이 귀국 직후 했던 주요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진순, 앞의 책, 44쪽 참조.

59) 《매일신문》, 1945년 10월 25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친일파 문제와 관련하여 조공과 같듯이 일어나자 反共에 뿌리를 둔 자신의 정치노선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하였다.⁶⁰⁾ 조공은 독촉중협에서 탈퇴하였고, 이승만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관념’이란 방송연설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신념을 발표하였다.⁶¹⁾ 11월 말 건국동맹의 후신인 조선인민당이 독촉중협에서 탈퇴하자, 독촉중협은 좌익을 모두 배제한 우익 정치세력만의 단체로 전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이승만이 귀국 이후 뚜렷한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동단결론’과 ‘반공’은 그가 내세운 정치노선이었는데, 이것은 많은 정치세력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국토 분단이라는 국난을 앞에 놓고 38선이 더 굳어지기 전에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외투쟁을 벌이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동단결론’을 주장하는 이유였지만,⁶²⁾ 8·15 직후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친일파 문제에 대한 애매한 태도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결집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8·15 직후 많은 대중들이 좌익의 정치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공’을 축으로 한 그의 신념 역시 정치세력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⁶³⁾

두 번째 문제는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좌익세력들이 탈퇴하면서 1차적인 정치적 위기를 맞이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귀국으로 2차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승만의 명성 못지않게 임시정부는 당시 한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익 정치세력들은 좌익의 인공에 대응하여 ‘임시정부의 추대’를 공식적인 정치노선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익 정치세력들이 독촉중협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60) 귀국 초기에는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해 하등의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좌익세력까지도 아우르는 정치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61) 《자유신문》, 1945년 11월 8일.

62) 이인수, 《대한민국의 건국》(초출, 1988), 58쪽.

63) 구한말 이래로 이승만은 기독교국가 건설, 민주공화제정부의 수립, 반공보루의 구축, 평등사회의 실현 등의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다(유영익, <이승만의 건국사상>, 《한국사 시민강좌》 17, 일조각, 1995). 그러나 8·15 이후의 정치활동 속에서는 반공사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

정부로 추대하기 위한 정치노선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독촉중협이 출발 단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정치세력들을 포괄하거나, 좌익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시정부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다.⁶⁴⁾

임시정부가 귀국한 11월 말 이후 이승만은 정치적인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의 통합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독촉중협은 정치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독촉중협에 임시정부를 포괄하고자 하였지만, 임시정부는 독촉중협과의 연합보다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인정받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공의 제의에 의해 인공과의 합작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임시정부 내의 중도파세력들은 독촉중협의 활동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이승만의 반공노선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하였다.⁶⁵⁾

임시정부의 귀국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던 이승만에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3상회의 결정서의 발표였다. 식민지시기에 ‘위임통치론’을 발표하여 비난받은 바 있었던⁶⁶⁾ 이승만은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자 반탁운동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승만은 반탁운동 과정을 통하여 좌익을 배제하고 우익진영 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민주위원의 성립이었다. 이승만과 독촉중협은 임시정부가 조직한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였고, 모종의 정치공작을 통하여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부위원회를 민주위원으로 개편하였다. 이승만은 미군정의 정치고문으로 내한하였던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의 공작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의 연합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⁶⁷⁾

64) <주한 정치고문(랭던)이 국무장관에게(1945년 11월 20일)>(김국태 역, 앞의 책, 150~153쪽). 이 전문에서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재편계획을 내놓았다.

65) 이승만의 반공노선을 비난한 것은 임시정부내 成周寔이며, 이 발언은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에 실렸다.

66)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한림대학교 출판부, 1989).

67) 도진순, 앞의 책, 68~72쪽; 정병준, <이승만의 정치고문들>(《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8), 174~175쪽.

미·소공동위원회에 대비하여 민주위원이 조직되고, 이승만이 민주위원의 의장에 취임하면서 우익 정치세력의 주도권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승만은 지방순회에 들어갔다. 이 시기의 지방순회는 ‘반공’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이승만의 존재가 미·소공동위원회의 진행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지만,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이기도 했다.⁶⁸⁾ 이승만은 국내에 이렇다 할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를 대비하여 국내에 정치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은 귀국 직후 ‘大韓經濟輔國會’의 결성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⁶⁹⁾ 적극적인 정치적 조직은 아직 미흡한 상태였다. 이승만은 지방순회를 앞두고 1946년 4월 大韓獨立促成國民會(이하 독촉국민회)의 지부장회의를 열어 자신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조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⁷⁰⁾

이승만의 지방순회를 계기로 하여 독촉국민회의 지방조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승만은 경찰과 우익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독촉국민회의 조직원수는 1946년 2월 51만여 명에서 이승만이 지방순회를 시작한 초기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46년 6월 이후에는 700만 명 정도로 발표되었다.⁷¹⁾

독촉국민회와 더불어 임시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되었던 政治工作隊 역시 이승만의 중요한 정치기반이 되었다.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이었던 申翼熙가 중심이 되어 1945년 말에 조직된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의 산하에 조직

68) 도진순은 이승만의 지방순회가 ‘미국의 무기인 민주의원 의장이 소련의 무기인 인민위원회를 격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도진순, 위의 책, 81쪽).

69) 정병준, <대한경제보국회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258~275쪽.

70) 《서울신문》, 1946년 4월 11·12일. 독촉국민회는 1946년 2월 독촉중협과 반탁투쟁위원회의 통합으로 조직되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독촉국민회가 결성된 초기에는 김구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김보영,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4, 10쪽).

71) 도진순, 앞의 책, 101쪽 <표 2>에서 재인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국민회에 합류하였다. 임시정부 내에서 비주류 계열에 속했던 신익희는 임시정부보다는 이승만과의 결합을 추진하였고, 정치공작대의 성원들은 1946년 3월 1일 독촉국민회의 청년조직으로 결성된 大韓獨立促成國民會青年隊(이하 국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청은 이승만의 호위대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승만의 지방순회와 독촉국민회의 조직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⁷²⁾ 정치공작대는 1946년 6월의 독촉국민회 전국대표대회에서 독촉국민회에 합류하였다.⁷³⁾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직후인 1946년 6월 3일 ‘單獨政府樹立’ 발언을 통해 정계를 뒤흔들었던⁷⁴⁾ 이승만은 民族統一總本部(이하 민통)를 결성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 대응하는 우익세력의 연합체를 조직하였다. 이승만은 독촉국민회와 민통을 중심으로 우익 정치세력을 장악하는 한편, 미군정의 좌우합작위원회 추진에 맞서고자 하였던 것이다.

좌우합작위원회가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미국을 방문하여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12월 2일 서울을 출발한 이승만은 동경에서 맥아더와 회담한 후 미국으로 향하였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식민지시기부터 자신을 도왔던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행정부의 인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이승만은 귀국하기 직전인 1947년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내지 60일 이내 남한에 과도적 독립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⁵⁾ 이제 이승만은 1945년의 동경회합 이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치노선, 즉 ‘38선 이남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승만은 귀국한 이후 우익 정치세력 내부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남한에서의 단독과도정권의 수립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면서 그의 활동이 잠시 주춤했었지만, ‘韓國民族代表者會

72)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삼성문화개발, 1989), 152쪽.

73) 박진희,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역사와 현실》 21, 한국역사연구회, 1996), 199~200쪽.

74)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

75) 《경향신문》, 1947년 3월 23일.

도진순, 앞의 책, 131쪽.

議'를 조직하여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활동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그는 '장덕수 암살사건'을 계기로 하여 임시정부 계열과 결별하면서 한국문제의 유엔이판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임시정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가운데, 이승만은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⁶⁾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이승만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독촉국민회와 한국민족대표자대회였고,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政黨社會團體代表者大會' 역시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⁷⁷⁾ 8·15 이후 38선 이남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정치지도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총선거에 참여한 이승만은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45년의 '반공' 담화, 1946년 6월의 '단정' 발언, 1947년 3월의 '단독과도정부' 발언 등을 통해 많은 비난을 받은 이승만이었지만, 1947년 이래 조성된 세계적 상황 및 한반도 내에서의 냉전의 심화는 결국 38선 이남에서 이승만의 정치적 집권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좌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좌익 정치세력은 8·15 직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조직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시기 이래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해방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친일파의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15 직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좌익 정치세력은 크게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 등이 있다. 이 세력들은 북한에 있는 좌익 정치세력들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38선 이남에서 좌익의 정치활동을 주도하였다.

좌익 정치세력은 8·15 직후 建國準備委員會와 朝鮮人民共和國의 조직을 통해 공동의 정치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토지개혁이나 친일파

76) 《동아일보》, 1948년 1월 27일.

77) 《조선일보》, 1948년 1월 18일.

문제에 있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으며, 미군정에 대해서도 협조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1946년 초에도 ‘모스크바 3상협정에 대한 지지’ 노선을 선언하면서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동전선은 1946년 2월 民主主義民族戰線의 조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좌익 정치세력들은 이미 8·15 직후부터 갈등의 소지를 내부에 안고 있었다. 좌익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민전) 내에서 조선공산당과 온건좌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이 주도권 장악에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온건좌파들은 좌익 정치세력의 연합체에서 점차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6년 중반 미군정의 지원하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공산당은 소위 ‘新戰術’을 채택하여 미군정에 대한 강경한 투쟁노선을 채택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반면, 온건한 좌파들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성공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갈등의 정점은 三黨合黨에 있었다. 삼당합당은 좌파의 대표적인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가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추진한 것이었는데, 새로 조직될 대중정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 정당이 분열된 것이었다. 결국 삼당합당을 통해 南朝鮮勞動黨이 창당되었지만, 좌익 정치세력을 모두 포괄하는 대중정당이 될 수 없었다. 해방정국에서 좌파만의 주도권을 강조한 조선공산당과, 우익과의 정치적인 결합을 추진하였던 온건좌파가 갈라선 것이었다.

1947년 이후 좌익 남조선노동당은 당세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1948년을 기점으로 남조선노동당의 상층부 인사들은 대부분 38선 이북으로 정치적 무대를 옮겼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참여하였다. 온건좌파세력은 중도파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38선 이남에서의 유엔 감시하의 총선을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시도하였다. 온건좌파세력 중 일부는 1948년 이후 38선 이북의 정권에 참여하였으며, 38선 이남에 잔류한 세력들은 1950년의 제2대 총선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였다.

(1) 조선공산당

식민지시기부터 朝鮮共產黨(이하 조공)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독립을 위한 투쟁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였다. 비록 조공이 1928년 해체된 이후 1945년에 이르기까지 당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조합·농민조합 등 기층 대중으로부터의 조직활동, 당 재건을 위한 활동, 그리고 소규모 그룹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식민지시기 말기 전향한 공산주의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8·15의 시점까지 전향하지 않고 투쟁한 공산주의자들도 많았다. 일반 국민들은 공산당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로 인식하였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이 식민지시기 이래로 독립운동 선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벌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단결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지만, 각각의 공산당은 전체 공산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하나의 파벌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⁷⁸⁾ 이 때문에 1928년 코민테른은 공산당의 해체를 지시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이 해체된 이후에 전개된 당재건운동 역시 파벌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8·15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즉, 식민지시기 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난 파벌간의 갈등은 8·15 이후 전개될 공산주의운동의 특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8·15 이후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공산주의자들은 서울계와 화요회 계열의 일부였다. 서울계의 이영·정백, 화요회계의 이승엽·趙東祐·曹一明, 상해파⁷⁹⁾의 徐重錫 등은 8월 15일 밤에 서울 종로의 장안빌딩에 모여 공산

78) 1920년대부터 형성된 공산주의자들의 파벌은 크게 화요계(朴憲永·李承燁·金燦·曹奉岩 등), 서울계(李英·鄭栢·李廷允·崔益煥), ML계(權泰錫·河弼源·崔昌益), 콤그룹계(李觀述·李鉉相·金三龍·鄭泰植) 등이 있었다. 이들 파벌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공산주의운동 내에서 갈등, 대립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79) 李東輝가 1919년 상해에서 만들었던 高麗共產黨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상해파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을 결성하였다(세칭 '장안파공산당'). 당 결성시 책임비서에는 서울계의 이영, 제2비서에는 화요회계의 이승엽(후에 ML계의 최익한)이 선임되었다.

장안파공산당을 결성한 인물들은 8·15 직후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패망하자 곧바로 공산당을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1940년대 초반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운동을 그만두거나, 전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8·15의 순간까지 공산주의운동을 계속했던 인사들에 비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화요회 계열이면서 8·15 직전 경성콤그룹(이하 콤그룹)에서 활동했던 박헌영은 8월 19일 서울에 올라와 같은 콤그룹 계열의 김삼룡과 함께 세를 규합하였다. 박헌영은 다음 날 당 재건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후 조공의 정치노선이 되는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이하 8월테제)를 발표하였다. 재건위원회가 발족되자 장안파공산당은 8월 24일 당을 해체하고, 9월 8일 열성자대회를 열어 재건위원회와의 통합문제를 논의하였다. 열성자대회는 장안파공산당이 주도하여 열었지만, 회의 내용의 결과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모든 공산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⁸⁰⁾

9월 11일 재건준비위원회는 조공을 재건하였다. 9월 11일에 발표된 조공의 주요 부서와 간부는 다음과 같다.

총비서 : 박헌영(화요회계, 콤그룹)

정치국 : 박헌영 · 金日成 · 李舟河 · 武亭(독립동맹) · 姜進(ML계) · 최창익(ML계, 독립동맹) · 이승엽(화요회계) · 권오설(화요회계)

조직국 : 박헌영 · 이현상(콤그룹계) · 김삼룡(콤그룹계) · 김형선(화요회계)

서기국 : 이주하, 許成澤(콤그룹계) · 金台俊(독립동맹, 콤그룹계) · 李龜璵(콤그룹계) · 李順今(콤그룹계) · 姜文錫(콤그룹계)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33쪽에서 재인용).

위의 주요 부서 인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건된 공산당은 화요회 계열과 콤그룹 계열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화요회 계열이나 콤그룹 계열에 소속

80) 김남식, 《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26~33쪽.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시 귀국하지 않았거나 38선 이남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김일성·무정·최창익밖에 없었다. 이러한 당의 구성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 내부에서 반발이 없을 수 없었다. 조공은 출발에서부터 재건을 주도한 두 파벌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두 파벌의 당 운영 및 조직 장악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불씨를 안게 되었다.

조공이 정치노선으로 발표한 8월테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9월 20일에 다시 발표되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정세

해방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투쟁적 산물이기보다는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들인 소·영·미·중 등 연합국세력에 의해 실현되었다. 2차대전에서 소련의 승리와 그 국제적 지위의 향상은 우리에게 혁명 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2) 조선혁명의 현단계

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있다. 주된 과업으로서는 민족의 완전 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에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제국주의자와 민족적 반역자와 대지주의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몰수하여 이것을 토지 없는 또는 적게 가진 농민에게 분배할 것이요 토지혁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조선인 중 소지주와 토지에 대하여서는 자기 경작토지 이외의 것은 몰수하여 이것을 농작자의 노력과 가족의 인구수 비례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요 조선의 전 토지는 국유화한다는 것이요 국유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농민위원회 인민위원회가 이것(몰수한 토지)을 관리한다.

3) 조선 공산주의의 현상과 결점

이러한 모든 곤란한 환경하에서도 어쨌든 국제노선을 대중 속에서 실천하는 진실한 의미의 콤팩트의 공산주의운동이 비합법적으로 계속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37년 이래 전쟁시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과거 파벌들은 모든 운동(합법적 비합법적)을 청산하고 일본제국주의자 앞에 더욱 온순한 태도를 표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과거의 파벌분자와 그 거두들이 전시하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적 탄압을 두려워서 계급운동을 청산한 변절자 일파(전향파)가 다량적으로 산출된 것이었다.

4) 우리의 당면 임무

①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

노동자들의 불평불만을 이용, 그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며 그들을 조직화해야 한다. 농민들에게는 토지분배와 봉건주의적 잔재의 청산을 위해 노동

제급과의 동맹을 강화토록 하며, 소작료의 3·7제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청년운동은 종래 소부르주아적 가두층을 중심한 운동으로부터 일반 근로 청년운동을 전개할 것과 공산주의 이론의 교양 사업을 자기 과업으로 삼는 한편, 민족 개량주의 청년단체와의 일시적 통일전선을 형성, 그들을 쟁취해야 한다.

② 조직사업

당 조직을 노동자 농민들 위에서 건설하며, 기초조직을 공장에 두어야 한다. 당 도시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당 조직의 대표로서 전국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집행위원을 선거하고 중앙위원회를 조직한다.

③ 옳은 정치노선을 위한 양면 작전투쟁을 전개할 것.

④ 프롤레타리아의 해계모니를 위한 투쟁.

⑤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으로 수립된 ‘인민정권’을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

5) 혁명이 높은 계단으로 전환하는 문제

조선혁명은 그 발전에 따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보다 높은 단계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단계는 일부 급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 단계가 아니다.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 김남식 편, 《남로당 연구 자료집(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8~21쪽).

8월테제의 특징은 먼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여한 4개국을 모두 진보적인 국가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38선 이남을 점령하였던 미국을 진보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국제정세를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미군정이 인공을 부인하고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 재편계획을 계속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조공이 미군정세의 협조노선 및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총체적 지지노선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근거한 것이었다.⁸¹⁾

둘째로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인 및 대지주가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중소지주가 소유한 토지까지도 ‘자기 경작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를 몰수할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같은 아시아 국가였던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중농과 부농의 일부의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고

81) 8월테제 및 조공의 대미관에 대해서는 김남식·심지연 편저, 《박헌영 노선비판》(세계, 1986)의 제3장 ‘박헌영의 역사인식과 대미관’ 참조.

있었다는 점과 다른 점이다. 또한 조공과 같은 좌익계열의 조선인민당이 조선인 지주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점과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문제와 관련된 애매한 조항도 나타나고 있다.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농민에 대한 토지분배와 토지국유화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⁸²⁾ 아울러 대자본가를 타도할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중소 규모의 자본가와 민족주의적 성향의 자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⁸³⁾ 이러한 정치노선은 이후 조공이 우익 정치세력과의 연합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부분을 뒷받침해 준다.

셋째로 높은 단계의 혁명으로의 진행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8·15 직후 대부분의 좌익 정치세력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또는 자산계급성 민주주의 혁명, 연합성 신민주주의)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당이나 조선신민당에서 더 높은 단계의 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반면, 조공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결론을 대신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토지개혁 및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두려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던 우익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좌익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어렵도록 만드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넷째로 <현정세와 우리의 과업>이 정치노선을 천명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 중 상당한 분량을 파벌투쟁 및 조직문제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콤포그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8·15 직전까지 일본에 전향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벌투쟁과 조직문제를 강하게 부각시킨 것은 식민지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파벌들을 당의 핵심조직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노선에서 파벌문제를 중요한 내용으로 했

82) 조공의 이론가 중 한 사람인 강성재는 토지국유화론이 당장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하여 집단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배를 통해 경작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강성재, <현단계의 조선의 토지문제>, 《과학전선》, 1946년 2월호, 70~71쪽). 조공의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김정, <해방직후 조선공산당의 경제정책>(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16~32쪽 참조.

83) 김남식·심지연 편저, 앞의 책(1986), 37쪽.

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 당 지도부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⁸⁴⁾

당을 재건하고 8월테제를 발표한 조공은 1945년 9월 6일 발족한 인공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인공과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정권기관으로 설정하고, 미군정으로부터 정권기관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도·군·면 인민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자 조공은 당분간 미군정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⁸⁵⁾ 경제적으로는 우선 심각한 소작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3·7제 소작료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인민위원회가 지역별 조직으로 운영되었다면 조공은 계급·계층별로 조직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 내에 침투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勞動組合全國評議會(이하 전평)’였다.⁸⁶⁾ 1945년 9월 26일에 조직된 전평은 조공의 외곽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은 11월 5~6일 동안 열린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잘 나타난다. 결의문 4항 중 제1항은 “이 회의를 가져오게 한 조선 무산계급의 수령이요, 애국자인 박헌영 동무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었고, 제3항은 “조선 무산계급운동의 교란자 이영 일파를 단호히 박멸할 것”, 제4항은 “조선 민족통일운동전선에 대한 박헌영 동무의 노선을 절대 지지할 것”이었다.⁸⁷⁾

전평 이외에 全國農民組合總聯盟(이하 전농)⁸⁸⁾·全國靑年團體總同盟(이하 청총)·全國婦女總同盟·國軍準備隊·學兵同盟 등이 외곽단체 또는 조공이 주도권을 장악한 단체로서 조직되었다. 그런데 청총의 경우에는 조공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임시정부 계열과 조선인민당 계열의 청년들이 상당

84) 8월테제가 발표된 이후 박헌영 계열이 아닌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노선을 담은 글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조선혁명의 현단계, 방향 및 전망—로레타리아트의 궁극적 승리를 위하여>(일명 산로테제)라는 글은 일본에서 귀국한 공산주의자인 임해에 의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방3년사 연구회, 《해방전국과 조선혁명론》(대아, 1988), 85~98쪽 참조.

85) 김남식, 앞의 책(1984), 117~118쪽.

86) 전평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태승, <미군정기 노동운동과 전평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참조.

87) 김남식, 앞의 책(1984), 65쪽.

88) 전농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혜숙, <미군정기 농민운동과 전농의 운동노선>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참조.

수 참여하고 있었으며,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우익계열 인물들이 참여하였으나, 점차로 조공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익계열의 청년단체와 대립하게 되었다.

조공은 인공과 외곽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인공을 둘러싼 미군정과의 대립으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미군정 이외의 다른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공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45년 10월 10일 인공에 대한 부인성명을 발표한⁸⁹⁾ 이후 미군정은 인공의 이름, 즉 ‘인민공화국’에서 ‘國’자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군정은 1945년 11월에 열린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 ‘국’자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 대회의 최종일 회의에서 ‘국’자 삭제 요구는 거절되었다.⁹⁰⁾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12월 12일 전격적으로 인공 부인성명을 발표하였다.⁹¹⁾

조공의 활동은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인공의 이름에서 ‘국’자를 삭제하는 것은 8·15 직후부터 추구해 왔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정과의 협조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정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하지가 ‘인공 부인성명’을 발표한 시점은 인공이 임시정부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인공이 해체된다면 임시정부와 통합을 추진할 모체와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3상회의 결정서로 인해서 조공은 더 이상 인공의 문제에 매달릴 수 없었다.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임시정부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공문제가 재차 언급되었지만,⁹²⁾ 3상회의 결정서가 조성한 새로운 상황으로 인하여 인공은 더 이상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 3상회의 결정서의 발표로 인하여 정치상황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공은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되

89) 《매일신보》, 1946년 10월 10일.

90) 김남식, 앞의 책(1984), 139~144쪽.

91) 《자유신문》, 1945년 12월 13일.

92) 《조선인민보》, 1945년 12월 30·31일, 1946년 1월 2일.

었다. 하나는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총체적 지지’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박헌영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것이었다. 조공은 1946년 1월 1일 오후 또는 1월 2일부터 신탁통치에 대한 태도가 변하였다. 1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우익의 반탁투쟁을 민족분열적 행위로 규탄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신탁통치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월 1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조공의 기자단 회견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⁹³⁾ 그러나 1월 2일 인공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3상회의 결정서는 조선 민족해방을 확보하는 진보적 결정으로서, 이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1월 3일 추운 날씨에 10만여 명이 모였다는 서울시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공의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지지 입장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반탁대회로 알고 있었는데, 대회는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절대 지지를 표명했던 것이다.⁹⁴⁾

이에 더하여 1946년 1월 5일에는 박헌영이 내외신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소련의 1국신탁제를 지지하며 향후 10~20년 이내에는 소련연방에 합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박헌영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인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박헌영의 주장이 옳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박헌영 기자회견 파문은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따라서 반탁운동은 반소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우익 정치세력의 정치공세를 합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소련의 타스통신이 1월 22일 3상회의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였지만,⁹⁵⁾ 우익진영의 반탁공세는 계속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조공 및 박헌영의 정치적 체면이 상당히 실추되었다.

93) 《조선일보》, 1946년 1월 2일.

94) 서중석, 앞의 책, 160~161쪽. 조공의 입장 변화는 소련의 입장을 전달받은 박헌영이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이루어졌다.

김남식, 앞의 책(1984), 211쪽.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1946〉(《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251~254쪽.

95) 《동아일보》, 1946년 1월 25일.

조공은 우익 정치세력들이 반탁운동을 계기로 하여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면서 세를 확장해 나가자 좌익 정치세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조직을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세력들을 모두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조직이라고 표명하였지만, 실제로는 반탁운동에 반대하는 좌익 정치세력들의 집결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1946년 1월 19일에 시작된 조직 작업은 준비위원 발표, 선언문 초안 작성 등을 거쳐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의 결성으로 마무리되었다.⁹⁶⁾

민전의 결성을 통해 조공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선 8·15 직후부터 표방해 왔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한 것이다. 8월테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공은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은 좌우익의 대립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4당회합·5당회합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조공은 민전의 결성을 통해 민족통일전선 결성의 과제를 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전의 결성이 조공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민족통일전선’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조공이 처음 민전을 계획하면서 우익정당 및 임시정부의 대표를 포괄하려고 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민당 및 임시정부 내 일부를 포괄하고자 했던 시도가 실패하였다. 즉, 민전이 민족주의세력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민전은 3상회의 결정서를 지지하는 좌익 정치세력만의 집결체에 불과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 우익 정치세력 중에서는 임시정부에서 탈퇴한 일부 朝鮮民族革命黨 계열 인사들이 합류했을 따름이었다.

둘째로 민전의 결성으로 인공문제가 해결되었다. 인공문제는 1945년을 통해 조공과 미군정이 대립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자의 삭제를 둘러싼 논쟁은 조공의 대미 협조노선의 고수를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조공은 민전을 조직하면서 인공을 흡수함으로써 ‘국’자의 삭제를

96) 민전의 결성과정에 대해서는 류정임, <해방직후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형성과 그 성격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40~43쪽 참조.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게 되었다. 조공이 공식적으로 인공을 해체한 적도 없으며, 인공을 부인한 적도 없었지만, 민전이 출범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인공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공이 인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조공에게 있어서 인공은 뜨거운 감자였지만, 해방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민중들의 인공에 대한 지지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조공이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공에 대한 조공의 태도를 바라보는 다른 정치세력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조공은 대중투쟁이 전개되거나 좌우합작을 비롯한 정치적인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인공과 인민위원회의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났다.

이후 조공은 민전을 중심으로 하여 미·소공동위원회 성공을 위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민전은 좌익 정치세력의 결집체였지만, 조공은 민전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민전의 모든 활동은 조공의 통제를 받았다. 이 점이 조공 내부, 그리고 민전 내부에서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즉,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내의 일부 파벌이 당의 조직과 민전을 장악한 데 대한 내부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45년 말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지구당의 반발은 민전의 결성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46년 2월 조공의 중앙당을 지지하는 북조선공산당에 대해 반박하는 메시지가 조공전라북도위원회에 의해 전달되었으며,⁹⁷⁾ 민전 결성 직후 개최된 ‘조선공산당 중앙 및 도당 대표동지연석회의’에서는 중앙당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⁹⁸⁾ 민전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하여 조선인민당의 여론형을 비롯한 중도좌파 인사들은 민전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또한 유명한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은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직후 조공 및 민전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고 공산주

97) <북선분국 동무들의 뗏세지와 우리의 주장>(《북한관계사료집》X, 국사편찬위원회, 1990), 156~162쪽.

<북조선분국의 상무위원회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역사비평》가을호, 역사비평사, 1991), 423~424쪽.

98) <조선공산당 중앙 및 도당 대표동지 연석회의 의사록>(《역사비평》가을호, 역사비평사, 1991).

의운동으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였다.⁹⁹⁾ 조공의 활동은 민전을 중심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분열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미·소공동위원회 휴회 직후 미군정의 3개 좌익신문 폐간, 조공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 등으로 조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나갈 때 조공은 소위 ‘신전술’을 채택하면서 노선을 전환하였다. 즉, 미군정에의 협조노선에서 미군정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전술로 전환한 것이었다. 조공은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에 대해서 미군정보다는 우익세력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다가, ‘신전술’의 채택을 계기로 하여 미군정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시작하였다. 1946년의 ‘9월총파업’과 소위 ‘10월항쟁’은 모두 ‘신전술’하에서 나온 대중적 투쟁이었다.

조공의 ‘신전술’은 미군정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식변화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미·소공동위원회 휴회 이후에 진행된 좌우합작위원회 및 삼당합당 과정에서 조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10월에 계획되었던 총파업은 삼당합당의 중요한 고비였던 9월 말로 앞당겨졌다. 조공은 대중적인 동원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로써 좌익 정치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조공은 8·15 직후 가장 강력한 정당이었다. 그러나 인공의 결성, 3상회의 결정서 지지, 민전의 결성, 신전술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었다. 조공은 삼당합당을 통해 南朝鮮勞動黨을 조직하면서 약화된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당내의 분열은 심각한 상황이었고, 좌익 정치세력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였다. 좌익 정치세력은 삼당합당을 통해 오히려 社會勞動黨과 남조선노동당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2)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

朝鮮人民黨은 呂運亨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당이다.¹⁰⁰⁾ 여운형은 일제의

99) 박태균, 《조봉암 연구》(창작과 비평사, 1995).

100) 여운형의 명성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기도 일부 마을의 경우 8·15 직후 실시된 3·7제 소작료 문제를 조공의 박헌

패망과 건국에 대비하기 위해 1944년 8월에 비밀결사인 朝鮮建國同盟(이하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¹⁰¹⁾ 건국동맹은 8·15 직후 건준으로 개편되어 일시적으로나마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¹⁰²⁾ 건준은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 8·15 이후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로 조직되었다. 각 지방에는 건준의 지부가 구성되었으며, 임시적인 자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공의 핵심인사들이 건준에 참여하면서 건준의 주도권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건준은 3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조공의 인사들이 장악하였으며, 안재홍을 비롯한 중도우파 정치세력들은 건준에서 탈퇴하였다. 건준은 미군의 진주를 앞두고 인공으로 다시 개편되었는데, 조공이 인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인공이 좌우를 망라한 민족적 기관이 아닌 좌파만의 기관으로 전락하자 여운형은 더 이상 인공에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¹⁰³⁾ 건국동맹은 1945년 10월 10일 정당으로서의 재출발을 선언하였고, 동년 11월 조선인민당이 결성되었다.¹⁰⁴⁾

영이나 미군정이 아닌 여운형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여운형을 지지했다고 한다(이용기, <마을에서의 전쟁 경험—경기도지역의 마을사재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은 민중에게 무엇이었나》, 역사문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 2000, 9쪽).

101) 조선건국동맹에 대해서는 정병준, <조선건국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0, 한국사연구회, 1993) 참조.

102) 건준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期함.
2.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매일신보》, 1945년 9월 3일).

103) 여운형은 미군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공의 조직보다는 건준의 존속이 외교적인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준의 해체를 반대했다(이만규, 《여운형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223쪽).

104) 조선인민당을 결성하기 직전 여운형은 정치세력 통합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에서 인공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국민대회의 소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간담회 이후 조직된 ‘각정당행동동일위원회’에 여운형은 건국동맹의 대표로 합류하였고, 이 활동이 조선인민당 결성으로 이

조선인민당에는 高麗國民同盟・15회・人民同志會 등 정치단체가 참여하였고¹⁰⁵⁾ 11월 12일 결성대회, 11월 25일 확대위원회를 통해 중앙조직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초기 조선인민당의 조직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 계열의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무부장 李如星, 조직부장 李錫玖, 노동부장 金世鎔, 총무국장 李傑笑(일명 李基錫), 문화부장 黃雲, 당무부 위원 玄又玄, 재정부 위원 李林洙, 노동부 위원 金鎰鎔, 감찰위원장 金振宇 등 당의 핵심 인사들이 건국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었다.¹⁰⁶⁾

식민지시기 건국동맹이 전국적인 조직을 위하여 각 도의 책임자들을 임명했고, 지방에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했었기 때문에 조선인민당의 지방조직 건설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1945년 12월 부산지부의 결성을 시작으로 1946년 2월까지 광주·서울·대구 등 전국의 주요 지역에서 조선인민당 지부가 결성되었다. 1946년 7월까지 전국에 60개 지부가 결성되었으며, 결성을 준비 중인 곳은 44개였다. 당원수는 창당시 7만여 명이었던 것이 1945년 12월에는 12~13만 명으로, 1946년 4월에는 18만 명, 1946년 5월에는 30만 명이라고 발표되었다.¹⁰⁷⁾

조선인민당의 정책은 ‘계획경제제도의 확립’, ‘민족반역자 처리’, ‘주요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중소기업의 국가지도하에 자유경영’, ‘8시간 노동제’ 등 당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주장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정치세력, 특히 조선공산당과 차이가 있었다.

첫째로 강령의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조선인민당선언>을 통해 “기본 이념을 등한시하고 현실적 요청에만 얽매어 있는 것이 역사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행위라면 기본 이념에만 급급하여 그 현실적 과제를 무시하는 것도 역사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조선인민당 정치노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조선인민당의 이론가였던 김

어졌다(정병준, 《몽양여운형평전》, 한울, 1995, 151~152쪽).

105) 《조선인민보》, 1945년 11월 13일.

106) 정병준, 앞의 책(1995), 80~93쪽.

심지연, 《인민당연구》(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10~11쪽.

107) 심지연, 위의 책, 11~15쪽.

午星은 조선인민당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인민당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 인민의 정치적 결집체이며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 인민의 완전해방을 위한 정당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당은 좌익정당과 아무런 대립관계에도 서 있지 않다. … 오직 상이한 점은 좌익정당이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투사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데 반하여 인민당은 그 혁명세력을 전 인민층에서 집결하려는 것이다. … 인민당은 그 현실적 과제인 완전독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좌익정당과의 제휴뿐 아니라, 우익정당과도 공동전선을 취할 용의를 갖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독립의 실현은 어느 일당 전제하에는 성취할 수 없고 오직 각당 각파를 망라한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하는 데서만 가능할 것임으로써이다. 이리하여 조선인민당은 조선의 당면과제인 완전독립을 성취키 위해서는 좌우 양익을 공동전선에 서게 하는 매개적 역할까지 不惜하려는 자이다(김오성, <조선인민당의 성격>,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1권, 돌베개, 1986, 12~18쪽).

따라서 조선인민당에는 건국동맹과 마찬가지로 주로 우파의 진보적 민족주의자와 온건한 노선의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우파의 진보적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 소집을 계기로 하여 임시정부에서 탈퇴한 金元鳳·金星淑·張建相·成周寔 등이 대표적인 인사들이었으며, 이외에도 건국동맹기부터 참여했던 만주군 출신의 朴承煥, 李陸史 시인의 외숙인 許珪, 교육학자이자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투옥되었던 李萬珪, 柳麟錫 의병장 밑에서 의병으로 활동했으며 동양화가였던 김진우, 유명한 史學者였던 李相佰, 정치가이자 예술평론가였던 이여성 등이 참여하였다.¹⁰⁸⁾ 이결소·김세용·김오성·李貞求 등은 식민지시기 조공이나 노동단체 또는 소련 유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온건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조선인민당의 구성원들이 1946년 말의 삼당합당을 계기로 하여 여운형 계열과 조공 합류 계열로 분열되지만, 삼당합당 이전의 조선인민당 구성원들은 당의 통일, 합작노선을 충실하게 추종하였다.

둘째로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토지개혁 관련 조항이다. 즉, 정책에서 조선인민당은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몰수한 토지는 국영 혹은 농민에게 적의

108) 정병준, 앞의 책(1995), 87~91쪽.

분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무상분배는 당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중요한 점은 분배할 토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방식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공이 대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몰수할 것을 규정했던 데 비하여 조선인민당은 일본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친일파·민족반역자·전범자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조선인민당의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인민당의 노선〉에서도 ‘정책’에서 제시한 노선과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¹⁰⁹⁾ 이 점은 조공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토지집적과 관련해서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 규정이 없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치노선의 첫 번째 특징인 좌익과 우익을 아우르는 정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조선인민당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인민당은 ‘좌익과 우익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하여, 무상몰수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좌우익간의 갈등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¹¹⁰⁾

토지문제에 대한 조선인민당과 조공의 입장 차이는 궁극적으로 여운형이 주창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노선’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노선’은 좌익 정치세력들이 모두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여운형의 노선은 조공의 노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여운형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보수주의의 현옷을 벗어버리고 새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하였으며,¹¹¹⁾ 혁명의 수단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이었다.¹¹²⁾

그러나 ‘혁명’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당시의 사회구조 및 개혁과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주와 자본가계급을 철폐하고 노동자·농민을 위주로 한 ‘혁명’을 주장했던 조공과는 달리 조선

109) 조선인민당, 〈인민당의 노선〉(신문화연구소, 1946,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1에 수록). 〈인민당의 노선〉에서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보다 더 구체화된 부분은 ‘농업생산의 과학화와 농촌협동조합을 촉진’에 대해 규정한 것밖에 없다.

110) 《자유신문》, 1946년 6월 12일.

111) 여운형, 〈우리나라의 정치적 진로〉(《학병》 1권 1호, 1946), 5쪽.

112) 심지연, 앞의 책(1991), 29쪽.

인민당은 ‘부르주아적 산업혁명’을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근로계급의 미숙 때문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미숙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은 아직 토착자본이 형성되지 못하고 외래자본에 의한 기형적 반봉건적인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적 조건은 부르주아적 산업혁명, 즉 토지문제의 해결과 산업의 재편성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이다.¹¹³⁾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이 필요하다는, 즉 사회주의적인 혁명 또는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 파악의 중심을 노동자·농민에 두는 것과 ‘민족자본의 형성’에 두는 것은 현실 인식 상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정치노선하에서 조선인민당의 활동은 좌익과 우익세력의 정치적 합작에 중심이 두어졌다. 조선인민당 결성 직전에 열렸던 정당통일을 위한 모임에 참여했던 여운형은 이승만이 귀국하여 독촉중협을 조직하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가단체와 관련된 이견으로 독촉중협과 결별한¹¹⁴⁾ 여운형과 조선인민당은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을 계기로 하여 임시정부와 인공의 통합을 시도하였다.¹¹⁵⁾

임시정부의 고압적 자세로 인해서 임시정부와 인공의 통합 시도는 쉽지 않았으며,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면서 정당통합, 또는 좌우익 정치세력간의 합작을 위한 여운형과 조선인민당의 시도는 일시적인 좌절을 맞게 되었다. 임정을 중심으로 하는 반탁운동과 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 지지 진영간의 대립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 조선인민당이 통일위원회의 조직을 제안하고, 4당회의를 개최하였지만, 3상회의 결정서로 인해 조성된 반탁운동과 총체적 지지 진영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민당은 조공과 임정의 독선적 자세에 맞서서 4당회의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4당회의의 결렬은 조선인

113) 조선인민당, 앞의 글, 26~28쪽.

114) 《자유신문》, 1945년 11월 7일.

《조선인민보》, 1945년 12월 11일.

115) 심지연, 앞의 책(1991), 50~52쪽.

민당의 향후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자 반탁의사를 표명했던¹¹⁶⁾ 조선인민당은 1946년 1월 2일 조공이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자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당의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지지는 조공의 ‘총체적 지지’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조선인민당은 3상회의 결정서의 정신과 의도는 지지하나 신탁통치라는 용어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¹¹⁷⁾ 조선인민당은 1월 5일 이여성의 답화를 통해 3상회의 결정은 조선의 정치적·경제적 건전한 발전을 원호하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감사히 생각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이지만, 신탁통치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구속되어 3상회의 결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¹¹⁸⁾ 여운형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3상회의 결정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덮어놓고 피로써 싸운다는 것은 경솔한 일이며, 또한 세계문제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중에는 지지할 점도 있고 배척할 점도 있으므로 덮어놓고 지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¹¹⁹⁾

조선인민당이 3상회의 결정서를 지지하고 반탁의 입장을 철회한 기본적인 이유는 국제적 제약성 때문이었다.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타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합국들의 결정인 3상회의에 동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인민당은 3상회의 결정서의 기본적인 내용도 신탁통치가 아니라 평화를 보장하려는 진보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민족에 부과된 신탁통치라는 내용도 국제평화 원칙에서 어쩔 수 없이 초래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²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반탁운동세력이 주도하였던 비상국민회의에의 참여를 거부한¹²¹⁾ 조선인민당은 민전에 참여하였다. 민전은 조공과 조선인민

116) 《자유신문》, 1945년 12월 30일.

《조선인민보》, 1946년 1월 1일.

117) 심지연, 앞의 책(1991), 62~64쪽.

118) 《조선인민보》, 1946년 1월 3·6일.

119) 심지연, 앞의 책(1991), 53~54쪽.

120) 김오성, 〈정치노선의 집착점〉(심지연, 앞의 책, 1991, 64쪽에서 재인용).

당·남조선신민당 등 좌익정당과 임시정부에서 탈퇴한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한 ‘민주주의자들의 연합체’로 주장되었지만, 실상은 미·소공동위원회에 대처하기 위한 좌익세력의 정치적 집결체였다. 조선인민당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인민당의 조직을 확대·강화하며, 민전을 통해 미·소공동위원회 지지 및 임시정부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인민당이 미·소공동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큰 것이었다.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1946년 3월 30일 공위 내에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조선인민당은 그 내용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진보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였다.¹²²⁾ 조선인민당은 당 내에 미·소공동위원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오성·김세용·이정구 등 조선인민당의 핵심적인 인사들을 대책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당의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지지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우선 미·소공동위원회가 5호성명을 계기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자, 조선인민당의 미·소공동위원회 성공을 위한 움직임은 일단 목표를 잃은 상태가 되었다. 또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기간 중에 진행된 정치공작으로 인해서 조선인민당은 조직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미군정은 좌익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조선인민당을 분열시키고자 하였고, 미군정의 관리들이 조선인민당의 인사들을 만나 새로운 정치그룹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¹²³⁾ 미군정과의 정치적 접촉에 응한 것은 여운형의 동생이었던呂運弘이었고, 여운홍은 일부 정치그룹들과 함께 조선인민당을 탈당하였다. 여운홍은 탈당 직후 “조선인민당이 조공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인민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²⁴⁾ 이 성명서는 미군정에서 정치공작을 지휘하고 있었던 버취(Leonard Bertsch) 중위가 작성한 것이었다.¹²⁵⁾ 여운홍이 탈당한 직후 건국동맹 출신의

121) 《조선인민보》, 1946년 2월 1일. 여운형은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하였다(《조선인민보》, 1946년 2월 15일).

122) 《현대일보》, 1946년 4월 6일(심지연, 앞의 책, 1991, 73쪽에서 재인용).

123) 《주한미군사》 2(돌베개, 1988 영인), 190쪽.

124) 《독립신보》, 1946년 5월 10일.

중앙집행위원 張權·朴漢柱를 비롯한 94명이 담화와 함께 5월 11일 탈퇴하였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5월 22일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었다. 사회민주당의 결성식은 1946년 8월 3일 이승만·엄항섭·버취 중위 및 미군정청 공보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¹²⁶⁾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조선인민당 내의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조선인민당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정이 미·소공동위원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¹²⁷⁾ 조선인민당은 좌파의 대표로서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조선인민당의 강령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좌우합작은 조선인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노선이었다. 미군정이 추진하고 있었던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한 입법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조선인민당은 북한의 정치세력까지 포함한 명실상부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조선인민당에서 추진한 좌우합작은 4단계의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제1단계는 ‘남한 각 정당·단체 주요책임자 연석협의체’를 개인 자격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개인 자격의 이 협의체가 정당·단체를 공식으로 대변하는 제2단계 ‘남한 각 정당·단체 연석협의체’로 발전한다. 2단계의 연석협의체는 남한내 좌우합작이 완성된 형태를 의미한다. 남한내 좌우합작이 완성된 후 북한과 협상하여 제3단계의 ‘좌우, 남북협의체’로 발전한다. 이제 좌우, 남북합작이 완성되면 소련과 협상을 통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킨다. 물론 좌우, 남북을 모두 포함하여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제4단계 ‘임시정부(좌우연립 과도정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¹²⁸⁾

조선인민당이 좌우합작의 원칙으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一.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는 반소반미의 모든 언동을 정지시켜서 일국편향주의에 의한 민족적 분열을 방지할 것.

125) 정병준, 앞의 책(1995), 190쪽.

126) 심지연, 앞의 책(1991), 100쪽.

127) 박태균, 앞의 글(1992), 137~142쪽.

128) 정병준, 앞의 책(1995), 260~261쪽.

- 一. 직접 좌우합작을 방해하는 모든 테러행위를 중지할 것.
- 一. 친일파·민족반역자·모리배 등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사법·경찰·경제 기관에서 물러서도록 하여 그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발악을 인민의 위력으로 거세시켜야 될 것.
- 一. 언론과 집회의 모든 자유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여 주어야 할 것.
- 一. 민족적인 행사는 거족일치로서 합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조선인민보》, 1946년 7월 18일).

조선인민당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 임하였지만,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좌익과 우익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사들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미군정이 입법기관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좌우합작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선인민당의 인사들은 좌파로부터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좌우합작위원회가 추진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좌파계열의 삼당합동과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사회노동당의 대립과정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실패뿐만 아니라 조선인민당의 해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남로당이 결성되고 사회노동당이 해체된 이후 남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은 조선인민당 재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은 주로 조선인민당 내에서 온건파, 또는 우파에 속하는 인물들로 장건상과 이만규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들은 1947년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인민당재건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장건상, 부위원장에 이만규를 선임하였다.¹²⁹⁾ 이어 사회노동당 계열에서 12명, 인민당 재건위원회에서 9명, 남로당에 참여하지 않은 신민당을 포함한 기타 정치단체에서 10명으로 구성된 31명의 준비위원을 선출했다. 남로당은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당 결성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통일전선 형성을 통해 공동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¹³⁰⁾

결국 근로인민당은 조선인민당의 후신으로서 1947년 4월 26일 창당되었다. 근로인민당에는 창당준비위원의 면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치인

129) 《민주일보》, 1947년 2월 1일.

130) 이상 심지연, 앞의 책(1991), 161~162쪽.

들이 참여하였지만, 대체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주류를 이루면서 조선인민당과 유사한 정치노선을 천명하였다.¹³¹⁾ 근로인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근로인민당의 창당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회의 재개(1947년 5월 30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근로인민당이 미·소공동위원회회의 성공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운형의 암살(1947년 7월 19일), 미·소공동위원회회의 결렬(1947년 10월 21일)로 인하여 근로인민당은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양한 인사들의 정치노선을 아우르고 있었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치적 목표가 실패로 끝난 것이었다. 근로인민당은 여운형의 암살 후 체제정비와 당 정치노선의 재검토를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석부위원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¹³²⁾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12정당협의회·民族自主聯盟·南北指導者連席會議에 참여하였지만,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치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결국 근로인민당은 분열, 해체의 길을 걷는다. 남북지도자연석회의에 참여했던 근로인민당의 당원들은 북한에 잔류하여 1948년 10월 17일 비상대표회의를 열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부강한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투쟁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17개항의 강령초안을 채택하고 위원장에 이영, 부위원장에 백남운을 선출하는 등 서울과는 별도의 중앙기관을 구성하였다.¹³³⁾ 서울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뚜렷한 활동을 못하다가 1949년 10월 19일 정부에서 법령 제55호 2조에 의거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1957년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했던 장건상·김성숙 등이 ‘근로인민당’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근로인민당은 재건되지 못했다.

131) 근로인민당의 선언 및 강령, 그리고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심지연, 위의 책(1991), 168~183쪽 참조.

132) 《조선일보》, 1947년 10월 7일.

133) 《조선중앙연감》 1950년판, 248쪽(심지연, 앞의 책, 1991, 215쪽에서 재인용).

(3) 조선신민당

조선신민당의 전신인 華北朝鮮獨立同盟(이하 독립동맹)은 1942년 7월에 華北朝鮮靑年聯合會가 확대·개편된 민족해방운동단체였다. 독립동맹은 중국공산당과 함께 활동했던 武亭·李維民 등 공산주의자들과 楊民山 등의 조선민족혁명당원 출신, 崔昌益·韓斌 등 국내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한 인물들, 金料奉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로 구성된 단체였다. 이들은 일본이 패망하자 11월 초 중국의 奉天에 집결하여 동포와 일본군으로부터 나온 한인 병사들을 흡수하여 조직을 확대하였다.¹³⁴⁾

이 중 1,500여 명의 조선의용군 선발대가 1945년 11월 말 신의주에 도착했지만, 소련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¹³⁵⁾ 독립동맹의 간부들이 소련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독립동맹의 간부와 조선의용군의 일부만이 무장을 해제한 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同盟目前의 정치주장’을 발표한¹³⁶⁾ 이후 정세를 관망하던 독립동맹은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자 1946년 1월 초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¹³⁷⁾ 1월 14일 ‘조선동포에게 고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돌입하였다.¹³⁸⁾

무정·金昌滿·朴一禹·許貞淑 등이 북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반면, 김두

134) 심지연, 《조선신민당연구》(동녘, 1988), 47~48쪽. 만주에 있었던 한국인들과 일본군에서 이탈한 한인 병사들의 흡수를 통해 조선의용군 병력은 약 3만여 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독립동맹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참조.

135) 조선의용군이 항일독립운동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해제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없는 민족에 군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내에 정식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의 부대가 북한내로 들어올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소련군대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6) 《중앙신문》, 1945년 12월 21일(방기중, 《백남운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50쪽에서 재인용).

137) 《조선인민보》, 1946년 1월 10일.

138) 《조선인민보》, 1946년 1월 26일. 독립동맹세력이 ‘조선동포에게 고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정확한 일자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심지연, 앞의 책, 1988, 75쪽 주 98 참조).

봉·최창익·한빈 등은 소시민·지식인·중산층 등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사업에 들어가는 한편, 서울에도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25일 한빈을 비롯한 독립동맹의 간부들이 서울에 도착하여 조공을 비롯한 3상회의 지지세력과의 접촉에 나섰다. 독립동맹세력은 식민지시기부터 유명한 사회주의 학자였던 白南雲을 적임자로 선택하고 1946년 2월 5일 독립동맹 京城特別委員會를 조직하였다.

북한의 독립동맹은 1946년 2월 26일 당의 명칭을 朝鮮新民黨으로 바꾸었으며,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도 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38선 이북의 조선신민당은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주석에 최창익과 한빈이 임명되었으며, 경성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백남운, 부위원장에 鄭魯湜이 임명되었다. 조선신민당의 인적 구성은 조선인민당과 비슷했다. 우선 38선 이남과 이북의 책임자였던 백남운과 김두봉은 학자 출신으로 정노식과 함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었으며, 최창익·高贊輔·具在洙 등은 식민지시기 연안의 독립동맹에서, 또는 독립동맹의 공작원으로 활동하였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조선신민당의 정치노선 역시 조선인민당과 비슷했다. 정치노선으로 자산계급성 민주주의 혁명, 또는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내세웠는데,¹³⁹⁾ 조선인민당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신민당의 노선이 조선인민당의 노선과 비슷했던 점은 제일의 정치적 과제로 ‘민족적 대동단결’을 내세웠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¹⁴⁰⁾ 조선신민당이 자산계급의 일부를 포함하는 협동전선의 노선을 내세운 데에는 조선공산당에 포섭되지 않은 인사들을 포괄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지만, 하층에서뿐만 아니라 상층에서의 통일전선을 강조했던 중국공산당의 ‘신민주주의’ 노선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¹⁴¹⁾ 조선신민당이 내세운 ‘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중국의 毛澤東이 1940년대 초반 7전대회를 통해 확립한 노선에 사용된 용어와 같은 것이었다.

139) 최창익, <민주적 민족통일전선의 역사성에 대하여 3>(심지연, 위의 책, 87쪽에서 재인용).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신건사, 1946), 21~22쪽.

140) 백남운, 위의 책, 13쪽.

141) 심지연, 앞의 책(1988), 83~87쪽.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당시의 사회적 과제를 ‘민족해방’과 ‘사회해방’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에서 일부 자산계급과의 연합을 주장한 것은 ‘민족해방’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자산계급은 ‘민족해방 즉 자주 독립이 실현되는 순간’까지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세력의 일부를 대표”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¹⁴²⁾ 민족적 과제와 사회적 과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민족적 과제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좌익 정치세력으로서 조선신민당이 추구한 노선은 넓게 보아 조공·조선인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요 산업의 국유화,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정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기업의 보장 등은 좌익계열의 3개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신민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좌익세력 내부에서는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백남운의 《조선민족의 진로》는 조공의 이론가들에 의하여 비판되었다.

朝鮮科學者同盟의 李基洙는 좌익을 민주진영으로, 우익을 반민주진영으로 규정하고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와 대립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노선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관계에 놓여 있는 좌우익의 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개 학자의 관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자산계급의 일부가 그 혁명성으로 말미암아 무산계급과 동맹한다면 그것은 “혁명 수행을 위한 동맹군의 문제이고 혁명의 성질과는 딴 문제”로 그것이 조공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⁴³⁾ 결론적으로 그는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조선문학가동맹의 金南天도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비판하였다. 그의 비난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망명 정치인의 겸손치 못한 심경이거나 과오와 경솔로 정치적 주변으로 밀려난 불평 정객의 대변에 불과한 것”이라는 평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¹⁴⁴⁾ 김남천의 비판

142) 백남운, 앞의 책, 14쪽.

143) 이기수, 〈백남운씨의 연합성신민주주의를 박함〉(《신천지》 1권 5호, 1946년 6월).

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이 지주나 자본가의 편에서 그들의 혁명성을 입증하기에 편리한 대로 자의적 용어를 구사한 것이며, “소위 우익을 구성한 친일 재벌 대지주와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에 대한 절충주의적·기계주의적 과신과 지나친 진보성의 기계주의적 인정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⁴⁵⁾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둘러싼 논쟁은 비판에 대한 ‘再批判’에서 잘 나타나듯이¹⁴⁶⁾ “그 자신이 가진 이론적 貧困에서 결과지워진 것”으로 다시 비판되었다.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은 조공 이론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조선인민당의 정치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토지개혁과 관련된 정책은 38선 이북의 조선신민당 본부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공의 토지개혁정책과 비슷한 것이었다.

조선신민당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이 강했다. 이 점은 이기수의 글과 김남천의 글이 발표된 것이 1946년 5월과 6월이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1946년 5월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가고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조공은 조선인민당의 여운형과 조선신민당의 백남운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좌우합작위원회의 성패여부가 자당의 좌익 내 주도권 장악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며 이것이 조선신민당의 노선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조선신민당은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지지,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지지, 38선 이북에서의 토지개혁에 대한 지지, 민전에의 적극적 참여 등 38선 이남과 이북에서 조선공산당·북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과 보조를 함께 하면서 활동하였다. 38선 이북의 조선신민당은 2당합동을 통해 북조선공산당과 함께 北朝鮮勞動黨을 결성한 반면, 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는 좌우합작위원회, 3당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되고 해체되었다. 결국 경성특별위원회의 일부 세력들은 社會勞動黨, 근로인민당과 결합하거나 1947년과 1948년을

144) 김남천, <백남운씨 ‘조선민족진로’ 비판 1> (《조선인민보》, 1946년 5월 9일).

145) 김남천, <백남운씨 ‘조선민족진로’ 비판 4> (《조선인민보》, 1946년 5월 12일).

146) 허윤구, <조선민족의 진로에 대한 비판의 재비판 1~5> (《독립신보》, 1946년 5월 25·26·27·28·29일).

통해 월북, 북조선노동당이나 북한의 사회조직에 합류하였다.

(4) 삼당합동과 남조선노동당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가자 좌익 내의 3당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좌익 정치세력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속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조공은 민전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적인 시위를 통해 우익 정치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반면¹⁴⁷⁾ 조선인민당과 조선신민당은 “좌우합작에서만 통일정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정 및 우익 정치세력과 활발하게 접촉하기 시작하였다.¹⁴⁸⁾ 조공은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자, 좌우합작에 대해 ‘전형적 기회주의자’로 비난하던¹⁴⁹⁾ 입장에서 3원칙을 세워 조건부 지지를 선언하였다.

좌우합작과 더불어 좌익 정치세력 내부에서 견해 차이가 나타난 것은 미군정의 탄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좌익 정치세력들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을 위하여 미군정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고 좌익, 특히 조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강화되자 미군정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되어 갔다. 조공의 미군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여운형·백남운을 비롯한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과의 관계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좌익 정치세력 내부의 이러한 노선차이는 조공이 미군정으로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조공은 ‘신전술’을 채택하였으며, 1946년 7월 22일에 열린 민전 의장단 회의를 통해 “미군정에 반대해 투쟁”해야 할 것과 “우익진영과 미국에게 이익을 주게 될 합작을 포기”

147) 《조선인민보》, 1946년 5월 21일, 6월 3일. 조공의 시도는 1946년 6월 10일에 시도된 ‘6·10기념 공위촉진시민대회’로 나타났다.

148) 《독립신보》, 1946년 6월 12일.

149) 《조선인민보》, 1946년 4월 28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⁰⁾ 박헌영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38선 이북의 북조선공산당 및 소련의 견해라고 하였지만, 여운형과 백남운은 반대 또는 유보의 태도를 취했다.¹⁵¹⁾

조공의 ‘신전술’은 미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정당방위의 역공세’로 불리워진 ‘신전술’의 주요한 목표는 종래 미군정과의 협조, 합작노선에서 반미운동으로의 전환,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북한과 같은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양 등이었다.¹⁵²⁾ ‘신전술’의 채택이 미군정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좌우합작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조선인민당 및 조선신민당과의 차별성이 명백하게 표출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공이 좌익 정치세력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 좌익정당들의 三黨合黨이었다.

38선 이북에서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신민당이 합당을 결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46년 8월 초부터 38선 이남에서도 좌익정당간의 합당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8월 3일 조선인민당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산·신민 양당에 합당을 제안”하기로 가결하고,¹⁵³⁾ 이에 대해 조공과 조선신민당이 합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삼당합당은 본격화되었다.¹⁵⁴⁾ 삼당합당의 추진에는 38선 이북에 위치한 좌익정당들의 상황이 큰 영향을 주었지만, 당시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대중정당을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도 큰 영향을 주었다.¹⁵⁵⁾

좌우합작의 문제로 좌익 정치세력 내부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삼당합당이 쉽게 추진될 수는 없었지만, 소련과 38선 이북에 위치한 정치세력들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삼당합당은 1946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150) Enclosure to Despatch No. 60, August 26, 1947, "Letters Found in Brief Case of Lyuh Woon Hyung," Counter Intelligence Corp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eadquarters, File No. 13.

151) <주한 정치고문 랭던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1946년 8월 2일)>(김국태 역, 앞의 책), 392쪽.

152)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세계, 1984), 30~32쪽.

153) 《조선인민보》, 1946년 8월 5일.

154) 《조선인민보》, 1946년 8월 6·8일.

155) 《조선인민보》, 1946년 8월 6일.

들어가기 시작하였다.¹⁵⁶⁾ 조선인민당은 삼당합당을 통해서 조공이 함께 참여하는 좌우합작운동의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조선신민당은 38선 이북지역의 조선신민당이 북조선공산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

좌익 3정당이 삼당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합당 방법이었다.¹⁵⁷⁾ 여운형은 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각 당 내에서 민주적인 견해를 수렴하고자 했던 반면, 박헌영을 지지하고 있었던 조공의 ‘간부파’는 이미 합당이 결정적이며 정세가 긴박하기 때문에 하부로부터의 토의보다 삼당대표들이 연합회의에서 합당선언을 성명하는 동시에 신당의 강령 초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⁵⁸⁾ 이제 삼당합당의 방법을 둘러싸고 좌익의 3정당은 모두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조공의 간부파가 제기한 합당안을 찬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조공 간부파의 제안이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조공 내부에서 박헌영에 반대하는 간부 6인이 ‘합동문제에 대하여 당내 동지제군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¹⁵⁹⁾ 각각의 좌익정당 내부의 분열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소위 ‘대회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8·15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비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인사들이었다.¹⁶⁰⁾ 성명서에서 이들은 박헌영 일파가 당을 자기 위주로 이끌어 당의 발전을 저해하고 당을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삼당합당을 위한 전제로서 당대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간부파는 미군정의 탄

156) 정창현, <좌익 정치세력의 ‘삼당합동’ 노선과 추진과정>(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19~20쪽.

157) 《조선인민보》, 1946년 8월 12일.

158) 《청년해방일보》, 1946년 9월 2일.

159) 《청년해방일보》, 1946년 8월 5일, <호외>.

160) 자세한 내용은 <북조선분국의 상무위원회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1 가을호) 및 정창현, 앞의 글, 25~28쪽 참조. 1946년 6월 조공의 유명한 공산주의자였던 曹奉岩의 전향은 미군정의 공작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박헌영 중심의 당운영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박태균, 앞의 책, 1995, 121~130쪽 참조).

압이 심한 상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대회과는 당으로부터 제명 및 무기정권의 처분을 당하였다.¹⁶¹⁾ 그러나 대회과가 전북·경남·부산지구 등의 지방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수도권지역의 공산당 간부들 역시 대회과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의 처분만으로 당의 내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북조선 노동당이 창립대회에서 박헌영 중심의 간부과의 입장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과는 ‘조선공산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의 일부 세력과 합당교섭을 진행하였다.

조공의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조선인민당과 조선신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당의 내분은 좌우합작에 대한 입장차이를 둘러싸고 심화되었다. 장건상·이여성으로 대표되는 친여운형 계열의 인사들은 좌우합작의 추진을 합당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반면¹⁶²⁾ 김오성으로 대표되는 친박헌영과의 경우, 좌우합작을 중지하며 좌익 총역량의 전면적 확대 강화를 위한 무조건 합당을 주장하였다.¹⁶³⁾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확대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합당 추진을 위한 표결과정에서 합당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세력의 비율이 48대 31로 나뉘어 조선인민당은 무조건 합당을 주장하는 48인파와 민주주의적 과정과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친여운형 계열의 31인파로 분열되었다.

조선신민당의 분열은 위원장 백남운과 부위원장 정노식 사이의 분열로 나타났다. 조선신민당의 경우 38선 이북에 있는 당 본부의 지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 비하여 분열의 양태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공 간부파를 지지하는 중앙간부들과 조선인민당의 여운형 계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백남운 계열은 합당의 방법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¹⁶⁴⁾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9월 4일 박헌영을 지지하는 조공의 간부파가 3당

161) 대회과의 대표적인 인물은 金綴洙·徐重錫·姜進·金權·李廷允 등으로 식민지시기 박헌영이 활동했던 화요회 계열과 대립되는 활동을 했던 ML파와 서울파 계열의 인물들이다.

162)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

163) 《동아일보》, 1946년 8월 17일.

164) 심지연, 앞의 책(1988), 151~153쪽.

합동준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선인민당과 조선신민당의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이 회의에서 삼당합당 결정서가 정식으로 가결되고 남로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¹⁶⁵⁾ 이에 여운형과 백남운은 남로당 결성을 위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남로당준비위원회와 분리하여 따로이 합당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남로당준비위원회는 여운형·백남운·조공의 대외과가 추진하고 있는 합당을 막기 위하여 10월로 예정된 ‘총과업’을 9월로 앞당겼지만,¹⁶⁶⁾ 10월 16일 남로당준비위원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회노동당을 결성기로 결정하였다.¹⁶⁷⁾ 이제 사회노동당이 결성되면서 삼당합당은 사회노동당과 남로당이 갈라져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노동당의 여운형과 백남운은 11월 초 남로당과의 무조건 합당을 주장하였지만, 남로당 준비위원회는 좌우합작노선을 비판하면서 사회노동당의 무조건 해체를 주장하였다.¹⁶⁸⁾ 11월 23일과 24일 남로당은 정식 결당대회를 가졌다. 위원장에는 허헌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 박헌영·이기석이 선출되었다.

이후 남로당과 사회노동당은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합당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북로당측에서 남로당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사회노동당은 점차 약화되었다. 여운형이 삼당합당의 추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38선 이북을 다녀온 이후 북로당에서는 남로당을 삼당합당의 대표 정당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노동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¹⁶⁹⁾ 아울러 사회노동당에 참여한 좌익 3당의 분파들이 대중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사회노동당의 힘이 약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노동당은 1947년 2월 27일 제1회 당대회를 열고 ‘남조선 민주진영의 세력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자기비판과 함께 해체를 결정하였다.

삼당합당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 내 간부파의 승리로 끝났지만, 좌익 정치세력들은 삼당합당 과정을 통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우선

165) 《조선일보》, 1946년 9월 6일.

166) 정창현, 앞의 글, 53쪽.

167) 《서울신문》, 1946년 10월 17일.

168) 《독립신보》, 1946년 11월 20일.

169) 《독립신보》, 1946년 11월 27일.

세 개의 좌익정당이 합당하였지만, 남로당의 실질적인 힘이 조공에 비하여 세 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각각의 좌익정당에서 간부과의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만이 합당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삼당합당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9월총파업’과 소위 ‘10월항쟁’을 통해 대중조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군정의 탄압이 점차 강해지는 가운데 박헌영을 비롯한 핵심적인 당 간부들이 38선 이남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상황 역시 남로당의 힘을 약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남로당은 미군정하에서 합법정당으로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947년에 들어서 ‘국립서울대학 건설 반대투쟁’,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위한 시위와 파업을 주도하였다. 1947년 중반에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원 5배가, 10배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과 당세확장을 위한 운동은 미군정의 탄압, 남로당의 파괴를 위한 역공작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⁷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된 이후 남로당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였다. 1948년 2월의 소위 ‘2·7구국투쟁’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 ‘2·7구국투쟁’은 남로당이 지휘한 가장 큰 대중적인 폭력시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진압으로 시위는 곧 가라앉았으며, 동년 5월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남로당은 더 이상 남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남로당의 지도부는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38선 이남에서는 비밀조직만이 활동하였다. 1948년 이후 남로당은 남한의 무장유격투쟁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남았다. 남한의 남로당세력들은 1948년에서 1950년 사이 대한민국정부의 강력한 좌익 탄압정책에 의해 거의 괴멸되었다.

남로당은 1949년 6월 북로당과 합당하여 朝鮮勞動黨이 결성되면서 해체되었다. 남로당에 참여했던 핵심간부들은 1952년의 소위 ‘공화국 전복음모사건’과 ‘미제의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대부분 숙청되었다.

170) 김남식, 앞의 책(1984), 273~298쪽.

3) 중도세력과 좌우합작운동

중도세력은 좌익에도 속하지 않고 우익에도 속하지 않는 세력들을 지칭한다. ‘중도’는 어느 쪽의 편향에도 속하지 않는 ‘가운데 길(middle road)’이라는 뜻으로, ‘중도파’ 정치세력들은 때로 ‘중간파’ 정치세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¹⁷¹⁾ 해방 직후 중도파 정치세력으로는 국민당·新韓民族黨 등이 활동하였다.¹⁷²⁾

해방 이후 중도파 정치세력들은 몇 가지 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중도파는 직업적 정치인들이 아닌 양심적 지식인,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대중조직이나 지방조직의 기반이 없었고, 개개인의 명망성에 기초하여 중앙(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둘째로 계급적인 정치노선을 추진하지 않았고,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좌우익의 합작을 통한 정치세력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주의의 경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대중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중적·조직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좌우익 정치세력으로부터 명확한 정치적 색깔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있었던 외세에 대해 협조적인 노선을 표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3상회의 결정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며,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합작위원회·남조선과도입법의원·남조선과도정부 등에 대체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1947년 중반까지 이들은 단합된 힘

171) 중도파나 중간파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용어보다는 민족주의 우파, 민족주의 좌파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좌익 정치세력은 때로 중도파나 중간파, 또는 민족주의 좌파의 범주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인민당이 남로당에 합당하여 좌익세력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을 좌익 정치세력을 분석하는 절에 포함시켰다.

172) 신한민족당은 정당통일운동을 추진하였던 李甲成과 金麗植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이다. 1945년 12월 5일 중소정당들을 포함하여 조직되었고, 1946년 초의 4당회합, 5당회합에 참여하였지만, 곧 한독당에 합당하였다(송남현, 앞의 책, 203~208쪽). 신한민족당은 중도우파의 대표적 정당의 하나였지만, 활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중도파 정치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이후이다. 8·15 직후부터 좌우익 정치세력의 통일적 정치행동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상회의 결정서를 둘러싼 좌우익 정치세력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도파의 활동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중도파들의 정치활동은 1946년말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합작위원회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좌우합작위원회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성립을 둘러싸고 표류하기 시작하자, 8·15 직후부터 정치적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지식인·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중도파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말 民主主義獨立戰線(이하 독립전선)의 조직, 1947년 초 좌우합작위원회의 확대 강화 등은 기존의 중도파세력에 1946년말 이후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양심적 지식인들의 합류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중도파들의 움직임은 여운형의 암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등으로 인해 조성된 새로운 정치상황 속에서 民族自主聯盟의 결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민족자주연맹은 1948년 38선 이남에서의 총선을 반대하고 38선 이북의 좌익 정치세력과의 정치적 합작을 모색하였지만,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체제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분열되었다. 중도파 내부에서 우익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은 남한에 잔류한 반면, 좌익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에 잔류하였다. 북한에 잔류한 세력들은 북한의 정권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남한에 잔류한 세력들은 1950년의 2대 총선에 참가한 이후 1950년대를 통해 혁신운동세력의 중추를 형성하였다.

(1) 국민당

1942년 朝鮮語學會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안재홍은 1943년 7월 석방 이후 일본의 패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지도자들과 접촉하던 중 8·15를 맞이하였다.¹⁷³⁾ 안재홍은 여운형과 접촉하여 건국준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

173) 오영섭, <해방후 민세 안재홍의 민공협동운동 연구>(《태동고전연구》5, 1998), 191~195쪽.

여하였다. 안재홍은 건준에 김병로·백관수·이인 등 우익계열의 민족주의 인사들을 참여시켜 건준을 명실상부한 민족운동세력의 조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공이 건준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안재홍과 같은 중도우파 세력들은 건준 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안재홍은 건준에서 이탈하여 1945년 9월 1일 朝鮮國民黨을 조직하였다. 조선국민당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朴容義 중심의 社會民主黨, 항일운동을 했던 明濟世를 중심으로 조직된 民衆共和黨, 自由黨, 協贊同志會, 權友同盟 등 6개 정당·사회단체가 합동하여 1945년 9월 24일 國民黨으로 확대, 발족하였다. 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장에는 안재홍, 부집행위원장에는 명제세와 박용희가 선임되었다.

국민당은 ‘선언’을 통해 ‘다사리’의 정치를 선언하였다. ‘다사리’의 정치는 “전 인민 각 계층의 너와 나와를 다사리(다-살리)게 하여 遺漏와 차등이 없이” 하는 정치로 ‘新民族主義’의 깃발 아래 전 민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⁷⁴⁾ 이러한 정치노선은 온건한 좌익세력이었던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이 주장한 좌우합작, 또는 협동전선노선에 대비되는 것으로 좌우익 정치노선에 상관없이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중도우파 입장에서의 좌우합작 노선이었다.

국민당의 좌우합작 노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중도좌파와는 달리 특별한 원칙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친일파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즉, 선언에서는 “모든 진보적 反響 침략제국주의적인 지주·자본가 및 농민·노동자 등 皆勞層의 인민을 통합”한다고 하였지만, 강령과 정책에서는 일본인 소유의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친일파 문제에 대해 특별한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토지제도에 대한 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민당은 토지개혁의 궁극 목표로서 현재의 지주와 자작농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일

174) 송남헌, 앞의 책, 132~134쪽.

안재홍의 이념이었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한영우,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학〉(《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유병용, 〈신민족주의론 연구〉(《강원사학》 10, 1994).

김인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상과 운동》(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7).

본의 토지를 분배하여 새로이 자작농을 만들어 내는 데 두었다. 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은 당시 한국사회에는 대지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세력도 선진 외국자본주의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다고 파악하였다. 이것은 곧 대지주와 농민 사이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토지문제에 대한 혁명적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토지분배의 방식에 있어서도 유상분배의 방식을 주장하였다. 무상분배가 농민들에게 잠시나마 좋을 수 있지만, 농업생산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¹⁷⁵⁾

이상과 같은 국민당과 안재홍의 정치노선은 온건한 좌파세력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조선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온건 좌파세력들은 친일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국민당은 이와는 다른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계급이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이나, 사회경제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에서 공통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선인민당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확충을 통한 민족경제의 건설을 우선적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토지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유상몰수를 통해 민족자본의 형성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국민당은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의 이념하에서 정치세력의 통합을 목표로 한 정치활동을 추진하였다. 국민당이 건준에서 탈퇴하면서 내세운 정치적 목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추대하는 것이었지만,¹⁷⁶⁾ 우익 정치세력이 추진하고 있었던 정치세력 통합을 위한 모든 움직임에 참여하였다. 이승만이 정치세력 통합을 위해 추진한 독촉중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귀국하자 한민당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임시정부 추대운

175) 김인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국가건설론> (《중앙사론》 9, 1997), 146~158쪽.
토지개혁은 실제로 농업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176) 김인식, <해방후 안재홍의 중경립정영립보강 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8), 281~304쪽.

동을 추진하였다.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었을 때 안재홍은 임시정부와 조공의 수뇌부를 방문하여 반탁운동을 위한 공동전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3상회의 결정서 발표 이후 반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안재홍은 임시정부에서 주도하였던 반탁투쟁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임시정부와 보조를 같이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의 반탁노선은 임시정부의 노선과는 다른 것이었다. 국민당은 반탁운동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도 정치세력 합작을 위해 진행되었던 4당회합·5당회합에 참여하여 정치세력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비록 정치세력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성공하지 못했고, 반탁진영에 계속 잔류하였지만, 국민당의 반탁운동에 대한 입장은 임시정부와는 다른 것이었다.

안재홍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탁치안이 아직 실시가 아니된 대신 철폐도 아니 되었으니, 장래를 위하여 무용한 반탁시위는 필요할 때까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으며,¹⁷⁷⁾ 미·소공동위원회에서 5호성명을 발표한 직후에는 民共協同으로 좌우합작을 성사시킨 다음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⁸⁾ 이러한 차이는 국민당의 정치노선이 한민당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한독당에 비해서는 미군정에 보다 협조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한독당과 합당한 이후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계열의 인사들이 과도입법의원이나 南朝鮮過渡政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안재홍은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의 민정장관에 취임하였다.

국민당의 노선이 중도좌파와의 합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반탁운동으로 인해 조성된 좌우익간의 대립 속에서 국민당은 합작보다는 우익 정치세력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 국민당은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 임시정부가 조직한 비상국민회의, 미군정과 이승만이 주도한 민주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77) 오영섭, 앞의 글, 21쪽.

178) 안재홍, <자력건설과 자주건국>(<민세안재홍 선집> 2, 지식산업사, 1983), 436~437쪽.

국민당은 결국 한독당·신한민족당과 함께 삼당합당을 추진하여 한독당에 통합되었다. 안재홍은 한독당의 중앙상무위원 겸 훈련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의 노선은 한독당의 노선과 동일하지 않았다. 좌우합작 및 과도 입법의원에 대하여 안재홍 및 국민당 계열은 임시정부세력에 비하여 적극적인이었으며, 38선 이남에서의 총선거가 결정된 다음에도 임시정부 계열이 남북 협상 참여를 결정한 데 반하여 국민당 계열은 총선거 참여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¹⁷⁹⁾ 한독당 내의 국민당 계열이 38선 이남에서의 총선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시정부 계열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안재홍은 1948년 말 이후 국민당을 모체로 하여 새로운 정치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0년의 제2대 총선거에 입후보(경기도 평택)하여 당선되었지만, 6·25 전쟁시 안재홍은 납북되었고, 국민당은 더 이상 한국 정치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2) 미·소공동위원회 이전의 좌우합작 노력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성취하겠다는 움직임은 식민지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때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민족적 요구였다. 신간회운동, 민족유일당운동, 1940년을 전후한 임시정부의 확대 개편 등은 이러한 민족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8·15 이후 좌우익간의 대립은 또다시 심화되었다. 민족국가의 수립이 지상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이남과 이북으로 나뉘어지자, 정치세력들은 외세와의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새로이 건설되는 국가에 관철하고자 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우익과 좌익이 모두 참여한 조직이었지만,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더 이상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8·15 직후 정당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건준이 해체되고 인공이 수립되

179) 《동아일보》, 1948년 2월 8일.

면서 시작되었다. 중도좌파를 대표하였던 여운형 계열의 입장에서는 인공 역시 정치세력을 통합하는 작업의 일환이었지만, 조공이 인공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인공에 대한 우익세력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인공의 조직은 좌우익 정치세력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945년 10월 5일 梁權煥의 중재로 열린 各政黨首腦懇談會는 좌우익 정치세력의 통합을 모색한 첫 번째 시도였다. 이 간담회에는 한민당(송진우·백관수·김병로), 국민당(안재홍), 건국동맹(崔謹愚), 인공(여운형·崔容達·許憲), 재건파공산당(李鉉相·金炯善) 등 4대 정당 대표들이 참가하여 대동단결의 문제와 초당적 자주독립을 추진하는 조직의 설립문제를 논의하였다.¹⁸⁰⁾ 이 회의에서의 쟁점은 인공과 임시정부의 위치와 관계 설정의 문제였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10월 10일 국민당 등 32개 단체대표 50여 명은 각 정당 ‘緊急問題共同討論會’를 개최, 38선 문제와 일본인재산 처리문제 등을 토론하고 상설기관으로 ‘各政黨行動統一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한민당·조공·고려동지회·건국동맹 등 많은 정치단체가 참여하였다.¹⁸¹⁾ 그러나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하자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의 활동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민족통일전선 결성으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결국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10월 23일 각 정당 대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촉중협이 결성되자 조직을 해체하였다.¹⁸²⁾

독촉중협은 이승만의 명망과 미군정의 지원으로 초기에 많은 정치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승만의 반공적인 발언과 참여단체의 문제, 그리고 친일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좌익세력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치단체 통합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다. 독촉중협이 좌우익세력의 합작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힘을 잃은 또 다른 원인은 1945년 11월 말 임시정부의 귀국 때문이었다. 좌익 정치세력들은 반공을 주장하는 이승만보다는 중도좌파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는 임시정부가 좌우익 정치세력들의 합작

180) 《조선인민보》, 1945년 10월 6일.

181) 《매일신보》, 1945년 10월 12일.

182) 《조선인민보》, 1945년 11월 16일.

을 위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좌익 정치세력들은 인공과 임시정부의 협작이 정치세력 협작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했다.

임시정부의 고압적인 자세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인공과 임시정부의 협작을 위한 작업은 12월과 1월에 계속되었다. 인민당은 인공과 임시정부가 정부 부서에 절반씩 참여하는 형태의 협작을 제의하였고,¹⁸³⁾ 임시정부측에서도 김성숙·장건상 등이 ‘特別政治委員會’를 구성하여 협작에 나서기도 하였다.¹⁸⁴⁾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임정과 인공이 解消合作하여 통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⁸⁵⁾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임시정부의 고압적인 자세와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된 좌우익 정치세력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1946년에 들어서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반탁운동과 조공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 지지’ 진영간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었지만, 정당간의 협작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1946년 1월에 있었던 4당회합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당시 정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당들이 통합을 모색한 모임이었다. 1946년 1월 6일 조공·국민당·한민당·조선인민당 등 4개 정당이 시국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탁통치 문제의 대두를 계기로 발생한 국내 정계의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고 3상결정의 진의를 파악함으로써 정계의 통일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¹⁸⁶⁾

1월 7일에는 4대 정당 간담회가 열려 한민당에서 원세훈·김병로, 국민당에서 안재홍·白弘均, 조선인민당에서 이여성·김세용·김오성, 조공에서 李舟河·洪南杓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4당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83) 인공과 대등하게 협작하자는 제안에 대해 임시정부는 ‘임정의 법통 승인, 임정의 부서와 요직 승인, 추가로 부서를 늘려 좌익이 차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하였다(《자유신문》, 1945년 12월 23일).

184) 박태균, 앞의 글(1992), 122~123쪽.

185) 《조선인민보》, 1945년 12월 30·31일.

186) 《조선인민보》, 1946년 1월 8일.

1. 막부(幕府 ; 모스크바, 필자주) 3상회의의 조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막부3상회의의 조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조한다는 정신과 의도는 전면적으로 지지한다. 신탁(국제헌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탁제도)은 새로 수립되는 정부가 자주독립정신에期하여야 해결케 함.
2. 테로행위에 대하여
 전쟁의 수단으로 암살과 테로 행동을 감행함은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국가독립을 방해하는 자멸행동이다. 건국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憂國之士는 모든 이러한 반민족적 테로행동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모든 비밀적 테로단체와 결사의 반성을 바라며 그들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각자 진정한 우국운동에 성심으로 참가하기를 바란다(《조선일보》, 1946년 1월 9일).

4당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외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우익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합의였다. 특히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됨으로써 야기된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1항에서 언급한 내용은 3상회의 결정서의 내용, 특히 결정서 3항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2항의 내용은 한민당 수석총무였던 송진우의 암살에 따른 정치세력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4당간의 공동성명과 공동보조는 한민당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한민당은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중 탁치문제에 관한 조항은 한민당이 견지해 오던 반탁정신을 몰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¹⁸⁷⁾ 한민당의 성명에 이어 국민당도 독자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세력간의 합작논의는 무효로 돌아가고 말았다. 1946년 1월 9일 신한민족당이 새로 참가하여 5당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더 이상 이 회합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1월 16일의 회의에는 한민당의 불참과 국민당의 반대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4당회의의 결렬에는 조공과 임시정부의 독단적인 입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조공은 4당 공동성명의 내용이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총체적 지지’라고 주장하면서 한민당과 국민당의 분할적 인식-자주독립 보장 지지, 신탁반대-

187) 《동아일보》, 1946년 1월 9일.

을 비난하였고, 임시정부는 이 회의를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비상정치회의의 예비회담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¹⁸⁸⁾ 임시정부는 정식 참여자가 아니고 옵저버(observer)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익 정치세력 내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입장은 한민당과 국민당의 불참 및 반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8·15 직후부터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1946년 1월까지 계속된 정당간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많은 정치세력들이 해방된 공간에서 정치세력간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부터 주어진 여건, 즉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과, 안으로부터 조성된 여건, 즉 임시정부의 법통 고수 및 반탁운동의 고양으로 인하여 정당간의 통일적 움직임은 더 이상 조성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정책과 지원하에서 이루어진 좌우합작위원회에 비하여 1946년 1월까지 진행된 정당간의 통합 움직임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내부의 정서를 반영한 주체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을 위한 움직임은 8·15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를 둘러싸고 각각의 정치세력들의 진단과 처방은 제각각이었지만, 우익과 좌익의 분열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휴회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민당의 여운형은 8·15 직후부터 좌우합작을 통하여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인민당의 정치노선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는 좌우익의 정치세력을 연합하는 것이 조선인민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였으며, 좌우익의 합작을 위한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1946년 2월 38선 이북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 민족통일전선에 대하

188) 정병준,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11~13쪽.

여 의논했던 것도 좌우익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었다.¹⁸⁹⁾

좌우합작을 우익의 입장에서 추진했던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46년 5월 이전에 좌우합작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민지시기부터 민족유일당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좌우익간의 대립에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에서 탈퇴하여 민주의원에만 참여함으로써 좌우익간의 대립에서 비켜 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군정이었다. 미군정은 민주위원을 통하여 극좌세력을 제외한 좌우익 정치세력의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여운형세력의 거부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갔다.¹⁹⁰⁾ 미군정은 민주위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민주위원의 효용성이 다했으며, 중도좌파 인사들까지 포함한 정치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주위원을 곧바로 재편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계속되었다. 미군정은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연합의 조직과 함께 임시입법기구의 조직을 계획하였다.¹⁹¹⁾

미군정의 요청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광범한 선거방법’으로 ‘현재의 남조선 대한국민대표민주위원을 능가’하는 입법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이 기구는 “좌익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현재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위원보다 모든 한국의 정치여론을 더욱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무부 지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통해 “소련측에서도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소련과의 협정체결 가능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²⁾

189) 《대한민국사연표(상)》(국사편찬위원회, 1984), 20쪽.

190) 박태균, 앞의 글(1992), 136쪽.

191) 《주한미군사》 2, 94~95쪽. 표면적으로 좌우합작의 시도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46년 5월 말이었지만, 미군정은 이미 1946년 4월부터 좌우합작-입법기관으로 이어지는 정국구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192) <국무부 점령지구 담당 차관보 힐드링이 육군성 작전처에 보내는 비망록(1946

미군정은 곧바로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입법기구 구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미군정이 선택한 정치인은 좌우합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도파 인물들로 소련도 받아들일 수 있고, 미군정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운형과 김규식이었다. 특히 미군정은 여운형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미군정은 여운형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좌우합작을 통해 조공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좌익세력을 분열·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운형과 박헌영 사이에서 끊임없이 잡음과 갈등이 생겨났던 것은 미군정이 의도한 바였다.

미군정은 여운형이 당수로 있는 조선인민당이 좌익 내부에서만뿐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자유주의자들과 민족주의 좌파세력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여운형이 민전 2차대회에 불참하면서 중도세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¹⁹³⁾ 또한 1946년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여운형과 박헌영 사이의 불화를 통해 조선인민당을 민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시점에서 진행된 정치공작의 하나가 조선인민당으로부터 여운형을 비롯한 세력들을 분리하는 것이었으며, 조선인민당의 약화가 좌우합작위원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⁴⁾

김규식의 경우 미군정의 정책에 호의적이면서도 그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한 당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미군정은 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가 민주의원 내에서 유일하게 반탁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였다는 사실 역시 소련과의 협의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은 “한국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헌신적인 지도자는 단지 극소수일 뿐”이며 “그 명단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김규식이라고 극찬하였다.¹⁹⁵⁾

년 6월 6일)>(김국태 역, 앞의 책), 296~299쪽.

193) <주한미군 정치고문 랭던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보고(1946년 5월 14일)>(김국태 역, 앞의 책), 274쪽.

194) 정병준, 앞의 글(1992), 18~19쪽.

195) <아놀드 소장과의 대담 비망록(1946년 10월 9일)>(김국태 역, 앞의 책), 353~356쪽.

이상과 같이 1946년의 좌우합작운동은 중도와 정치인이었던 여운형·김규식의 의도와 미군정의 정치적 의도가 일치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좌우합작위원회의 주체였던 3자의 정치적 의도가 同床異夢의 관계였지만, 좌우합작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기본적 배경이 되었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5월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6년 5월 25일 민주위원의 김규식·원세훈과 민전의 여운형·황진남, 그리고 미군정의 요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좌우합작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⁹⁶⁾ 6월 14일에 열린 회동에는 황진남 대신 허현이 참여하였다.¹⁹⁷⁾ 6월 22일과 26일에 다시 회합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입장이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미군정 사령관 하지의 좌우합작에 대한 지지성명은 좌우합작을 위한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¹⁹⁸⁾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된 발언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었던 이승만이 합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아놀드 군정장관의 지지, 한독당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민전에서도 좌우합작이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전제 위에서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실질적인 본심에 상관없이 좌우익의 핵심세력들이 좌우합작에 대해서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좌우합작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갔다.

좌우합작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좌우합작에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된 것은 ‘입법기구’의 문제였다. 입법기구 설치는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했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6월 말 러취(Archer L. Lerch) 군정장관이 입법기관 설치안을 제출하고 미군정 사령관이 이를 찬성함으로써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¹⁹⁹⁾ 그러나 한민당만이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민전과 여

196) 《동아일보》, 1946년 5월 29일.

197) 《조선일보》, 1946년 6월 16일.

198) 《서울신문》, 1946년 7월 2일.

운형은 입법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입법기관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1946년 7월 초 민주의원과 민전에서 합작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각기 5명씩으로 구성된 합작위원이 결정되었다. 우익은 7월 7일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위원의 연석회의를 통해 김규식·원세훈·김봉준·안재홍·최동오 등 5명의 대표를 선발했다. 민전은 7월 12일 여운형·허헌·김원봉·정노식·이강국 등 5명의 대표를 선발했다. 이들은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5차례의 회담을 거쳐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의 정식회담은 1946년 7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좌우익정당의 실질적인 대표들이 참여하여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연합이라는 틀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박헌영이 38선 이북을 다녀온 직후 조공의 좌우합작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조공은 좌우합작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5원칙을 내세웠다. 여운형과 김원봉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을 위해 박헌영이 내세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매진하되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할 것.

둘째,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여), 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급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諸 기본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셋째, 친일과 민족반역자, 친파쇼 반동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로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넷째,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로 즉시 이양토록 기도할 것.

다섯째, 군정자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조선인민보》, 1946년 7월 27일).

199) 《동아일보》, 1946년 7월 10일.

이러한 박헌영의 요구는 38선 이북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소위 ‘민주개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으로서 미군정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건이었다. 입법기구에 대한 반대 역시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계획하고 지원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의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3상회의 결정서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는 반탁운동을 주도하였던 우익 정치세력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곧 좌우합작을 더 이상 지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헌영과 조공의 태도변화는 표면적으로는 38선 이북의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좌우합작을 통해 좌익 내부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5원칙을 내세운 시기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신전술의 채택 역시 대중 동원을 통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가 걸어로 나타난 이유였다면, 좌익 내부의 주도권을 확립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였다.

좌익의 5원칙에 대해 우익은 합작운동을 실패로 이끌기 위하여 이러한 요구가 나왔으며 38선 이남에서 공산혁명을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작 8원칙을 제시하였다.

1.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소위 신탁문제는 임정수립 후 동 정부가 미·소공동위원회와 자주독립 정신에 기하여 해결할 것.
4. 임정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보선에 의한 전국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
5. 국민대표회의의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정부를 수립할 것.
6. 보선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7. 정치·경제·교육의 모든 제도법령은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정할 것.
8.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법정으로 구성하여 처리케 할 것(《독립신보》, 1946년 7월 28일).

우익의 8원칙은 좌익의 5원칙에 비하여 상당히 유화된 표현과 내용을 가

지고 있었다. 신탁문제, 친일과 처리문제, 토지개혁 등과 관련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하긴 하였지만, 좌우합작을 처음 시작할 때 좌익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위의 원칙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좌익의 5원칙이 발표된 상황에서 위의 8원칙은 좌익의 5원칙에 대하여 비판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좌우합작위원회에 반대하는 우익의 입장을 보여주는 우익의 입장 표명이 되었다.

좌익과 우익의 좌우합작 원칙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하여 1946년 8월 말까지 좌우합작위원회는 1개월 가량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의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익의 실세들이 불참한 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이라기 보다는 미군정이 처음에 구상했던 방식의 좌우합작위원회가 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는 8월 26일 좌우합작을 격려하는 친서를 김규식과 여운형에게 전달하였고, 9월 17일에는 합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⁰⁰⁾

좌익과 우익의 5원칙과 8원칙 발표로 한 달간 휴회되었던 좌우합작위원회는 8월 22일 재개되었다. 그러나 좌익은 민전의 대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여운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공을 좌우합작위원회의 자리에 끌어들이려 하였지만, 삼당합당을 둘러싼 대립으로 좌익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운형은 박헌영 체포령의 취소, 좌익신문에 대한 정간의 취소, 자유언론의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미군정 사령관을 만났지만 거절당했으며,²⁰¹⁾ 조공은 9월총파업, ‘10월항쟁’을 강행하였다.

이 시점에서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에 과도입법기구의 조직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김규식과 여운형은 이 제안에 동의하였고, 미군정은 1946년 10월 1일까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요구했다.²⁰²⁾ 여운형은 북한 방문을 비롯한 정치적 일정으로 입법기구 수립과 관련된 결정서에 대한 승인을 연장하였고, 여운형의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좌우합작의 7원칙이 공표되었다.

200) 《동아일보》, 1946년 8월 28일, 9월 18일.

201) 《주한미군사》 제2권 제2장, 122쪽.

202) 정병준, 앞의 글(1992), 60~61쪽.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遞減 配當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급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 노동법령 급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급 민생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과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로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독립신보》, 1946년 10월 7일).

합작 7원칙은 좌익과 우익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였다. 특히 토지문제와 관련된 3항은 우익뿐만 아니라 미군정도 반대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15 직후의 사회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운형의 사건 동의문제와 함께 우익과 좌익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3상회의 결정서 및 미·소공동위원회와 관련된 1항과 2항은 반탁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임시정부와 이승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었으며, 6항의 입법기구는 조공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한민당은 토지개혁과 관련된 3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민당은 무상분배가 국가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²⁰³⁾

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미군정 사령관은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1946년 10월 12일 법령 제118호로 조선과도입법위원의 창설을 공포하였다.²⁰⁴⁾ 그러나 소위 ‘10월항쟁’의 여파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20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1), 456~476쪽.

정의 입법기구 창설을 위한 계획은 난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朝・美共同騷擾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당시의 소요사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²⁰⁵⁾ 그러나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미군정 및 군정 내 한국인 관료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소요사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입법기구의 설치를 위한 선거가 강행되었다.

1946년 12월 12일 과도입법의원이 개원하면서 입법기구 설치를 추진한 미군정의 의도는 관철되었지만, 좌우합작위원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여운형 등 중도좌파 인사들은 더 이상 좌우합작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김규식은 입법의원에 참여하였지만, 입법의원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우익세력들에 의해 움직여졌기 때문에 개혁적인 입법을 전혀 추진할 수 없었다. 미군정은 입법기구가 설치된 이상 좌우합작위원회의 효용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곧 좌우합작위원회에 대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운동은 1947년에도 계속되었다. 민주주의독립전선을 비롯한 중도파 정치세력들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위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세력확대를 위하여 제3전선인 민주주의독립전선과의 연합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²⁰⁶⁾ 그러나 1947년 7월 여운형의 암살은 좌우합작운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운형은 좌익의 대표 중 1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중도좌파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더불어 1947년 12월 6일 해체되었다.

204) 《동아일보》, 1946년 10월 9일.

205) 《동아일보》, 1946년 10월 24일.

206) 1947년 6월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와 더불어 좌우합작위원회는 확대・강화를 모색하였다. 여운형의 근로인민당, 한독당 내 공위 참여파, 이극로 등 독립전선의 일부 세력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였다.

(4) 민주주의독립전선과 민족자주연맹

가. 민주주의독립전선

민주주의독립전선(이하 독립전선)은 좌우합작위원회가 합작원칙의 문제와 과도입법의원 문제로 미군정과의 협상 및 자체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발족되었다. 독립전선에는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제외한 민족주의 좌우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1946년을 통해 좌우합작운동을 지지하였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민족주의 계열의 군소정당인 靑友黨·新進黨·勤勞大衆黨·民衆同盟·解放同盟 등이 1947년 회합을 갖고 중도파의 전선체를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독립전선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민족주의진영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위한 ‘제3전선’ 결성운동으로 규정하였다. 2월 1일李克魯의健民會²⁰⁷⁾, 조봉암의統一建國會 등이 중심이 되어 독립전선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전선에는 건민회·통일건국회·근로대중당·社會大衆黨·新化黨·統一政權促成會·自由合作促成會·조선연무관·韓國農民總聯盟·朝鮮語學會·民族解放同盟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였다.²⁰⁸⁾

독립동맹에 참여한 단체들은 중소 규모의 단체들로서 미군정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근로대중당(2,000명, 대표: 강순), 좌우합작축성회(125명, 대표: 배성룡), 건민회(300명, 대표: 이극로), 구국당(6,072명, 대표: 한건), 해운대책위원회(1,200명, 대표: 황한철), 조선농민총연맹(36만 8,743명, 대표: 박문회) 등이 단체의 성원수를 신고했을 뿐 규모가 작거나 파악되지 않은 단체도 상당수였다.²⁰⁹⁾

독립전선에 참여한 단체들은 소규모였지만,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정치인과 학자들이었다. 조봉암·金燦·林元根·元友觀 등 독립전선 상무위원들은 식민지시기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裴成龍·이극로 등은 유명한 학자였다. 독립전선은 다양한 인적 구성과 참여단체들이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인물이나 단체가 없었다.

207) 건민회는 1946년 6월 민중운동단체로 출발하였다(동아일보), 1946년 6월 18일.

208) 《조선일보》, 1947년 2월 2일, 3월 8일.

209) “Democratic Independence Front,” RG 322(신복룡 편, 《한국분단사 자료집》 6권, 제2장 정당사회단체 현황, 447~457쪽 참조.

독립전선의 정치적 목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을 위하여 침체에 빠진 좌우합작운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독립전선이 결성된 1947년 1월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삼당합당·과도입법의원·이승만의 도미외교 등을 통해서 야기되고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독립전선은 김규식과의 접촉을 통하여 좌우합작위원회와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좌우합작위원회와의 통합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았다. 좌우합작위원회의 金朋濬·朴健雄·원세훈·여운홍 등은 ‘石造殿 9당회합’을 통해 중도파의 독자적인 제3전선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비판하고, 대신 좌우합작위원회를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와 개인을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재편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좌우합작위원회를 민족통일전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던 사회민주당·신진당·근로대중당·민중동맹·해방동맹 등 정당·사회단체를 중요한 기반으로 고려하였다.²¹⁰⁾ 좌우합작위원회는 독립전선과의 통합보다는 독립전선내에 있는 일부 정당·사회단체를 좌우합작위원회에 포함시켜 좌우합작위원회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가 임박하자 독립전선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독립전선은 우선 낮은 수준의 ‘협의체 조직’이라도 조직하여 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독립전선의 주도로 5월 28일 ‘美·蘇共對策各政黨社會團體協議會’(이하 공위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공위대책협의회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민족자주적 입장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문제를 공위에만 일임하려는 일종의 방관적 또는 위임적 의존주의를 포기하고 是是非非主義를 견지하며 미·소공동위원회와 병존하여 자주적 입장에서 충분한 정치협상을 추진할 것(《조선일보》, 1947년 5월 29일).

공위대책협의회는 주석에 김규식, 부주석에 이극로·이용직이 취임하고 좌

210) 배성룡, <오계열분야의 정치동향>(《자주조선의 지향》, 1947), 113쪽.

《조선일보》, 1947년 2월 6·11일.

익의 민전과 우익의 민족통일총본부에 소속되지 않은 67개 단체를 규합하였다. 이로써 공위대책협의회는 좌우합작위원회와 독립전선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규식의 공위대책협의회 주석 취임을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20개 단체를 동원하여 좌우합작위원회의 확대·강화를 모색하였다.²¹¹⁾ 그 결과 이극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당·사회단체가 독립전선에서 이탈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였다. 독립전선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중앙조직 중심의 중도파 연합이었기 때문에, 일부 정치세력의 이탈은 독립전선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운형의 암살은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였다. 1947년 8월 6일 공위대책협의회·좌우합작위원회·독립전선·시국대책협의회 등 4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민족통일진영재편성추진회’를 구성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중도파들의 결집체인 민족자주연맹이 결성되면서 독립전선은 해체되었다. 독립전선의 일부 세력들은 민족자주연맹에 참여하였으며, 조봉암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면서 1948년의 5·10 총선에 참여하였다.

나. 민족자주연맹

1947년 중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중도파들은 독자적인 세력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중도파세력들의 결집력과 세력강화를 위하여 정당을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로 정당 통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동협의체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령의 원칙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진영을 포괄하는 ‘연맹’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民主獨立黨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민주독립당 결성을 위한 시도는 洪命熹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홍명희는 식민지시기부터 유명한 소설가이자 지식인으로서 8·15 직후부터 수많은 정당·사회단체로부터 참여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과도입법위원의 관설회원에 선임되었으나, 이를 사퇴하고 1946년 12월 신간회 서울지부 인사

211) 《동아일보》, 1947년 5월 22일.

와 학계·언론계·실업계 인사 20여 명으로 民主統一黨을 결성하였다.²¹²⁾

민주통일당 창당 이후 홍명희는 여운형·안재홍과 함께 중간정당의 통합을 논의하다가, 여운형이 암살되고 중도좌파 정당들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자 중도우파의 5개 정당을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민주통일당의 홍명희, 신진당의 김호·김원용, 민중동맹의 김병로, 신한국민당의 안재홍·박용희·건민회의 이극로 등 5정당 7인은 합당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¹³⁾ 1947년 9월 11일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당발기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0월 19일~20일 民主獨立黨이 결성되었다. 합당을 둘러싸고 각 정당 내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5개 정당의 모든 세력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명망있는 중도적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민주독립당은 중도파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근로인민당·민주한독당·민중동맹·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 등 중도좌파의 5개 정당은 민주독립당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소위 '5당캠페인(campaign)'). 이들은 1947년 9월 5일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반대,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¹⁴⁾

이러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민족자주연맹의 결성으로 통합되었다. 1947년 10월 1일 김규식·원세훈·안재홍·崔東旼·김병로·김봉준·홍명희·이극로 등은 중도파의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민족자주연맹 준비위원 30명을 선출하였다.²¹⁵⁾ 민족자주연맹의 조직은 11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2월 20일 전국 대의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되었다.²¹⁶⁾

민족자주연맹에는 4개의 연합단체, 14개의 정당, 25개의 사회단체 및 개인

212) 도진순, 앞의 책, 178쪽.

213) 《조선일보》, 1947년 9월 9일.

214) 《새한민보》, 1947년 9월 중순호(도진순, 앞의 책, 180쪽에서 재인용).

215) 송남헌, 《해방3년사》Ⅱ(까치사, 1984), 444쪽. 초기에는 민주한독당의 권태석을 제외한 중도좌파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5당 캠페인의 반발로 근로인민당·민주한독당·민중동맹·사회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준비위원에 추가로 선정되었다(도진순, 앞의 책, 187쪽).

216) 《동아일보》, 1947년 12월 23일.

으로 조직되었다. 4개 연합단체는 김규식계의 좌우합작위원회, 시국대책협의회와 제3전선 계열의 민주주의독립전선, 미·소공동위원회대책위원회였다. 정당으로서는 天道敎輔國黨(대표: 신숙)·朝鮮共和黨(대표: 김약수)·朝鮮農民黨(대표: 원세훈)·민주독립당·天道敎靑友黨(대표: 이웅진) 등 중도우파 정당, 사회민주당·민중동맹·민주한독당·근로인민당·근로대중당 등 중도좌파 정당들이 참여하였다. 사회단체는 朝鮮建國靑年會·愛國婦女同盟 등이 참여하였다. 민족자주연맹에는 다양한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였지만, 주로 김규식의 좌우합작위원회 계열 인사들과 홍명희의 민주독립당 계열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민족자주연맹은 감찰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중앙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홍명희·이극로·안재홍·배성룡·이상백 등 지도부 내에 학자들이 많으며, 김규식·윤기섭·최동오·홍명희·안재홍 등 식민지시기부터 민족유일당운동·신간회 등 좌우합작의 성격을 가지는 정치운동 또는 단체에 참여한 인사들이 많았다. 이 외에 민족자주연맹에 참여한 중도좌파 정당들의 성원 중에는 좌익적 색채를 띠는 인사들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성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확실한 정치노선을 가지지 못하였고, 선언문과 강령·정책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광의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다.²¹⁷⁾

민족자주연맹의 주된 활동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와 남북회담의 추진이었다. 유엔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남북회담을 통해 분단정부의 수립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은 한독당의 김구와 함께 소위 '2월 서신'을 통해 38선 이북의 정치세력들에게 남북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²¹⁸⁾ 김규식과 김구가 제안한 남북정치회담은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이 함께 하는 4김회담이었으며, 유엔의 활동을 통해 남북한에 공히 총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²¹⁹⁾

217) 도진순, 앞의 책, 191~195쪽.

218) 《조선일보》, 1948년 4월 1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일.

219) 도진순, 앞의 책, 209~210쪽.

민족자주연맹은 김규식의 소극적 태도로 南北連席會議의 참여문제에 대한 결정이 지체되기도 하였지만,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는 5개항의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배격하고 민주주의국가를 건립할 것
2. 독점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배격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할 것.
3. 전국적 총선거에 의해 통일된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4. 외국에 어떠한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말 것.
5. 미·소 양군의 조속한 철퇴에 관해서 미·소 양국이 협상하여 공포할 것.

(《새한민보》, 1948년 5월 중순호;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 서울대 출판부, 1997, 246쪽에서 재인용).

민족자주연맹의 5개 원칙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적 체제를 지향하는 중도와 인사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48년 4월 15일 김규식·원세훈·최동오·배성룡·여운홍·박건웅 등 19인의 대표를 선출한 민족자주연맹은 북한측이 5개 원칙을 수락하자 4월 19일부터 21일에 걸쳐 북행하였다. 4김회담과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한 민족자주연맹의 대표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은 김규식을 중심으로 38선 이남으로 되돌아오며, 다른 한쪽은 홍명희를 중심으로 38선 이북에 잔류하였다.

38선 이남으로 돌아온 민족자주연맹은 5월 19일 정당협의회, 한독당 등 민족주의 정당·단체들과 총선 불참과 통일독립노선의 추진을 재천명하였다.²²⁰⁾ 또한 민족자주연맹은 한독당과 함께 통일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 설치를 모색하였다. 민족자주연맹과 한독당은 좌익 민전 이외의 정당·사회단체를 규합하여 기존의 統一獨立運動者協議會를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통일기구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獨立勞農黨 柳林의 반발로 조직의 확대가 어렵게 되자 민족자주연맹은 새로운 기구인 ‘統一獨立促進會’를 조직하였다.

민족자주연맹은 1948년 6월 29일 제2차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되면서 분열

220) 《동아일보》, 1948년 5월 20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20일.

되기 시작하였다. 통일독립촉진회를 통해 표명한 공식적 입장은 제2차 남북연석회의에 불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인민당·신진당·사회민주당·민주독립당·근로대중당·근로대중당 등의 일부 성원들이 제2차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이었다.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북한의 제2차 남북연석회의와 북한에서의 선거에 참여한 12인에 대하여 정권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민족자주연맹은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내부의 분열로 세력이 약화된 데다가 남북연석회의 이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었던 김구의 암살, 대한민국정부의 중도파세력에 대한 공세의 강화, 그리고 한국전쟁 시 김규식의 납북 등은 결국 민족자주연맹의 통일운동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민족자주연맹의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정권에 참여하였지만, 더 이상 민족자주연맹의 깃발 아래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朴泰均〉

4) 남북지도자회의－연석회의와 남북협상

(1) 김구·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제의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공전되고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헌신해 온呂運亨이 백주에 암살당한 것은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한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남과 북에 분단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위시한 대소포위정책을 전개하여 냉전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그해 8월 29일 미국 국무장관 대리 러베트(Robert A. Lovett)가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V. M. Molotov)에게 미·소·영·중이 한국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그러한 분단정부 수립을 위한 수순밟기였다. 예상대로 소련은 러베트 제안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국제연합(UN) 총회가 열린 다음 날인 9월 17일 미국 국무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은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는 한국문제 유엔총회상정안을 41 대 6으로 가결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 쉬티코프(Штыков Т. Ф.)는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소련은 유엔에서 한국인 대표가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발언하여야 한다고 역습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을 43 대 0(기권 6)으로 가결하였다. 불과 며칠 안 된 11월 18·19일 북에서는 북조선인민회의가 열려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문제가 미국에 의해 유엔에서 논의되자 남과 북의 정치세력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李承晩과 韓民黨은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더욱 다그쳐 벌이면서 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을 공격하였다. 金九는 이승만과 단결·협력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추대 명분을 살려가고자 하였으나, 韓獨黨에서는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남과 북의 南勞黨·北勞黨은 한국문제가 유엔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였고, 미·소 양군 철퇴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방안을 지지하였다.

좌우·남북합작과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에 협력하여 통일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좌우합작운동세력은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짐에 따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이 모색하였다. 중도우파를 중심으로 한 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진영을 정비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일, 14개 정당과 5개 단체대표 및 개인이 참여하여 民族自主聯盟(이하 민련) 결성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준비위원회위원장 金奎植). 그리고 민련을 이끌어갈 핵심정당으로 10월 19·20일에 民主獨立黨(이하 민독당)이 결성되었다(위원장 洪命熹).

중도와 민족주의자들과 김구·한독당에서는 10월에 남북지도자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규식은 자신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처음 열릴 때부터 남북요인회담을 주장하였다고 말하고, 남·북에 있는 책임자들이 공사간 아무 형식을 취해서라도 곧 회담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김구·李始榮·呂運弘 등도 남북요인회담에 찬동하였다.¹⁾ 남북지도자회의는 이전부터 여운형 등이 주장하였던 것으로, 민족문제

해결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최후의 방안으로 제기되게끔 되어 있었다.

10월 15·16일간에 열린 한독당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남북대표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통일선거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18일에는 勤勞人民黨·社會民主黨·民主韓獨黨·民衆同盟·新進黨 등 5당에서 남북대표의 왕래를 주장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단이 서울을 떠난 21일 민련 선전국장李克魯는 남북요인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11월 2일부터는 한독당 초청으로 민독당·근민당 등이 모여 각 정당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정당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협의회는 11월 19일 김구의 요청에 의해 한독당에서 이 모임의 활동 보류를 결정함으로써 좌초되고 말았다. 김구가 이승만과 타협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12월 1일 김구는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12월 15일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체를 선언하였다. 5일 후인 20·21일에 15개 정당, 25개 사회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여 민련을 결성하였다. 주석에는 김규식이 추대되었다. 민련은 특정 계급이나 종파의 영도성을 떠난 진정한 민족통일기구를 조직할 것을 다짐하고, 남북통일 중앙정부의 조속한 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정치단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²⁾ 이로써 남북지도자회의의 추진체가 조직되었다.

1948년 1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불참) 등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일행이 한국에 옴으로써 남북지도자회의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잭슨(S. H. Jackson)을 대표로 한 임시위원단 제2분과에서는 1월 26일에 이승만과 김구를, 27일에 김규식 등을 만났다. 김규식은 임시위원단이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임무를 맡았고 단정수립의 임무를 맡지 않았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1월 26일 위원단을 만난 뒤 김구는 폭탄선언을 하였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소 양군 철군-남북요인회담-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1) 《새한민보》, 1947년 10월 하순호, 9쪽.

2) 《정당 사회단체 등록철》, 1950년 9월,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문화선전부(1989년 吳制道 영인), 772~773쪽.

제시하였다. 28일 김구는 유엔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① 신속한 총선거에 의한 한국의 통일된 완전 자주적 정부만의 수립을 요구하고, 그와 함께 ② 총선거는 인민의 절대 자유의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③ 북에서 소련이入境을 거절하였다는 구실로 유엔이 그 임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되고, ④ 曹晩植을 포함하여 남북의 일체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⑤ 미·소 양군은 즉시 철퇴하되, 치안은 유엔이 맡을 것, ⑥ 남북한인지도자회의를 소집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김구의 주장은 김규식·민련의 통일방안과 비슷한 것이었다. 김구가 이와 같이 방향전환을 한 것은 張德秀 암살사건으로 이승만·한민당과 더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유엔임시위원단이 입국하였기 때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추대 문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와 함께 임시위원단의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호의도 영향을 미쳤다. 임시위원단 임시의장 메논(K. P. S. Menon)은 1월 21일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하여 한국은 결코 분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 바 있었다. 김구가 통일정부 수립에 적극 나선 것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해 온 민족주의자로서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독당 상무위원회는 1947년 9월에 남북통일국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한 바 있었다.

김구가 남북요인회담을 주장하자 한민당 등으로 구성된 韓國獨立政府對策協議會(이하 한협)에서는 “소련은 조선의 김구에게서 그 충실한 대변인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라 하면서, “금후에는 김구를 조선민족의 지도자로 보지 못할 것이고, 크레믈린궁의 한 신자”라고 매도하였다.³⁾ 자신들이領袖로 모셔왔는데, 입장이 달라졌다고 소련의 앞잡이로 몰아세운 것이다.

1948년 2월 4일 民族自主聯盟(이하 민련) 정치위원 상무위원 연석회의에서는 남북요인회담 개최를 요망하는 서한을 북의 金日成·金料奉에게 보낼 것을 결의하였다. 이 서한은 김규식 한 사람보다 김구와 공동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바, 김구는 이에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3) 《동아일보》, 1948년 1월 30일(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6, 1973, 184~185쪽).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한은 민련의 申基彦이, 김두봉에게 보내는 서한은 한독당의 嚴恒燮이 기초하여 2월 16일부로 발송하였다. 이의 발송에는 유엔임시위원단도 협력하였다.⁴⁾

김규식과 김구는 유엔소총회에서 한국문제를 결의하기 이전에 북과 소련이 요인회담 제의에 반응해 줄 것을 바랐다. 이 시기에 요인회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면 유엔소총회에서는 일방적으로 한국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북과 소련이 요인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왔더라면,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었다. 북과 소련의 호응은 분단정부 수립을 막거나 연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북과 소련이 김구·김규식의 서한을 늦게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북요인회담을 김구 등이 제안하였다는 것은 이미 1월 말경에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끝내 북과 소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월 19일 유엔소총회가 열렸다. 이날 메논은 한국문제 해결방안 4가지 중 1안 남한총선거안과 3안 남북지도자회담에 관해서 비중을 두고 연설을 하였다. 그는 김규식이 두 개의 단독정부가 한국분단을 영구화하였다는 책임을 유엔임시위원단에서도 지게될 것임을 지적하였다고 말하고, 남북지도자회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정부 수립방안은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대표 잭슨은 남한선거는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캐나다 대표 패터슨(George S. Patterson)은 총회 결의는 분명히 한국전역의 총선거 실시를 명시하였으며, 그와 다른 과정을 택하는 것은 소총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26일 소총회에서는 미국의 남한총선거안을 찬성 31, 반대 2,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3월 1일 주한미국육군사령관 하지(J. R. Hodge)는 5월 9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선거는 기독교도들이 5월 9일은 일요일이라고 반대하여 5월 10일로 바뀌었다. 3월 1일 이승만 등 단정운동세력은 3·1기념행사에 뒤이어 정부수립결정안 축하국민대회를 열었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김구와 김규식은 크게 실망하였다. 김구는 남

4) 宋南憲, 〈김구·김규식은 왜 38선을 넘었나〉(《新東亞》, 1983년 9월호), 205~206쪽.

한의 단독선거 실시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산을 세계에 선고함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하고, 자신은 남의 단선도, 북의 ‘인민공화국’도 반대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는 3·1독립선언기념 별개 행사에서 남의 선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규식은 침통한 표정으로 남의 선거에는 불참하겠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불참가 불반대’를 표명하였다.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의 선거 참여의 길을 터놓은 것이었다.

김규식은 ‘불참가 불반대’를 표명하였지만, 통일운동은 계속 벌일 각오임을 밝혔다. 선거 참여와 통일운동을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은 것에서 유연성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갖는 이점을 알고 있었다. 비록 단결의 필요성과 명분론에 눌러 5·10선거에 민련 관계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도와 민족주의자들은 1950년의 5·30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김규식의 ‘불참가 불반대’ 표명이 있는 다음 날 언론은 그가 새로운 단계의 국민운동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였다.⁵⁾ 김규식은 3·1운동기념사에서도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것을 역설하였다. 3월 2일 김구·김규식·홍명희는 회동하여 행동통일문제를 숙의하였다. 3월 11일 남북협상으로 가는 또 하나의 다리가 놓여졌다. 김구·김규식·金昌淑·趙素昂·曹成煥·趙琬九·홍명희 등의 ‘7거두성명’이 나온 것이다. 7인의 원로는 이 성명에서 남의 총선과 북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정을 강경히 반대하였다. 특히 이 성명에서는 두 정부로의 분립은 반드시 동족상잔의 민족적 참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였다.

7거두성명은 통일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구·김규식·홍명희의 걸음이 바빠졌다. 민련과 한독당은 통일운동전선체의 결성을 위한 작업을 벌여나갔다. 3월 23일 민련에서 단선단정과 외국군 주둔을 반대하면서 애국세력의 총집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남북정치협상공작의 추진에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통일운동전선체 구성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

5) 《서울신문》, 1948년 2월 29일.

《조선일보》, 1948년 2월 29일(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422쪽).

하였다. 그런데 이틀 후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2) 북의 연석회의 제안

평양방송은 3월 25일 밤, 이날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가 유엔소총회 결의와 남조선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통일적 자주독립을 위한 전 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열 것을 결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민전은 북로당 등 9개 정당·사회단체 명의로 연석회의에 참가할 남의 정당·사회단체 17개를 거명하고, “기타 모든 단체를 초청한다”라고 덧붙였다. 17개 정당·사회단체에는 한독당 등 우익계나 근민당 등 중도와 정당 5개도 들어가 있지만, 11개가 좌파로 분류될 수 있었다. 또한 3월 27일 걸봉에 ‘김구·김규식 兩位先生 共鑑’이라고 쓰여 있는 서한이 김규식에게 도착하였다.⁶⁾ 김일성·김두봉이 연서한 이 서한은 25일로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결정과 미·소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거듭 파열시키었습니다”라고 김구·김규식을 질책하는 등 여러 군데서 두 사람을 비난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서한에서는 4월 초에 남북조선 소범위의 지도자연석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할 것을 제안하고, 그 회의에 참여할 명단과 토의할 내용을 기술하였다. 명단에는 남쪽 인사 15명, 북쪽 인사 5명이 들어있는데, 김구·김규식·조소앙·홍명희·金朋潛·이극로를 제외하면 모두 좌익계인 것이 특색이다. 이 서한은 자신들의 제안에 동의할 때에는 3월 말일까지 통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⁷⁾

북은 왜 3월 25일에야 반응을 보인 것일까. 최근에 나온 북의 한 저서에는 김일성이 1947년 10월 3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남북조선의 애국세력의 단결로 미제국주의의 민족분열책동을 파탄시키고 통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정당·대중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일 것을 제안하였고, 1948년 초부터 남북연석회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고 쓰여 있다.⁸⁾

6) 송남현, 앞의 글, 209쪽.

7) 김일성·김두봉 서한 전문은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대 출판부, 1997), 367~369쪽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새로운 자료가 나와야 할 것이다. 김구 등의 초청문제를 1948년 1월이나 또는 그 이전에 논의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은 ‘진지한’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3월 중순에도 김일성은 김구 초청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북에서 소련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쉬티코프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레베데프(Лебедев Н. Г.) 소장은 3월 10일자 비망록에서 김구·김규식의 서한과 관련하여 김일성한테 “김구에게 답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자 김일성이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아무런 수확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술하였다.⁹⁾ 3월 12일자 <레베데프비망록>에는 이날 김두봉이 김일성에게 전화하여 김구에게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김일성은 “국가적 사업은 한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서두르는가”라고 답변한 것으로 쓰여 있다. 남북지도자회의에 성의를 가진 것은 김두봉이었다. 그는 이날 김일성에게 무엇 때문에 항상 김구를 욕하느냐고 말하고, 김구가 단독선거에 찬성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빨리 만나야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⁰⁾ 김두봉은 김구·김규식이 평양에 왔을 때도 남북요인회담 등에 적극적이어서 소련당국의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다. <레베데프비망록>에는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3월 17일부터 검토된 것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이 비망록 3월 24일자에는 연석회의 대화일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¹¹⁾

북이 연석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은 유엔소총회의 결의에 의해 남한선거가 정해지고, 미군정에 의해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졌기 때문이었다. 북에서는 1947년 12월 작성된 임시헌법초안이 1948년 2월 6·7일에 열린 인민회의에 제출되어, 2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인민토의에 부쳐졌다. 또한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북과 소련은 <레베데프비망록> 1월 14일자 기록에 쓰여 있는대로, 당분간 헌법시행을 보류하고 미국측의 분단계획을 폭로하며, 신헌법에 의한 선거는 남보다 늦게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

8) 金昌鎬·姜根照, 《朝鮮通史》하(평양: 外國文出版社, 1996), 46~47쪽.

9) <레베데프비망록> 17(《매일신문》, 1995년 2월 11일).

10) <레베데프비망록> 17(《매일신문》, 1995년 2월 11일).

11) <레베데프비망록> 17·18(《매일신문》, 1995년 2월 11일·14일).

고 있었다.¹²⁾ 그런데 3월 17일 미군정이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여 선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이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연석회의가 3월 25일 제안된 것이다. 북은 처음에는 연석회의를 남의 단선단정 반대에만 연결시켜 열려고 하였으나, 점차로 그것이 북의 정부수립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남쪽의 김구·김규식 등 남북협상세력은 북의 제의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였다. 김구·김규식한테 보낸 서한은 상쾌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북이 일방적으로 장소와 일시를 잡았고, 참가단체나 인물도 좌익이 많아서 통일 방안을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북의 연석회의 제안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였다.

북이 통지해줄 것을 요구한 날짜인 3월 31일 김구와 김규식은 〈感想〉이라고 하여 제목이 대단히 시니컬한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두 김은 북의 제의가 미리 다 준비된 잔치에 참례만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자신들이 남북회담을 요구한 이상 여하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의에 참가할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하여 연락원을 보내겠다고 통고하였다.

한편 북의 제의 이전에 통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종의 조직을 추진하였던 민련·한독당·독립노동당 간부들은 3월 26일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발기회를 갖고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4월 3일 한독당·민독당 등 백여 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결성대회를 열고, 강령으로 ① 통일독립운동자의 총역량 집결을 기함, ②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꾀함, ③ 민족 강토의 일체 분열공작을 방지함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대회에서 김규식은 전례없는 열변으로 조국의 위기를 통탄하며 비장한 소신을 피력하여 주목을 받았다.¹³⁾

12) 尹慶燮,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 배경과 그 성립〉(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6), 84쪽.

13) 《조선일보》·《경향신문》, 1948년 4월 6일(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13~

김구·김규식은 安重根의 4촌인 安敬根과 민련 비서인 權泰陽을 북에 보냈다. 두 사람은 4월 7일 서울을 떠나 다음 날 밤 김일성·김두봉을 만나 ① 4·14회담을 연기할 것, ② 참가인원을 광범위하게 할 것, ③ 이번 회담에서는 북의 제안을 백지로 환원하여 남북통일문제에 한해서만 협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던 바, 북의 두 김은 이 제안을 전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4월 13일 京橋莊회의에서 김구는 북행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김규식은 행동을 보류하고 추후로 떠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규식은 무조건 북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북에 이용당해서도 안되지만, 남북지도자회의는 구체적인 통일의 원칙이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규식은 남북회의 참여조건으로 평양회담을 예비회담으로 하고 본회담은 서울에서 열 것, 북에서 100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남의 200명의 대표와 회합할 것 등 6개항을 마련하였다.¹⁴⁾ 4월 14일 민련은 정치·상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6개항을 ① 독재정치 배격, ② 독점자본주의를 배격하되 사유재산제도 인정, ③ 전국적 총선거로 통일중앙정부 수립, ④ 외국에 군사기지 제공하지 말 것, ⑤ 외군 조속 철퇴에 관하여 철퇴 조건·방법·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 등의 5개항으로 수정하였다. 김규식의 6개항은 북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5개항은 해석이 문제도 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날 문화인 108명이 <남북협상을 성원함>이란 글을 발표하여 남북협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런데 김규식은 북에 보낼 ‘특사’를 5개항에 합의한 14일이나, 민련에서 북에 보낼 대표로 김규식 등 18명을 선출한 15일에 보내지 않고 18일이 되어서야 파견하였다. 그것은 명백히 19일부터 열릴 남북조선계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무시하려는 조치였다. 김구는 이미 4월 15일 기자들과 함께 만찬회를 갖고 북행을 앞둔 심경을 토로한 바가 있었고, 이날 신문은 김구·홍명희 일행의 출발 준비가 완료되어 늦어도 연석회의 개최 전날인 18일까

715쪽).

14) 도진순, 《1945~48년 우익의 동향과 민족통일정부수립운동》(서울대 박사논문, 1993), 213~214쪽.

지는 북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는데, 김구가 19일에야 떠난 것은 김규식의 의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구와 일부 한독당 인사들은 경교장을 에워싼 극우청년·학생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경교장 뒷문을 통해 북으로 갔다. 홍명희도 이날 북행하였다. 다음 날 조소앙 등 한독당 인사와 일부 민련 인사가 북으로 떠났다. 김규식은 4월 19일 밤 10시 평양방송으로 김일성이 5개항을 수락하였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21일에 남북정치지도자회의에 5개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천명하고 그것을 공개하였다. 그는 이날에야 민련의 주력부대와 함께 평양으로 향했다. 이날 정오를 기해 남북지도자회의 참가자들의 북위 38도선 월경이 금지되었다.¹⁵⁾

(3) 연석회의와 남북협상

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4월 19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는 김두봉의 사회로 연석회의예비회의가 남과 북의 좌익 및 중도좌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에 김일성은 ① 미제의 앞잡이인 유엔조선위원단을 몰아내고 유엔총회 및 소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것, ② 단선단정을 반대할 것, ③ 미·소 양군의 즉시 동시 철퇴를 실현시킬 것, ④ 양군 철수 후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등 4개항을 회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에 46개 단체 대표 5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주석단 등을 선출하고, 정치정세 및 남의 단선단정 반대투쟁 대책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김구 일행의 북행 소식을 듣고 김일성의 제의로 20일은 휴회하기로 결의하였다.

김구는 4월 20일 김두봉의 내방을 받고 그의 안내로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김일성을 예방하였다. 이 회동에서 김일성은 김구의 연석회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구는 연석회의 주석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계획대로 회의를 하되 자신은 김일성과 단독회담을 하고 싶다고 역설하였다. 김구는 북의 헌법이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15) 《동아일보》, 1948년 4월 24일.

김일성은 다음 날에도 김구가 연석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4월 21일 朱寧河가 연석회의 대표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를 한 뒤, 김일성이 〈북조선 정치정세〉를,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白南雲이 〈남조선의 현정치정세〉를, 남조선노동당의 박헌영이 〈남조선 정치정세〉를 보고하였다. 모두다 단선단정을 철저히 파탄시키고 외군을 즉시 동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의 결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구는 4월 21일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평양 신문기자단 회견에서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우리의 갈 길은 민족자결정신에 의하여 독립문제를 완성하자는 것뿐이며, 전 민족의 운명을 걸고 평양모임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⁷⁾

4월 22일 연석회의는 백남운의 사회로 토론에 들어갔다. 상오 12시 45분에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김구·조소앙·조완구 등이 참석하였다. 김일성의 제의로 김구·조소앙·조완구·홍명희 등 4명이 주석단에 보선되었고, 김구와 조소앙·홍명희가 축사를 하였다. 김구는 약 5분간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통일독립을 전취할 大計를 商討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단선단정 분쇄를 최대의 임무로 삼자고 호소하였다.¹⁸⁾ 김구가 말한 단선단정 반대는 북의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崔成福특파원이 연석회의가 협동적·평등적으로 되지 않은 점을 묻자 “나도 그 점이 우려되오. 아무튼 나는 남조선 단정단선도 반대려니와, 북조선의 그것도 반대이고,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이고 이야기해 볼 작정이오”라고 말한 것에서¹⁹⁾ 확인할 수 있다. 김구 등의 축사·토론과 혁명유가족학생들의 축하가 있는 후 홍명희·嚴恒燮을 결정서 기초위원으로 보선하였고, 이어서 또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내

16) <레베데프비망록> 21(《매일신문》, 1995년 2월 21일).

17) 《조선일보》, 1948년 4월 22일(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821~822쪽).

18) 白凡思想研究所編, 《白凡語錄》(思想社, 1973), 263~264쪽.

19) 최성복, <평양 남북협상의 인상>(《新天地》, 1948년 4월호), 67쪽.

정된 대표들이 대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규식은 22일 오전 11시경 김일성·김두봉의 예방을 받았다. 김두봉은 연희전문학교에서 김규식한테서 배웠다. 김규식은 미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항의하고 소회의(요인회담 등을 가리킴-필자)를 시작하자고 제의하였다.²⁰⁾ 김규식은 청병을 하고 연석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4월 23일은 金元鳳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여성대표들의 축하가 있는 뒤, 결정서 기초위원을 대표하여 민주독립당 대표 홍명희가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를 낭독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민련의 이극로는 <전 조선동포들에게 격함>을 읽었고, 그와 함께 <사회주의 소비트연방공화국정부와 북미합중국정부에 보내는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의 요청서>도 채택되었다.

북조선노동당·남조선노동당·한국독립당·민족자주연맹 등 56개 정당·사회단체가 서명한 <전 조선동포들에게 격함>에서는 미국을 또다시 식민지 노예로 얹어매려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제국주의자’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격렬히 비난하고, “남북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분열하는 어떠한 단독정부의 수립도 단연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²¹⁾ 미·소 두 나라 정부에 보낸 <요청서>에서는 “유엔조선위원단의 非法的이며 강압적인 부당한 선거술책을 즉시 정지시키고 급히 물러가게 할 것을 요구”하고, “조선 내에서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조선인민에게 자기 손으로 자기 국내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주자는 소련정부의 제의를 실천”하는 길만이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요청서>에 서명한 정당 관계자가 당대표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곧 북조선노동당(대표 김두봉)은 주영하가, 남조선노동당(대표 허헌)은 박헌영이, 한국독립당(대표 김구)은 엄항섭이, 민족자주연맹(대표 김규식)은 송남헌이 서명을 한 것이다.²²⁾

연석회의의 결산으로 나온 문서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20) <레베데프비망록> 22(《해일신문》, 1995년 2월 13일).

21) 《全朝鮮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報告文及決定書》, 41~46쪽(金南植·李庭植·韓洪九 편,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3, 돌베개, 1986, 299~301쪽).

22) 도진순, 앞의 책, 270쪽. <요청서>에 서명한 정당·사회단체 이름은 이 책의 388~389쪽 참조.

명의로 나온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이다. 이 문서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들과 야합한 민족반역자 친일파들의 음흉한 背族亡國의 시도를 반대하며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의 기만적 단선 회극을 반대하여 꺾기한 남북조선 인민들의 反抗을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한 가장 정당한 애국적 구국투쟁이라고 인정한다. 우리 조국을 분열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는 것을 容許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들은 자기의 전 역량을 총집결하여 단독선거배격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조선단독선거를 파탄시켜야 할 것이며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하고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全朝鮮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報告文及決定書》, 38~39쪽; 金南植·李庭植·韓洪九 편,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3, 돌베개, 1986, 297~298쪽).

23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25일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경축 군중대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북조선인민회의회의실에서 남북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위한 김일성 인민위원회위원장의 초대연이 있었다. 26일에는 〈전 조선동포들에게 격함〉에 쓰여 있는 대로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위원장 허헌)가 결성되었다.

나. 남북요인회담 및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김규식과 김구는 평양에 와 남북요인회담을 가질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구는 연석회의에 잠깐 나가 인사말을 했을 뿐이고 김규식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과 소련측은 김규식과 김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요인회담을 열 것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은 통일국가 수립의 방안을 협상하기 위해 북행한 것인데, 연석회의는 협상을 하자는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남쪽에서 남북협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요인회담은 4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열렸다. 4월 24일 저녁 김두봉의 초청으로 김구·김규식·조소앙·조완구·홍명희와 김일성 등이 만났을 때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26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간에 통일민족국가 수립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담에서 김규식이 4월 21일 북행 직전에 발표한 5개 원칙을 북의 지도자들이 찬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일성은 4김회담도 연석회의에서처럼 주로 단선단정 반대에 주력하려고 하였지만, 김규식 등 두 김은 ① 남북통일에 대한 남북지도자의 공동성명, ② 남북통일을 위한 공동대책기관의 수립, ③ 남북통일운동을 위한 조직문제의 토의를 제기하였다.²³⁾ 북은 남에 이어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으므로 2항과 3항, 특히 2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김구·김규식·조소앙·조완구·홍명희·김봉준·이극로·엄항섭(이상 민족주의자)·허헌·박헌영·백남운·김일성·김두봉·崔庸健·주영하(이상 좌익) 등 15인이 회동하여 남북지도자협의회가 열렸다.

4월 28일에는 김규식과 김일성의 개별회담이 열렸다. 김규식은 단선반대뿐만 아니라, “통일 조건을 창조하는 미래의 초석이 될 남북연합기구 창설”을 주장하였다.²⁴⁾ 26일에 제의한 2항을 가다듬어 다시 제의한 것이었다. 4김회담·2김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것은 김규식의 5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남측에서 김규식의 비서 권태양이, 북측에서 연석회의준비위원장 주영하가 대변인으로서 공동성명서 초안을 다듬어갔다.

4김회담 등 요인회담의 공동성명서를 어떠한 형식으로 발표할 것인가도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4월 30일 먼저 4김회담에서 공동성명서를 승인한 뒤 곧바로 열린 15인 남북지도자협의회에서 다시 통과시킨 다음 북조선노동당·남조선노동당·한국독립당·민족자주연맹 등 42개 정당·사회단체가 서명하였다. 대외발표용으로 명의를 빌린 셈이었다. 이 공동성명서는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명의로 되었다.²⁵⁾ 공동성명서 4개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3) 《서울신문》, 1948년 5월 3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3일(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7, 14~15쪽).

24) <레베데프비망록> 20, 《부산일보》, 1995년 3월 24일(도진순, 앞의 책, 274쪽에서 재인용).

25)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보고문 及 결정서》, 54~55쪽(김남식 등 편, 앞의 자료총서 13, 305~306쪽).

도진순, 앞의 책, 390쪽.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외국군대는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 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외국이 철거한 이후 내전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들 大 정당·사회단체들 간에 성취된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수립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3. 외국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下記 제 정당들의 공동명의로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과 정치·경제·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서 일반적·직접적·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며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全文임).
4. 남조선 단독선거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성명서에 서명한 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全朝鮮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報告文及決定書》, 54~55쪽; 金南植·李庭植·韓洪九 편,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3, 둘째권, 1986, 905~906쪽).

공동성명 1항은 김구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도 주장하였지만 표현상 북측 입장이 더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 1항은 김규식이 1947년 9월 슈티코프가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할 때부터 역설한 것, 곧 남한의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2항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북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이 부분은 북이 하고 싶지 않은 양보였다. 이 성명서에는 외국철수 후 유엔 등에 의한 전쟁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 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규식은 특별히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2항과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밖에 처리되지 못하였다.

남북통일국가 수립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3항이다. 김구와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이 북에 온 것은 주로 이 3항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은 곧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 3항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때까지 북은 외국철수 후 막연히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만 했을 뿐이었다. 북이 3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4월 29일 김일성이 가진 기자단회견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야기했는데, 이 3항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²⁶⁾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김일성은 단선단정 반대, 외군철수에 주력하였고, 구체적인 통일방안 채택은 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3항과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남북총선거에 의해 수립될 입법기관에서 조선헌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4월 28·29일—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열린 북조선인민회의특별회의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헌법원안을 찬동한다는 형태로 사실상 승인한 헌법초안을²⁷⁾ 부정하는 행위였다.

공동성명 제4항은 김구·김규식 등도 주장하였지만, 강한 어조으로 표현되었다. 이 4항은 김구·김규식 등 남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북의 단선단정도 거부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제3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4기회담에서는 38선 이남에 주로 위치한 연백평야에 수리조합물을 다시 내려보내는 문제, 남에 전기를 계속 송전하는 문제, 曹晩植의 월남 허용 문제, 만주의 여순에 있는 안중근의 유골 이장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김일성은 앞의 두 가지는 들어주겠다고 했으나,²⁸⁾ 송전 등은 얼마 후 중단되었다.

평양에서는 메이데이행사에 이어 5월 2일 대동강가 쉼에서 4월 평양회의를 경축하는 연회가 열렸다. 김구·김규식·김일성 등 지도자협의회에 참석한 15인과 김구·김규식을 안내한 강양욱 등이 참석하였다.²⁹⁾ 5월 4일 김구·김규식 일행은 평양을 출발하여 5월 5일 개성을 거쳐 서울에 돌아왔다.

(4) 평가와 의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5·10선거를 主務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평양남북지도자회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5월 3일 남북협상에 대하여 장문의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성명에서 “이 회합에 유일한 예외는 김구씨와 김규식 박사가 참가한 것인 바, 현재

26) 최성복, 앞의 글, 68쪽 참조.

27) 윤경섭, 앞의 글, 91~94쪽.

28) 송남현, 앞의 글, 220쪽.

29)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중앙일보사, 1993), 361쪽.

까지 양 김씨를 존경하여 오던 남조선 내 동지들은 자기의 지도자가 애국적이긴 하나 無見識한 비공산주의자들을 끌어넣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공산당의 모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통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여, 두 김이 공산당의 모략에 빠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남조선 내의 유권자들의 90% 이상이 (선거인 명부-필자) 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5·10선거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승만은 4월 30일 발표된 공동성명서가 국내에 알려지자 5월 3일 담화를 발표하여, “남북요인회담에 대하여서는 내가 기왕에 설명한 바 있으므로 우리의 既定 계획에 조금도 변동이 있을 리 없다”고 말하여, 공동성명서가 단정수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 담화에서 “그러므로 소위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나는 중요시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하였다.

서울에 돌아온 김구·김규식은 5월 6일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 공동성명에서 남북지도자간에 남조선 단선단정 반대와 외군철퇴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북조선당국자도 단정은 절대 수립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摘示하였다. 그리고 공동성명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제2항-필자) 남북이 동족상잔에 빠지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고 하여, 4·30공동성명서가 남과 북의 단정 수립문제,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구체적 방안의 마련, 전쟁과 그로 인한 동족상잔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 국제협조문제 등 수개 문제에 자신들의 종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남북지도자들이 자주 접촉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남북지도자회의가 유엔소총회 이전에 열렸더라면, 미국이 세워놓은 단정수립 스케줄에 어떠한 형태로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지만, 5·10선거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김규식 등 북행한 민족주의자들의 상당수는 이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은 남에서의 단선단정 반대운동을 고무시켰고, 남의 친일파가 포함된 친미극우세력에 의한 단정운동·도덕성에 타격을 가하였다. 또한 그것은 북의 정부수립에 상당히 정통성

이나 도덕성을 부여하였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북의 단정수립도 분명히 반대하였지만, 좌익이 아니더라도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남의 정부수립에는 비판적이었어도 북의 정부수립은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심지어 북의 정권은 단독정부가 아니라는 사고도 없지 않았다.

4월 평양에서 열린 연석회의와 남북협상 곧 남북요인회담은 명확히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연석회의는 남의 단선단정 반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북측과 소련측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4김회담이 중심이었던 남북요인회담은 북이 마지못해 응했던 것이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연석회의는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남과 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연대집회 같은 것으로,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의 연대를 최대한 시위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북측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최대한 부각시켰다.³⁰⁾

남북요인회담은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실현될 수 없더라도, 또 북측의 입장과 국제관계 등으로 여러 사항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통일독립’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 동족상잔의 전쟁을 명시적으로 막아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두 김 등 민족주의자들의 북행과 남북·좌우합작을 지지해 온 좌파 인사들의 노력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방안을 마련하려 할 때 여러 면에서 격려와 참조가 될 수 있다.

북측은 연석회의와 남북협상이 혼동되고 있는 속에서 당장에는 남의 단선단정 반대와 자신들의 정권수립에 두 회의를 크게 활용하였지만, 공동성명서 2항·3항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해서 곧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대다수 민족구성원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는 행위였다.

남북협상은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만남이었다. 단정운동세력은 북과의 대결 위주로 나아가고 있었고, 북측 또한 비슷한 사고를 하였는데,

30) 丁海龜,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과정 연구 1947. 5.~1948. 9》(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201~203쪽.

남북협상은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기본과업과 함께 남과 북의 긴장과 갈등, 전쟁-동족상잔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4·30공동성명서는 해방 3년 동안에 남과 북의 주요 지도자가 통일정부 수립문제에 합의를 본 유일한 문서다.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한국인은 분단을 막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까.

〈徐仲錫〉